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 현 준
허 문 영
김 병 로
배 진 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 현 준
허 문 영
김 병 로
배 진 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인 쇄 2006년 12월 26일

발 행 2006년 12월 26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 전현준 ; 허문영 ; 김병로 ; 배진수.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06)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74-4 93340 : ₩1000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6002840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3
2. 분석의 틀 및 방법론	9
3. 선행연구의 결론	18
II.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지표별 위기수준 평가	23
1. 이념분야 평가	25
2. 엘리트분야 평가	80
3. 경제분야 평가	116
4. 통제분야 평가	136
5. 대외관계 분야 평가	185
III. 북한 사회주의체제 내구력 평가 및 전망	203
1. 종합 평가	205
2. 전망	213
참고문헌	219
부록: 설문지 면접 체크리스트	225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7

표 목 차

<표 I-1>	지표 및 측정항목	8
<표 I-2>	새터민의 사회경제적 배경	15
<표 II-1>	일상생활에서 김일성주의 준수 여부	25
<표 II-2>	집단우선주의 준수 여부	32
<표 II-3>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에 대한 인식	38
<표 II-4>	김정일-김정일아들 부자세습에 대한 인식	39
<표 II-5>	김정일의 지도자 자질	48
<표 II-6>	남북한 체제 비교	52
<표 II-7>	미래에 대한 희망 여부	59
<표 II-8>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유무	64
<표 II-9>	자주성 원칙에 대한 긍지감 유무	70
<표 II-10>	자주성원칙의 기여도	75
<표 II-11>	간부의 지위에 대한 긍지감	81
<표 II-12>	간부의 부정·부패 정도	86
<표 II-13>	간부간 집단갈등 유무	92
<표 II-14>	일반기관과 권력기관과의 갈등 유무	97
<표 II-15>	연고주의 존재 유무	102

<표 II-16> 상부지시의 말단조직으로의 전달 정도	107
<표 II-17> 하부조직에서의 규칙 변용 실태	111
<표 II-18> 비공식 부문의 점유 정도	116
<표 II-19> 식생활 정도	122
<표 II-20> 주거 및 생필품 여건	126
<표 II-21> 북한의 경제 지표	131
<표 II-22> 북한의 대남·대중·대일 의존도 추이	135
<표 II-23> 거래 유형별 남북 경험 추이	135
<표 II-24> 강제기구의 주민통제 정도	136
<표 II-25> 강제기구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정도	141
<표 II-26> 여행 빈도	146
<표 II-27> 새터민 입국 현황('06년 5월 현재)	152
<표 II-28> 일상생활에서의 불만표출 정도	153
<표 II-29> 체제비판 세력 존재 여부	159
<표 II-30> 최고위층 비판 행위 존재 여부	163
<표 II-31> 자본주의적 문화 존재 여부	167
<표 II-32> 종교활동 존재 유무	172
<표 II-33> 무속활동 존재 유무	174
<표 II-34>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의 존재 유무	181
<표 II-35> 남한 사정 인지 여부	186

<표 II-36> 중국 변화실태에 대한 인지 여부	191
<표 II-37>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인지도	196
<표 III-1> 각 항목별 위기 지수	205
<표 III-2> 김정일 정권 유지 이유	214
<표 III-3> 김정일 정권 유지 기간	215

그림 목 차

<그림 II-1> 일상생활에서 김일성주의 준수 여부	25
<그림 II-2> 집단우선주의 준수 여부	32
<그림 II-3>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에 대한 인식	37
<그림 II-4> 김정일-김정일 아들 부자세습에 대한 인식	39
<그림 II-5> 김정일의 지도자 자질	47
<그림 II-6> 남북한 체제 비교	52
<그림 II-7> 미래에 대한 희망 여부	58
<그림 II-8>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유무	64
<그림 II-9> 자주성 원칙에 대한 긍지감 유무	69
<그림 II-10> 자주성 원칙의 기여도	75

<그림 II-11> 간부의 지위에 대한 긍지감	80
<그림 II-12> 간부의 부정·부패 정도	86
<그림 II-13> 간부간 집단갈등 유무	92
<그림 II-14> 일반기관과 권력기관과의 갈등 유무	97
<그림 II-15> 연고주의 존재 유무	102
<그림 II-16> 상부지시의 말단조직으로서의 전달 정도	107
<그림 II-17> 하부조직에서의 규칙 변용 실태	111
<그림 II-18> 비공식 부분의 점유 정도	116
<그림 II-19> 식생활 정도	121
<그림 II-20> 주거 및 생필품 여건	126
<그림 II-21> 강제기구의 주민통제 정도	136
<그림 II-22> 강제기구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정도	141
<그림 II-23> 여행빈도	146
<그림 II-24> 일상생활에서의 불만표출 정도	153
<그림 II-25> 체제비판 세력 존재 여부	158
<그림 II-26> 최고위층 비판행위 존재 여부	162
<그림 II-27> 자본주의적 문화 존재 여부	167
<그림 II-28> 종교활동 존재 유무	172
<그림 II-29> 무속활동 존재 유무	174
<그림 II-30>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존재 유무	180

<그림 II-31> 남한 사정 인지 여부	186
<그림 II-32> 중국변화 실태에 관한 인지 여부	191
<그림 II-33>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인지도	195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인 10월 15일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김정일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봉쇄를 단행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현재 학계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탈북, 내부 통제 이완 등의 변화들이 곧 붕괴의 조짐이라고 판단하면서 붕괴의 조건과 시점을 예측한다. 또 다른 부류의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것들을 붕괴의 징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이나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북한도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1995년 대홍수 이후 수백만 명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방치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김정일 정권은 물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예측한 학자들이 있었다. 실제로 식량난이 한참 심각했던 1997년 말, 김정일 위원장 자신도 “북한이 현재 무정부상태가 되었다.”라며 당간부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상황이 대규모 식량폭동이나 반정부 시위, 대량난민 사태의 양상으로 아직까지 발전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김정일 정권 특히 북한체제를 붕괴냐 아니냐와 같은 이분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 김정일 정권의 위기나 ‘붕괴’에 대한 예측이 몇 차례 있었다. 첫째, 1998년 1월 21일 작성된 미국 CIA 정보보고서(Intelligence Report)를 들 수 있다.¹ 동 비밀보고서는 “북한이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지만, 길어봐야 5년 이상 못 버틴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03년이 되면,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예상 시나리오로 3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상황에서 제한적 남침으로 이어지는 상황, 두 번째 가정은 북한 내 쿠데타와 내전, 세 번째 가정은 동·서독 통일의 경우처럼 남한에 의한 평화적 통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물론 김정일 정권은 붕괴되지 않았다.

둘째, 2002년 9월 19일 발표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다.²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정책의 청사진(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동 보고서는 1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 연구그룹을 구성, 다양한 통일시나리오를 토대로 통일한국의 모습을 분석한 뒤, 미국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통일시나리오로 북한 붕괴, 평화적 통합, 전쟁의 3가지 방식을 가정하고, 최종 결론으로는 어느 경우에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2004년 5월 29일 공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다. 『중국 국방력에 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 and Republic of China)』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이 중국으로의 난민유입을 막는 능력 제고와 더불어 북한 김정일 정권 붕괴에 대비하여 국경에 군을 배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¹ *Intelligence Report* (CIA, 21. January, 1998), pp. 12~15.

² *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CSIS, August. 2002).

넷째, 2005년 6월 5일 공개된 미국 RAND연구소 보고서다.³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3가지 통일방식(합의, 흡수, 무력)을 제시하고, 통일비용으로 최소 500억 불에서 최대 6,700억 불을 예상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질서 재구축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게 될 경우, 한반도 통일은 몇 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2006년 2월 발표된 미 CSIS 보고서다. 동 보고서는 북한의 ‘필연적 붕괴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북한 붕괴가능성의 원인으로서는 급속한 경제력 쇠퇴와 지도력 상실, 광범위한 기아, 군사쿠데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 등이 예시되고 있다.

여섯째, 지난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등,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UN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제재조항을 반대한 것은 북한의 붕괴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⁴ 중국은 북한지도부의 붕괴와 국가 통제력의 부재는 곧바로 2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중국 동북부로 유입되는 사태가 초래되어 중국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무장 군인들을 투입하여 난민 유출을 막는 동시에 친중 정권을 수립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곱째, 미·중간에는 이미 김정일정권 이후 북한에 친중정권이

³ Charles, Wolf, Jr. · Kamil Akramov, *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Rand: 2005).

⁴ 『세계일보』, 2006. 7. 18.

등장하여 완충지대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다.⁵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들은 경험적 자료에 의해 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편적 판단이나 선동적 주장에 지배된 감이 없지 않다. 소수의 탈북자나 이른바 북한고위층이 발언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어떻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군부에 얽혀있다는 주장이라든가, 북한주민들은 아무도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식의 선동적인 발언들이 나오는가 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능력이나 당과 군부의 통제력, 주민들의 사상의식을 과대평가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북한이 곧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북한체제가 강력하게 느껴져 그리 쉽게 붕괴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이 같은 상반된 판단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상반된 관측이 대북한 정책에서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일정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는 대북한 정책은 국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북한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적 변수는 각 주변국의 비교적 뚜렷한 이익과 관계에 바탕하고 있는 까닭에 거시적 관점에서 대체로 예측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 변수는 자료와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예측이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북한변수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정도가 크

⁵ 『중앙일보』, 2006. 7. 27.

면 클수록 통일 또는 대북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혼선의 정도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북한의 장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보와 자료의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최고위층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아직도 태부족이긴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 내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정되나마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북한의 장래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분석들은 단편적인 지표들에 의존하거나 극히 제한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이 붕괴 아니면 존속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성급한 결론을 도출해냄으로써 연구대상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체제에 대한 단편적 판단을 지양하고 종합적·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과학적 분석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⁶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과 내구력을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해보고자 한다. 위기수준과 내구력은 권력엘리트(power elite), 정권(regime), 체제 혹은 국가(system or state)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정권'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연구는 정권 위기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표 I-1>에서 처럼 5개 분야의 15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36개 측정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지난 10년(1996년~2005년) 동안 북한의 김정일

⁶ 비교적 종합적인 분석서는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5)를 참조.

정권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정권의 내구력을 전망하고자 한다.

<표 I-1> 지표 및 측정항목

분야	지표	측정항목
이념	공식이념의 기능	일상생활에서 구속력 집단주의 명제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 실질적 대가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자주성 원칙에 대한 대가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엘리트	엘리트의 사기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금지감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엘리트 갈등	집단적 갈등 유무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관료기구의 기능	상부지침의 침투력 하위조직의 자의성
경제	사적 경제영역	사적 경제영역의 비중
	생활수준	식생활, 생필품 및 주거지 GNI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무역, 외채
통제	사회통제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이동 탈북자 증감추이
	정치적 반대	불만표출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체제비판 행위
	반문화의 형성	청소년 문화, 종교활동 전통적 집단의식
대외관계	외부정보의 유입	남한변화의 인지도 중국변화의 인지도
	안보자원의 확보	곡물 생산량과 외부유입량 원유 도입량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2. 분석의 틀 및 방법론

가. 분석 수준으로서의 “정권”

북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내구력을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분석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널리 사용하는 붕괴(collapse)라는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단위를 논의해 보려 한다.

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회정치적 변화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어온 이 용어는 무엇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의 영역 또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용어라고 하겠다. 예컨대, 붕괴라는 용어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김정일을 둘러싼 엘리트 집단의 교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체제의 총체적 해체를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내구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변화 혹은 붕괴의 다양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된다.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하면, 변화는 세 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권력엘리트, 정권, 총체로서 체제가 그것이다.⁷

첫째,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변화로서 대체로 체제 속성의 변화는 없다. 권력엘리트들은 선거나 지명과

⁷ David Easton,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er*, Vol. 3 (1973), pp. 269~301.

같은 제도화된 방식에 의해서 혹은 집단 간의 갈등을 통해서 교체될 수 있다. 변화의 수단이 어떤 것이든 간에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체제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권의 변혁은 권력엘리트의 교체보다도 포괄적인 것으로서 체제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양식에 있어서 심대한 수정을 동반한다. 권력엘리트가 교체될 뿐만 아니라 정권의 구조가 변화된다. 대중동원과 집단적 폭력을 수반하는 고전적 의미의 혁명은 이같은 정권변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총체적 체제의 변화는 가끔 발생하는 변화로서 위의 두 가지 변화보다 포괄적이다. 이 변화는 체제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분업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때⁸ 혹은 느슨하게 연결된 두 체제의 구성원들이 보다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형성하기로 동의할 때 또는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무력으로 병합할 때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체제의 총체적 변혁이란 체제의 해체(disintegration) 또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인접체제들의 통합(integration)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같은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신생독립국가의 형성, 소련의 해체, 독일의 통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정권(regime)은 체제(system)보다는 약간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하나의 체제로 볼 때, 그것은 파슨즈(T. Parsons)가 설명한 사회체제(social system)에

⁸ 이같은 변화의 이론적 전형은 혁명을 이데올로기가 다른 복수공동체(multiple communities) 사이의 경쟁 및 갈등으로 보았던 비교역사사회학자 톨리(Charles Tilly)의 이론일 것이다.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78).

해당한다. 파슨즈에 따르면 사회체제는 일반 행위체제의 하부체제로 존재하며 4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된다.⁹ 경제, 정치, 사회공동체, 유형유지 또는 신뢰체제가 그것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하나의 사회체제로 간주할 경우, 사회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여 배분하는 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배제하고 사회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원리가 아닌 계획성을 위주로 운영한다.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치는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노동당 1당 독재로 운영된다.

사회공동체는 물질적 인센티브보다는 도덕적 교훈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필요와 노력에 따른 분배의 배합, 자유보다는 평등의 원칙을 중시한다. 유형유지체제는 문화전통에 의해 사회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의해 지속되며 북한 사회주의는 혁명성과 전통, 주체사상 등의 가치를 통해 신뢰체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골간을 구성하는 소유형태의 변화나 1당 독재, 분배원칙의 변화와 같은 이른바 체제전환 혹은 체제변환(system transformation)과 같은 거시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거대변화는 주로 혁명이나

⁹ Talcott Parsons,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pp. 4~28. 그는 인간행위를 설명하는 거대체계로서 인간의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구성체인 행동유기체(behavioral organism), 각 개인의 욕구와 동기의 복합체인 인성체제(personality system), 상호작용하는 개인행위자들의 규범체계인 사회체제(social system), 그리고 가치와 상징들의 체계인 문화체제(cultural system)를 들고 있다.

전쟁, 또는 흡수통일과 같은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하부적인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특징짓는 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등 5개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및 측정항목을 고안했다.

변화의 수준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명제가 있다. 첫째, 총체적 체제의 변화는 세 가지 수준의 변화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으로서 정권 및 체제변혁을 동반하게 된다. 여기에서 체제변혁은 정권 교체보다 고차적이다.

둘째, 세 가지 수준의 변화는 경험적인 세계에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낮은 수준의 변화는 간혹 높은 수준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도상국가에서 군부의 집권이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으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기존 체제가 추구하던 가치와 목표들이 버려지고 정권과 일반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양식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계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정권이 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권변동이 총체적 체제의 해체 또는 새로운 통합된 체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명제가 두 번째 명제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체제의 위계질서가 체제접근에서 중요한 원리인 만큼,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가 높은 수준의 변화로 계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requisite)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필수요건이란 “높은 수준에서의 구조적 변형(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성숙이다. 즉, 높은 수준에서의 구조적 변형이 선행되지 않으면(그것이 아무리 점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가 높은 수준의 변화로 발전할 수 없다.¹⁰

북한의 내구력 또는 붕괴를 설명하는데 이같은 논의를 적용해 보자. 첫 번째는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엘리트 집단의 축출에 한정될 것이다. 김정일의 기반이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의 유산 위에 놓여있는 만큼 그들 엘리트 집단의 축출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체사상 또는 선군사상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사회주의체제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변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체제의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매우 급격한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의 총체적 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북한의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는 높은 수준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자신과 그와 관련된 요소들은 일정한 체제의 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인 바,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종말은 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북한이라는 총체적 체제의 해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체제수준에서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의 축출과 체제의 변혁이 계기적으로 연결되리라고 생

¹⁰ Sung Chull Kim,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sponsored by Korean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 Research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Seoul, May 17~18, 1996), p. 86.

각할 수 없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위체제(suprasystem)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북한에서의 체제변혁이 체제의 총체적 해체로 이어질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권” 차원의 위기수준과 내구력, 즉 김정일 정권이 지닌 속성 또는 구성요소들의 총체적 불안정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용된 방법은 설문조사와 면접이며, 이것이 적용될 수 없는 지표와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설문지는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에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과정에서는 북한이탈주민 2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해 설문내용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14명을 대상으로 2006년 8월 1일 및 3일에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성실하게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로서는 방대한 표본조사인 314명을 샘플로 활용함으로써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표 I-2>와 같다. 아울러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16일까지 1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PSJ, JNS, LSG, CCH, KYH, CJH, KKJ, KDS, LDH, CJS, ACL, HSI 등 12명이다.¹¹ 심층면접

¹¹ 새터민들의 신변보호상 영어 이니셜로 표기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필자가 보

을 통해 내면적인 의식세계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회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은 첫째, 314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으나 설문응답이 극히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여 각 문항마다 응답자 수가 다르다는 점이고, 둘째, 설문 대상이 새터민이라는 점에서 응답에 편견과 곡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성별·거주지별 등 각 변수의 해당 인원의 숫자가 불균형을 이루어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여자, 함경북도, 비당원, 노동자, 고등중학교 졸업자, 기본 군중 등이 과다대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응답 내용을 현재 북한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다.

<표 I-2> 새터민의 사회경제적 배경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55	17.5
	여자	206	65.6
	합계	261	83.1
거주지	평양	3	1.0
	남포	2	.6
	개성	2	.6
	평안남도	12	3.8
	평안북도	4	1.3
	함경남도	32	10.2
	함경북도	197	62.7
	자강도	2	.6
	양강도	8	2.5

관하고 있음.

		빈도	퍼센트
거주지	황해남도	3	1.0
	황해북도	2	.6
	강원도	9	2.9
	합계	276	87.9
출생지	평양	12	3.8
	남포	2	.6
	개성	1	.3
	평안남도	10	3.2
	평안북도	3	1.0
	함경남도	39	12.4
	함경북도	167	53.2
	자강도	4	1.3
	양강도	10	3.2
	황해남도	5	1.6
	황해북도	4	1.3
	강원도	9	2.9
	중국	2	.6
	합계	268	85.4
학력	대학교	20	6.4
	전문학교	28	8.9
	고등중학교	220	70.1
	인민학교	2	.6
	합계	270	86.0
직업	노동자	154	49.0
	농민	31	9.9
	인테리	17	5.4
	학생(대학)	13	4.1
	학생(고등중)	19	6.1
	군인(고급군관)	2	.6
	군인(하급군관)	5	1.6
	군인(하전사)	4	1.3
	대외경제일군	1	.3
	외화벌이일군	2	.6
	합계	248	79.0

		빈도	퍼센트
계층구분	핵심군중	36	11.5
	기본군중	116	36.9
	동요계층	63	20.1
	적대계층	23	7.3
	합계	238	75.8
당원여부	당원	24	7.6
	후보당원	4	1.3
	비당원	220	70.1
	합계	248	79.0

본 설문문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 4가지 척도(scale)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1은 체제에 전혀 위해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임.
- 2는 체제에 위해하지 않고 대체로 안정적인임.
- 3은 체제에 위해하지만 정도가 낮음.
- 4는 체제에 대한 위해 정도가 매우 높음.

변화추이를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각 문항마다 최근 10년 동안(1996년~2005년)의 시기별 척도의 변화에 유의하였다. 특히 식량난(1996년), 국방위원장체제 출범(1998년), 남북정상회담(2000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년)를 기점으로 한 변화여부에 주의를 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기 힘들거나 위기치수를 측정하기 힘든 지표 또는 측정항목에 대해서 심층면접 및 기존의 통계자료 또는 분석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GNP의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안보자원의 확보 등 경제부분에서는 관련통계를 활용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위기수준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권위기의 임계점(critical limit)을 1996년의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와는 달리 3.0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임계점으로 잡았던 2.5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전반적인 위기지수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결코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권의 내구력은 ‘불만의 힘’과 ‘통제의 힘’의 역학관계를 통해 평가된다는 점에서 ‘통제’가 ‘불만’을 능가하고 있는한 정권붕괴가 쉽게 도래하지는 않는다.

3. 선행연구의 결론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의 선행연구는 15가지의 RINU 지표에 준거하여 북한 정권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고 내구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는 1992년에 이미 체제위기의 임계점인 2.5에 도달하였다. 위기 임계점 통과가 곧 체제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위기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체제 차원에서 불안정하다. 또한 북한 ‘체제(정권)’는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권력엘리트’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체제가 불안정한 이상 김정일이 외견상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해도 장기적으로 김정일 집권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탄 선장이 아무리 건장하다고 해도 그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최대 약점은 국제적으로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지표), 국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미약하다는 점(『대외경제관계』지표), 곡물과 유류 등 안보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안보자원의 확보』지표) 등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취약성은 자주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구실하에서 서방국가들에 대한 지나친 폐쇄정책을 취해 온 데서 비롯된 본질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러시아 등 기존 동맹국들로부터의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비사회주의권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이런 취약성은 체제위기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강점은 상의하달식 관료적 침투력이 아직도 무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관료기구의 기능』지표)과 당 간부를 중심으로한 엘리트의 응집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엘리트 갈등』지표)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상층부의 공식적인 지시전달 메커니즘과 인적 요소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강점은 친인척에 의한 권력 독점, 치밀한 계급정책을 통한 사성성 검증, ‘당적 지도’ 원칙의 고수를 통해 사람과 기구를 끊임없이 정비해 온 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反문화의 형성』지표)을 알 수 있다. 단, 유의할 것은 이 지표 중 청소년문화 항목만큼은 높은 위기지수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문화가 많이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북한 체제에 위협적인 집단은 성분별로는 동요계층, 직업별로는 농민과 노동자, 학력별로는 전문학교 졸업자와 고등중학교 졸업자, 거주지별로는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당원 멤버십별로는 비당원 등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집단에 속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속성이 가장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체제유지에 상대적으로 위협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직업별에서 지식인·해외경험자가 예상과는 달리 농민·노동자에 비해 체제에 덜 위협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전자가 체제의 수혜계층으로서 일부의 불만을 감수하는 반면 후자는 생활이 열악한 소외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만일 급격한 체제변혁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촉발시키는 주체가 누구일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동요계층, 노동자와 농민, 전문학교 졸업자와 고등중학교,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비당원의 집단들이 중첩되는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소외집단에 의해 저항이 발생할 경우,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조직화된 저항 형태를 띠기보다는 불균등한 식량분배 같은 문제에 대한 응축된 불만이 일시적으로 분출하는 비조직적 봉기의 형태가 될 것이다.

소외된 집단에 의한 폭발적인 비조직적 봉기의 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층부의 응집성이 높고 사회통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조직적 봉기는 체제변혁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는데 그칠 뿐, 그 이후의 변화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비조직적 봉기가 가지는 의미는 매

우 큰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엘리트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빚어져 예측불가능한 혼돈의 상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째, 북한 당국이 현재와 같은 위기수준 증가추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위기지수가 2011년~2018년 사이에 체제변혁 임계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시기가 체제변혁의 예상연도이며 향후 5년~12년에 해당된다.

일곱째, 만일 당국이 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공식 부문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전반적인 위기수준은 정체 내지 감소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이같은 비공식적 측면을 수용한다는 것은 점진적 개혁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개혁은 주로 경제분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수준을 억제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경제분야의 개혁 내용으로는 대내적으로 부분적인 암거래 행위의 제도권 흡수, 시장가격에 의한 일부 공업소비재의 거래 허용, 농업 책임생산제의 도입, 부농산품 거래 허용, 기업 및 행정단위에 대한 경제분권화 정책 등이며, 대외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대상의 확대, 북·중국경지대에서의 무역거래 허용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시점과 효과발휘 시점 간에는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하는 바, 단기적인 위기수준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변혁은 반드시 총체적인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내에서 체제변혁이 발생한다해도 주변국의 입장과 우리 한국의 대응능력에 따라 체계의 변혁이

북한이라는 총체적 체계의 해체로 진행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체제변혁에서 총체적 체계붕괴라는 계기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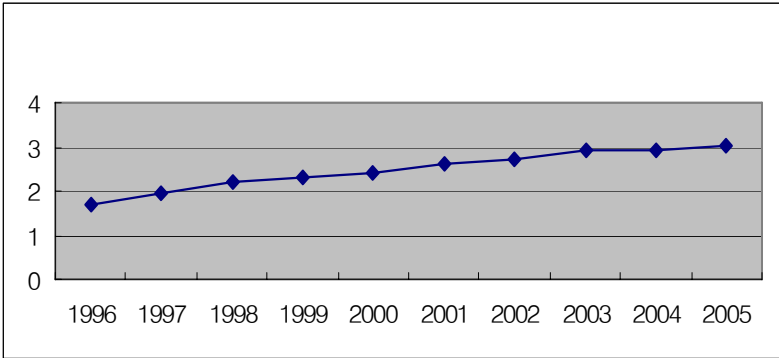
II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지표별 위기수준 평가

1. 이념분야 평가

가. 공식이념의 기능

<그림 II-1> 일상생활에서 김일성주의 준수 여부



(1)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표 II-1> 일상생활에서 김일성주의 준수 여부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04	2.14	2.41	2.54	2.60	2.68	2.78	2.90	2.97	2.97
여자	1.60	1.90	2.12	2.23	2.35	2.55	2.70	2.90	2.99	3.11
합계	1.69	1.95	2.19	2.32	2.42	2.59	2.73	2.90	2.98	3.05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00	2.00	2.00	3.00	3.00	3.50	3.50	3.50	3.50	3.50
함경도	1.71	1.94	2.22	2.37	2.46	2.65	2.74	2.91	3.01	3.12
평안도	1.75	1.78	1.91	1.75	1.96	2.18	2.46	2.63	2.68	2.68
황해도	2.00	2.08	2.50	2.75	2.00	2.00	2.00	2.00	2.00	2.00
양자강도	1.44	2.00	2.33	2.14	2.17	2.17	2.33	2.60	2.75	3.00
강원도	1.22	1.78	1.75	2.40	2.80	3.00	4.00	4.00	4.00	4.00
합계	1.69	1.93	2.19	2.32	2.41	2.59	2.73	2.89	2.99	3.06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1.71	1.97	2.26	2.29	2.41	2.59	2.73	2.87	3.02	3.04
농민	1.77	2.02	2.26	2.64	2.71	2.90	2.89	2.86	3.17	3.40
인테리	1.31	1.88	2.07	1.58	1.75	2.11	2.40	2.43	2.43	2.67
학생	1.53	1.66	2.11	2.66	2.70	3.00	3.08	3.25	3.40	3.45
군관	1.71	1.86	1.86	2.71	2.71	2.50	2.50	2.50	2.50	2.60
하전사	1.50	2.25	2.25	2.25	2.33	2.50	3.00	3.50	3.50	3.50
대외일군	2.00	1.00	1.50	2.50	3.00	3.00	4.00	4.00	4.00	4.00
합계	1.67	1.92	2.20	2.34	2.43	2.62	2.75	2.89	3.02	3.08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50	1.88	2.00	2.20	2.32	2.63	2.60	2.71	2.79	2.90
기본군중	1.61	1.88	2.16	2.17	2.33	2.53	2.65	2.76	2.91	3.08
동요계층	1.90	2.06	2.37	2.44	2.46	2.51	2.71	2.90	3.03	3.06
적대계층	1.91	2.10	2.11	2.43	2.43	2.58	2.82	2.89	3.00	3.13
합계	1.70	1.95	2.19	2.29	2.38	2.54	2.68	2.81	2.94	3.04

북한의 공식이념은 주체사상으로 주민들의 중심가치(central value)이다. 주체사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는 ‘자주’와 ‘수령’이지만 그 정수는 ‘혁명적 수령관’이다.¹²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주체사상의 체계화는 ‘혁명적 수령관’을 도출해내기 위한 일련의 방대한 작업이었다. 주체사상은 사실상 김일성주의로 전변되었고, 심지어 ‘종교성’을 내포하는 수준까지 격상되었다.¹³

주체사상의 실천 강령은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으로 구체화되었고, 북한주민이면 누구든 내면화해야 할 ‘주체10계명’이 되었다. 이것은 ‘생활총화’의 준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¹⁴

흔히 오늘날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주요인의 하나로 사상통제가 내세워진다. 북한 주민의 주체사상 즉, 김일성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에 사회주의권 붕괴 및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김일성주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II-1>과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주의의 원리대로 생활한 정도가 평균 3.05정도였다. 즉, “대체로 다른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김일성주의 원리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였다. 심한 경제난 때문에 김일성주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가운데 1998년

¹²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월간조선사』(2001. 9), p. 127.

¹³ 전현준,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2) 참조.

¹⁴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과정은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서울: 박영사, 2006) 참조.

김정일 체제의 공식 등장이후에도 경제난이 회복되지 않자 주민들의 이반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02년 7월 1일 북한당국이 야심차게 시도한 경제관리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주의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경제난 때문이고, ‘선군정치’에 대한 상대적 불만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군정치는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김일성주의 담론이라기보다는 인민들을 억압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¹⁵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해서 분석해보면 첫째, 성별로는 여자들이 3.11로서 남자의 2.97보다 높게 나타나 여자가 김일성주의에 따라 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제난으로 인한 고통이 여자들에게 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심지어 여자들은 생계를 위해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둘째, 거주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00로서 가장 높았고, 평양이 3.50을 기록하였다. 강원도는 땅이 매우 척박하여 식량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만큼 노동당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고, 주체사상 즉, 김일성주의에 대한 불신도 큰 것으로 해석된다. 평양이 3.50을 기록한 것은 중국, 남한 등지의 문물이 들어오고, 해외정보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¹⁵ 자세한 내용은 정영태, 『북한의 당·군·민관계와 체제안정성 평가』(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¹⁶ 자세한 내용은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하였고, 학생이 3.45를 나타냈다. 대외일군은 해외생활이 많고 자유주의적 문화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김일성주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만큼 젊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당국도 청소년 및 청년층에 대한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¹⁷

넷째, 계층별로는 역시 적대계층이 3.13으로 가장 높았다. 적대계층은 신분상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고, 김일성주의 및 주체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만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주민들은 순수히 김일성주의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보다는 주어진 생활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PSJ, JNS)”, “북한에서 남자는 정치적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나 여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여자는 대개 의식주와 생활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이 북쪽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에서 탈북할 정도면 매우 정치의식이 뛰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LSG)”, “함경도, 양강도

¹⁷ 『좋은 벗들』은 북핵실험(10.9)을 전후로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규찰대를 동원해 주민들의 옷차림 등 용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침’에 따른 이같은 용모 단속의 주요 대상은 초상 휘장(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 미착용, 머리를 짧게 깎지 않고 기르는 경우, 나팔바지 등 청바지를 입는 경우, 귀걸이를 한 여성 등임. 북한은 이런 용모로부터 자본주의 사상의 ‘문화적 침투’가 시작된다고 보고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것임. 한편, 『로동신문』(11.2)도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파멸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제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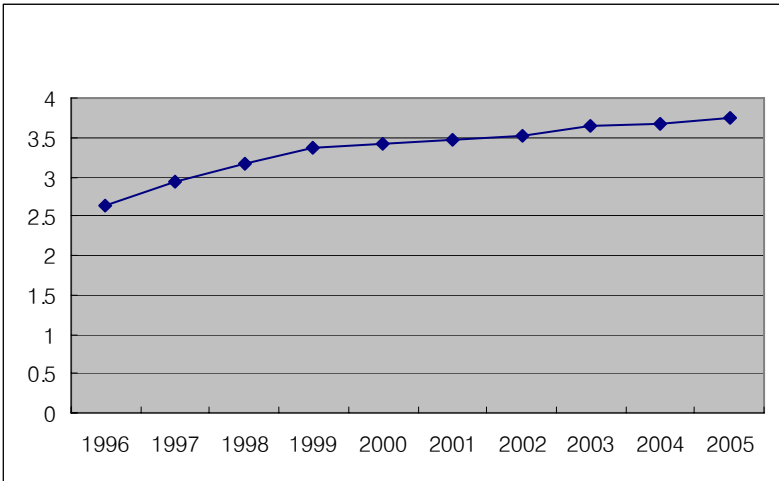
는 3점. 평양, 개성, 원산은 2점을 주면 적합할 것이다. 평양이 3점이 넘고, 강원도가 4점은 지나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대외일꾼이 4점 정도 나온다면, 그들은 도망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해외에 대사관으로 나가있는 외교관을 4로 볼 수 없지 않는가. 그들은 2점 정도로 평가할 것이다.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하면, 결심하기 이전과 생활방식은 다를 것이다(KYH)”, “대체로 김일성주의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런데,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이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 충성심과 이데올로기의 실천에는 계층과 지역별 차이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민들 심리의 이반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평양 내에서 엘리트 계층과 평양 거주민인데 지방으로 축출된 집단과 차이가 있다. 후자가 체제에 대한 불신이 심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외양과 내면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CJS)”, “아래층으로 갈수록 철저히 생활하지 않는다는 데에 가깝다. 속으로는 얼마나 충성심을 가지는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저 같은 사람은 2번, 대체로 그에 따라 생활했다에 체크할 것이다. 당 고위간부는 1번일 것이다.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감이랑기보다는 김정일 집단과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체제가 붕괴되면 대중으로부터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맞아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고지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KDS)”, “김일성주의라고 말해도 북한사람이라면 대략 의미를 알아들을 것이다.

그것을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 또는 당의 지시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서 행동한 것이라기보다는 피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따랐을 것이라고 본다. 대체로 탈북자들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의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2점이라고 보이지만, 그들은 탈북 이후의 생활도 포함해서 3점 이상을 주었을 것이다. 아래 지방에서 탈북하는 사람과 국경계층에서 탈북하는 사람들과 탈북동기가 다르다. 적대계층 뿐만 아니라 핵심계층에서도 많이 탈북한다. 아래 지방인 강원도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더 클 것이다. 이 조사가 표본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80% 정도가 정확도가 있다고 보인다. 북한에서 김일성주의란 주체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방법이 적합해야 한다고 해서 방법이 포함된 것이다(LDH)”, “이 수치가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치력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할 때, 3.0내지 3.5로 나오는데 대체로 그러한 수치가 나온 것에 동의한다. 북한 인민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김일성주의가 실제 생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도 상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마지못해 동원되어서(끌려와서) 투표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선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북한인민이 실제로 이해할 때에는 김일성주의는 김일성의 교시대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다(KKJ)”, “인민 의식을 분석할 때 간부급과 일반 대중들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간부계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일부만 돌출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일반 대중들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행동을 보기 힘들며, 김일성주의 원리대로 산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북한 대중은 평균적으로 2.8의 수

치대로 행동한다고 평가하고 싶다. 강원도가 4.0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평양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 즉 김일성주의의 원리에 대해 부정하는 것도 의아스럽다. 황해도가 평양보다 더 김일성주의의 원리에 따라 생활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CJH)”

(2) 집단주의 명제

<그림 II-2> 집단우선주의 준수 여부



<표 II-2> 집단우선주의 준수 여부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87	2.90	3.00	3.20	3.20	3.22	3.28	3.46	3.50	3.62
여자	2.58	2.93	3.20	3.42	3.49	3.57	3.67	3.75	3.79	3.82
합계	2.64	2.93	3.16	3.36	3.41	3.46	3.53	3.64	3.68	3.74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00	3.33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함경도	2.62	2.92	3.17	3.35	3.39	3.46	3.55	3.64	3.68	3.73
평안도	2.61	2.75	2.81	2.93	3.00	3.21	3.23	3.42	3.50	3.67
황해도	3.29	3.33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영남도	3.00	3.20	3.33	3.29	3.17	3.33	3.33	3.60	3.75	3.75
강원도	2.13	2.25	2.29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63	2.91	3.14	3.35	3.37	3.45	3.52	3.62	3.67	3.73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68	3.02	3.21	3.41	3.40	3.53	3.63	3.67	3.76	3.79
농민	2.55	2.86	3.32	3.50	3.67	3.60	3.67	3.75	3.83	3.80
인테리	1.80	2.20	2.36	2.09	2.20	2.50	2.78	3.00	3.17	3.29
학생	2.44	2.45	2.98	3.56	3.64	3.54	3.45	3.50	3.44	3.44
군관	2.86	3.29	3.00	3.14	3.00	2.83	2.83	2.83	2.83	3.80
하전사	3.75	3.75	3.50	3.50	4.00	4.00	4.00	4.00	4.00	4.00
대외일군	2.00	1.50	2.00	3.50	3.00	3.00	3.00	4.00	4.00	4.00
합계	2.59	2.88	3.12	3.32	3.35	3.42	3.50	3.58	3.64	3.72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00	2.42	2.60	2.82	2.89	3.05	3.13	3.25	3.31	3.69
기본군중	2.50	2.85	3.09	3.20	3.29	3.40	3.49	3.58	3.68	3.74
동요계층	3.10	3.19	3.48	3.63	3.68	3.64	3.70	3.79	3.82	3.81
적대계층	3.35	3.50	3.39	3.50	3.64	3.67	3.83	3.90	3.89	3.89
합계	2.67	2.93	3.15	3.30	3.38	3.45	3.54	3.62	3.68	3.76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¹⁸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집단우선주의 사회로 알려져 있다. 집단주의는 북한주민이면 누구나 예외없이 유아시절부터 어느 단체에 소속되면서 주입되어 진다. 나보다는 단체나 국가를, 부모보다는 김일성·김정일을 더 우선시하도록 교육되어 진다. 북한은 종종 어느 북한주민이 화재나 홍수를 비롯한 재난 시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품에 안고 탈출¹⁹했다고 해서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보도를 크게하는 것도 ‘나보다는 국가나 김일성·김정일 더 중시하는’ 행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주의는 국가와 김일성·김정일을 동일시하도록 하고, 경제난과 같은 내적 장애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같은 외적 압박에 대해 ‘굶주’거나 ‘항복’보다는 결사적 저항을 더 우선시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주의가 약화된다는 것은 북한체제 내구력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2>와 <표 II-2>에서 보듯이 금번 조사결과 북한주민들은 국가나 정부보다는 ‘나’와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정도가 3.74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난 때문이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해결해주지 못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충성도 및 집단주의 정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식·의·주’를 해결해 주지 않음에 따라 모두가 ‘장사’에 나섰고, 장사과정에서 가족의 귀중성과 고마움이 더욱 커진 것이다.

¹⁸ ‘김일성 헌법(1998년 9월 5일, 개정)’ 63조.

¹⁹ 『조선중앙통신』. 2006. 8. 8. 7월 중순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북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와중에서도 자녀와 가재도구 보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부터 건져내다가 사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소개했음.

물론 이러한 통계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단주의 정신은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북한체제 유지의 귀중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 경제난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개인주의 및 가족주의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집단주의 약화에 따른 체제변혁 가능성도 함께 커질 것이다.

조사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여자가 3.82, 남자가 3.62로서 여자가 가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더 깊고, 실제로 의·식·주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국가나 정부, 김정일 위원장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별로는 황해도, 강원도가 4.00으로서 가장 높았고,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지역이 집단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두 지역은 산악지역으로서 식량난이 심했고, 그에 상응한 정부나 당의 대응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 만큼 당을 비롯한 각종 공조직의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 하전사와 대외일군이 4.00으로서 가장 높았다. 아마 하전사는 보급에 대한 불만 때문에, 대외일군은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노동자·농민·하급군관들은 상대적으로 배급을 받지 못한 계급으로서 국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농민들은 노동자들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농사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순박한 농민들은 주체농법 고수 등 국가의 지시대로 움직였지만 실제적인 삶은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단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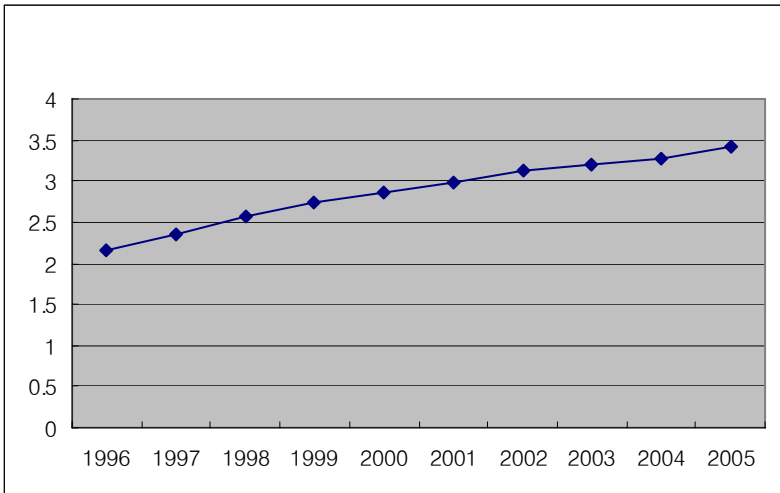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역시 적대계층이 3.89로서 개인주의나 가족주의적 경향이 높았다. 적대계층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집단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통제력에 의해 체제가 유지되며, 아래로부터의 불만은 상존한다. 북한이 민주사회였다면 이미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할 때, 체제의 강제력 및 통제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지속성의 원인분석에서 아래로부터의 요구보다는 위로부터의 통치가 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PSJ, JNS)”, “황해도와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의식주가 나은 편이다. 대외일꾼도 개인 능력여하에 따라 생활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다. 하전사도 부식이 일반 사람보다 더 잘 나온다. 대외일꾼이 활동력이 가장 높은 계층이어서, 다양한 지역에서 보고 듣는 것이 많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체제의 실상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응답(4.0)이 나올 수 있다(LSG)”, “조직생활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외일꾼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 정도로 매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ACI)”, “대체로 3.7정도로 수치가 나온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로 국가는 나를 챙겨주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평가를 할 것이다(KYH)”, “겉으로는 집단주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4번에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은 나와 가족이다. 속심은 가

족에 있고, 자기가 나와 가족에 애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고위층이나 하층이나 다를 바가 없다(CJS)”, “조직생활에 참가하지만, 권력계층이든 일반계층이든 자기와 가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체제에 속해서 지위상승을 노리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KDS)”, “대의일꾼이 높다고 나온다는 것은 이 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LDH)”, “북한 인민도 집단주의의 원리가 실제 생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원칙과 실제 생활과 괴리가 커져가는 것은 타당한 분석이다(KKJ)”

(3) 부자간 권력승계

<그림 II-3>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에 대한 인식



<표 II-3>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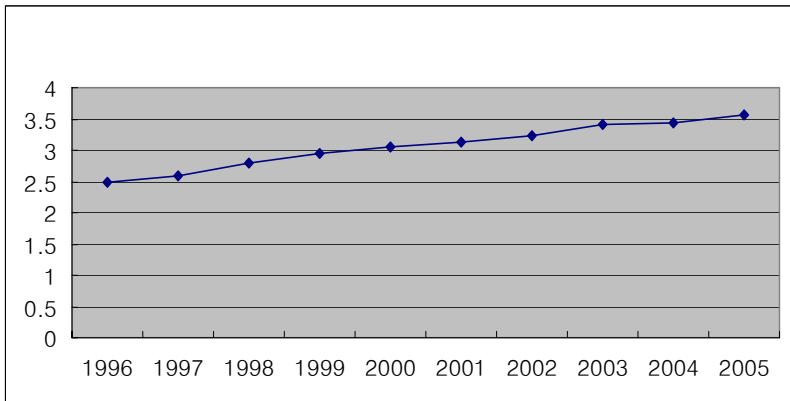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62	2.63	2.72	2.85	2.95	3.10	3.20	3.26	3.26	3.41
여자	2.04	2.26	2.52	2.70	2.83	2.93	3.10	3.18	3.28	3.41
합계	2.16	2.34	2.57	2.74	2.86	2.98	3.13	3.21	3.27	3.41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2.33	2.50	3.00	3.00	3.00	3.00	3.00	3.00	3.50
함경도	2.14	2.34	2.61	2.75	2.86	2.98	3.14	3.23	3.28	3.42
평안도	2.24	2.27	2.33	2.46	2.69	2.67	2.82	2.90	2.90	3.20
황해도	2.79	2.75	3.25	3.25	3.00	3.00	3.00	3.00	3.00	3.00
양자강도	2.25	2.38	2.38	2.33	2.20	2.60	2.60	2.75	3.00	3.00
강원도	1.63	1.88	2.14	2.75	3.50	3.67	4.00	4.00	4.00	4.00
합계	2.15	2.33	2.58	2.72	2.85	2.95	3.10	3.19	3.23	3.39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12	2.30	2.58	2.74	2.89	2.97	3.10	3.21	3.28	3.45
농민	2.21	2.43	2.71	3.00	3.09	3.00	3.25	3.43	3.40	3.40
인테리	1.66	1.91	2.07	2.00	2.09	2.27	2.70	2.57	2.86	3.14
학생	2.11	2.24	2.45	2.72	3.00	3.23	3.25	3.18	3.22	3.22
군관	2.43	2.71	2.86	3.14	3.14	3.00	3.00	3.00	3.00	3.20
하전사	2.00	2.33	2.33	2.33	2.50	3.00	3.00	3.00	3.00	3.00
대외일군	3.00	2.50	2.50	2.5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11	2.30	2.54	2.71	2.86	2.95	3.09	3.17	3.23	3.38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계층	1.83	2.08	2.45	2.62	2.72	2.83	3.00	3.14	3.29	3.53
기본계층	1.97	2.19	2.43	2.60	2.74	2.80	2.94	3.00	3.08	3.16
동요계층	2.34	2.50	2.75	2.78	2.83	3.03	3.15	3.21	3.35	3.54
적대계층	2.68	2.71	2.94	3.07	3.21	3.33	3.50	3.60	3.56	3.56
합계	2.12	2.30	2.57	2.70	2.82	2.92	3.07	3.15	3.24	3.39

<그림 II-4> 김정일-김정일 아들 부자세습에 대한 인식



<표 II-4> 김정일-김정일 아들 부자세습에 대한 인식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98	2.96	3.08	3.18	3.29	3.37	3.47	3.57	3.56	3.60
여자	2.37	2.51	2.70	2.86	2.97	3.02	3.11	3.31	3.35	3.53
합계	2.50	2.60	2.79	2.95	3.06	3.13	3.24	3.41	3.43	3.56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50	3.00	3.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함경도	2.48	2.60	2.79	2.94	3.09	3.11	3.25	3.42	3.43	3.55
평안도	2.60	2.50	2.64	2.58	2.67	3.00	2.80	3.00	3.00	3.25
황해도	2.71	2.67	3.25	3.25	3.00	3.00	3.00	3.00	3.00	3.00
양자강도	3.00	3.00	3.00	2.86	2.67	2.83	3.00	3.17	3.40	3.40
강원도	2.14	2.43	2.50	2.50	3.00	3.50	4.00	4.00	4.00	4.00
합계	2.50	2.61	2.79	2.92	3.04	3.10	3.20	3.36	3.39	3.50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59	2.67	2.90	3.02	3.08	3.17	3.26	3.35	3.42	3.52
농민	2.37	2.52	2.67	3.17	3.36	3.30	3.22	3.67	3.67	3.67
인테리	2.06	2.18	2.31	2.23	2.33	2.42	2.73	3.00	3.00	3.13
학생	2.28	2.44	2.50	2.69	3.00	3.20	3.33	3.50	3.33	3.43
군관	3.00	3.40	3.40	3.60	3.60	3.50	3.50	3.50	3.50	4.00
하전사	2.00	2.00	2.0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대외일군	3.00	2.50	2.50	2.5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49	2.59	2.77	2.92	3.04	3.11	3.21	3.37	3.40	3.50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00	2.17	2.48	2.80	2.94	3.06	3.40	3.47	3.47	3.73
기본군중	2.42	2.53	2.63	2.76	2.87	3.00	3.10	3.33	3.36	3.45
동요계층	2.76	2.85	3.04	3.08	3.17	3.18	3.22	3.35	3.54	3.58
적대계층	2.90	2.95	2.93	3.08	3.17	3.18	3.27	3.33	3.25	3.17
합계	2.50	2.60	2.75	2.89	3.00	3.08	3.20	3.36	3.42	3.53

1970년대 김정일로의 후계가 결정된 이후 북한은 사후적으로 수령후계자론에 입각,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였다. 절대권자인 수령의 지위를 이어받을 만한 자격자는 혈통이 동일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강하면서도 세대는 다른 김일성의 장자 김정일이라는 논리였다.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 사후적으로 조작된 수령후계자론은 수령후계자는 수령과 마찬가지로의 지위를 가지고 인민을 통치한다는 주장을 통해 어느 누구도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였다.²⁰

북한에서의 수령은 김일성이었고, 현재 김정일은 수령 김일성의 권위로 통치하고 있다. 수령후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수령에게 도전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해 도전하는 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북한 내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이러한 정치적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수령 영생론’이 등장하였다.

종교에 버금가는 정치적 강제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김정일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김정일로의 후계구도 자체에 대해 회의하는 풍조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김정일 비방 뼈라나 낙서 정도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²¹

이러한 풍조는 김정일 후계자로 김정일 아들 중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반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후계구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²⁰ 자세한 내용은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서울: 통일연구원, 2003) 참조.

²¹ 『Daily NK』, 2006. 2. 3. 2003년 4월 김일성 91회 생일(4.15)을 앞두고 함남 함흥의 함흥대극장 건물 외벽에 김정일을 비난하는 구호가 발견돼 보위부가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나선 사건이 있었다고 탈북자의 말을 빌려 보도함.

따라서 새터민들의 대답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체로 김정일 아들에 의한 세습구도에 대해 3.52 이상이 나온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입장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이 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김정일이 그의 아들을 권력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이러한 설문결과는 설문상 그렇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권력 후계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

<그림 II-3> 및 <표 II-3>와 <그림 II-4> 및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권력승계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녀에 관계없이 3.41을 나타냈다. 이것은 남녀 모두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정일 자식으로의 세습에 대해서는 남자가 3.6으로서 여자의 3.5 보다는 높았으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거주지와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4.00을, 평양이 3.5를 나타냈다. 강원도는 경제난과 지역적 소외감으로 인해 김일성 부자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 같다. 한편 평양시민들은 선택받은 사람들로써 지방민에 비하면 의·식·주 모든 면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시 출신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상대적 빈곤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고위관료들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 아들로의 세습에 대해서도 강원도는 4.00을 기록,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함경도가 3.55를 기록하였다. 이것 역시 함경도의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동자가 3.4를 나타냈다. 대외일군들은 해외생활을 하면서 부자세습에 대한 외국인들의 조소를 받아보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 것 같다. 노동자들이 부자승계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중소도시 노동자들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자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잃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일의 실정때문이라는 인식이 노동자들 내에 퍼져 있다는 증거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의 불만이 3.5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요계층의 불만도 3.54로 나타나 적대·동요계층의 불만이 높은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핵심군중까지도 3.53을 보임으로써 세습에 대한 불만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김정일 아들로의 세습에 대해서도 핵심군중이 3.73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김정일이 아들로의 세습을 미루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 80년대 이후부터 북한체제는 김정일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김정일로의 승계에 대해 국민들이 큰 거부감도 없었고, 당연히 승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승계라고 보기 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승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겠지, 누구한테 넘겨주겠는가. 아버지가 가장 신뢰할 사람

은 아들이기 때문이다(PSJ, JNS)”, “북한의 정치문화에서는 누가 지배하는가에 관심이 없다. 반면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북한 대중들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가 지배하는가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ACI)”, “이 문항에 대한 분석도 합리성을 띠다고 판단된다.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가 나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대외일꾼은 포괄적인 집단으로서 외교관, 무역관 및 식당 및 개인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 대외일꾼들 중의 일부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 평가(4.0)를 할 가능성이 있다(KYH)”, “80년대에 김정일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 저희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예술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령이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카리스마를 50%를 접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지위는 어릴 때부터 세뇌시킬 정도로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이 세습할 때에는 북한은 폐쇄사회였다. 외부정보를 듣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러 해외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외부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북한 평양시민의 60%정도는 해외체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보를 알아도 집밖으로 누출되지 못하도록 전전긍긍하였다. 현재는 해외정보가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제는 다 아는 정보가 되었다(CJS)”, “오히려 김정일의 최고지도자로서 의심하는 집단은 고위 당 간부일 것이다. 그들은 의문의 여지가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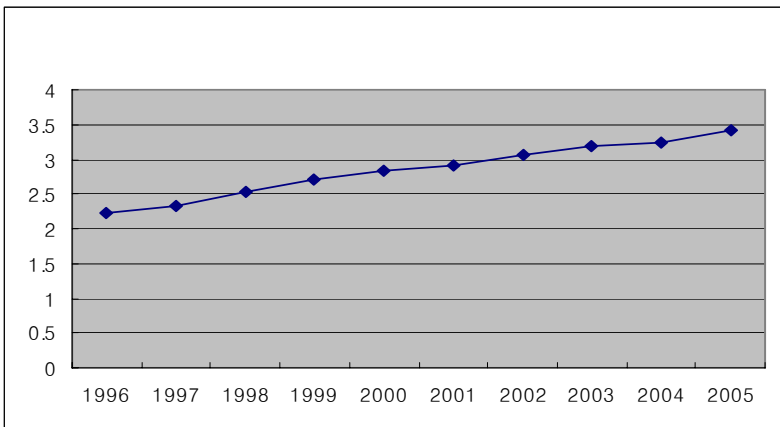
만, 김정일밖에 대안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다. 2대에 이어 3대째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사람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김정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 인민은 김일성이 다른 실세, 오극렬이나 오진우에게 물려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에서 3세대로 권력이양은 상황이 180도 다르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정일은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권력을 승계 받았던 것이다. 그 당시에 김일성은 카리스마를 가진 최고지도자였고,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권력을 이양 받는데 어려운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들도 해외정보를 전해 들을 정도니까 해외정보를 알고 있는 집단은 더 많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해외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환상,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환상이 중첩되어 있고, 해외정보에 대한 이해가 깊다(KDS), “저 개인적으로는 4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북한에서는 1로 생각했었고 주변 상류층은 2라고 생각했다. 제가 1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북한체제의 운명을 저의 운명과 동일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1, 2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세습체제에 대해 논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민들은 실제로 자기 삶에 대해 고민하지, 정치적인 문제에 까지 관심을 가지겠는가. 북한체제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었다. 북한에서 김정일への 승계에 대한 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친한 친구들끼리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대다수가 김정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다(LDH)”, “북한인민도 현재는 사상교양과 우상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래서 수치가 나 빠지는 것(3, 4)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북한영화를 보면 결론이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 체제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북한사람들도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에도 영화의 결론은 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지루함을 느낀다(KKJ)”, “후계도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CJH)”, “김정일은 아직도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를 잘못 이용했다가는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김정일이 김정일 초상화를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김정일 뱃지를 집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반주민들은 김정일 아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PSJ)”, “김정일의 아들로까지 권력이 승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북한 대중들은 거부감이 클 것이다. 그런데 호칭을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줄곧, 그리고 항상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불리니까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KYH)”, “북한의 극비 정보를 북한 대중들이 알고 있겠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하루 벌어 먹고도 살기도 힘든데 김정일 후계자가 김정운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북한에서 김정일 후계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언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 인민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 북한에서 김정일로의 승계보다 김정일 아들로의 승계에 대해 더 비판적인 것은 이해간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적어서 김정일이 아들에게 승계할 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 비통(비밀

통신)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아니 뎀 굴뚝에 연기날까? 라는 속담처럼 개연성 있는 정보가 흘러 다닌다. 둘째, 체제결속 용으로 당이 일부로 소문을 퍼트린다. 엘리트층은 대개 김정일 아들로 3대 세습으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 인민들은 외부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엘리트층보다는 오히려 덜 비판적이다(LDH)”,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 아들이 누구지는 잘 몰라도 김정일 이후에 누구로 승계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한다. 북한에서 실제 입소문(비통)은 많다. 근거 없는 얘기는 다니지 않는다(KKJ)”, “북한 인민은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지 김정일 아들이 누구며 누가 집권할 지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는다. 아마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치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겨우 사는 인민들의 입장에서 지도자 이슈는 너무 거리가 먼 이슈라 하겠다(CJH)”.

(4)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그림 II-5> 김정일의 지도자 자질



<표 II-5> 김정일의 지도자 자질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48	2.56	2.66	2.76	2.88	3.02	3.10	3.10	3.11	3.19
여자	2.15	2.28	2.50	2.69	2.81	2.86	3.03	3.23	3.33	3.60
합계	2.22	2.34	2.54	2.71	2.83	2.92	3.06	3.18	3.24	3.43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2.67	2.5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함경도	2.19	2.30	2.53	2.72	2.87	2.97	3.11	3.19	3.23	3.46
평안도	2.41	2.40	2.47	2.38	2.46	2.58	2.45	2.90	2.80	3.00
황해도	2.43	2.50	3.00	3.00	3.00	3.00	3.50	3.50	3.50	3.50
양자강도	2.89	2.89	2.89	2.33	2.00	2.00	2.40	2.50	3.00	3.00
강원도	2.00	2.25	2.29	2.50	3.25	3.33	4.00	4.00	4.00	4.00
합계	2.22	2.33	2.54	2.68	2.81	2.90	3.03	3.16	3.20	3.40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32	2.40	2.66	2.79	2.94	2.97	3.07	3.20	3.27	3.43
농민	2.17	2.36	2.67	3.08	3.00	3.11	3.38	3.57	3.60	3.60
인테리	1.53	1.67	1.86	1.82	2.10	2.20	2.56	3.00	3.14	3.14
학생	2.07	2.17	2.23	2.53	2.77	3.17	3.36	3.56	3.50	3.62
군관	2.50	2.83	2.67	2.60	2.60	2.25	2.25	2.25	2.25	2.33
하전사	1.75	1.75	2.00	2.00	2.00	1.50	2.00	2.00	2.50	2.50
대외일군	2.00	2.33	2.67	3.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21	2.32	2.53	2.68	2.84	2.90	3.05	3.19	3.24	3.38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86	1.97	2.38	2.45	2.65	2.76	2.93	3.07	3.14	3.64
기본군중	2.06	2.21	2.38	2.57	2.67	2.83	3.00	3.15	3.19	3.29
동요계층	2.33	2.38	2.61	2.67	2.75	2.77	2.85	3.00	3.19	3.36
적대계층	2.82	2.91	3.06	3.00	3.13	3.15	3.31	3.50	3.44	3.57
합계	2.18	2.28	2.51	2.63	2.74	2.84	2.98	3.13	3.21	3.40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 평가는 크게 양단으로 갈린다. 우선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를 강온양면책을 통해 그런대로 잘 이끌고 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돌파력을 통해 북한체제를 잘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방법은 주로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이 크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주장이다.²²

그러나 반면 김정일은 무능하고, 김일성과는 달리 매우 소심하다는 평가이다. 그는 매우 잔인하고, 정치를 제외한 여타 부문에서는 거의 문외한이라는 주장이다. ‘선군정치’ 담론에서 보듯이 오로지 무력을 통해서만 통치하고, 자비심은 거의 없다는 평가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교하여 김정일의 자질을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주장이다.²³

²² 『연합뉴스』, 2006. 9. 21. 김정일 정권의 자기지속 이유는 계몽이 안된 민중의 붕괴는 기대하기 어렵고,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기독교는 ‘김정일=내 운명’ 인식을 갖고 있으며, 혹독한 감시·처벌체계때문임.

²³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서울: 지식공작소, 1996), p. 96.

<그림 II-5>와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설문결과는 김정일의 자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40점을 받았기 때문에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이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새터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주로 독재자, 전횡자 등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 자질에 대한 평가는 여자와 남자간 편차가 심했다. 여자는 3.60으로서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을 낮게 평가한 반면, 남자는 약 3.19로서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 남자의 가부장제적 태도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한 남자들은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독재자적 자질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00으로서 가장 높았다. 강원도가 지도자 자질에 대해 낮게 평가한 이유는 지역특성상 소외감이 높고 낙후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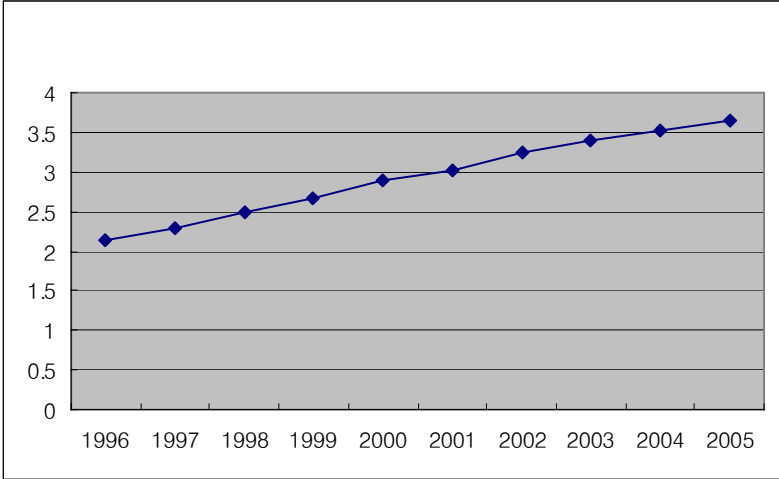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하여 세습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고, 다음으로 학생이 3.62를 차지하였다. 아마 대외일군들은 해외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세습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곤혹스러웠을 것이고, 세습은 개명된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핵심군중이 3.64로서 김정일 자질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핵심군중이 이처럼 낮게 평가한 이유는 김정일의 통치력을 보다 더 근접해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충성심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의 평가결과라는 차원에서 매우 주목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대중들이 김정일이 경제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JNS)”, “북한에서 군인계급은 평가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후에 계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ACD)”, “함경도가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3.46)라고 생각이 든다(KYH)”, “가장 못사는 지역은 함경도와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나쁜 평가를 내렸을 수도 있다(CJS)”, “(대외일꾼이 표본이 적지만) 대외일꾼이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수도 있다. 외교관들도 친한 사람끼리 만나면 김정일과 지도자 집단에 대해 비판을 한다. 그리고 해외에 대사 및 외교관들은 김일성 배지를 떼고 다니기도 한다(KDS)”, “김일성은 젊었을 때 미남이고, 보조개도 있고 호남형이었다. 북한 여성들에게 김일성은 인기가 좋았다. 그런데 김정일은 키도 작고 배도 나왔고 못생겨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여자들이 김일성보다 김정일의 자질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외모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LDH)”, “김일성의 자질과 김정일의 자질을 비교한다면 김일성에 더 좋은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KKJ)”.

(5)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그림 II-6> 남북한 체제 비교



<표 II-6> 남북한 체제 비교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43	2.43	2.65	2.76	2.98	3.05	3.24	3.40	3.46	3.50
여자	2.07	2.27	2.45	2.63	2.87	3.01	3.25	3.38	3.56	3.73
합계	2.15	2.30	2.50	2.67	2.90	3.02	3.25	3.39	3.52	3.64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00	2.33	1.50	1.50	2.00	2.00	2.50	2.50	3.50	3.50
함경도	2.15	2.33	2.55	2.72	2.95	3.08	3.29	3.41	3.53	3.63
평안도	2.17	2.00	2.06	2.14	2.50	2.62	2.83	3.18	3.36	3.50
황해도	2.57	2.67	3.25	3.25	3.50	3.50	4.00	4.00	4.00	4.00
양자강도	2.33	2.33	2.33	2.63	2.43	2.43	2.57	2.83	2.80	3.20
강원도	1.38	1.75	2.00	2.33	2.67	3.50	4.00	4.00	4.00	4.00
합계	2.14	2.30	2.49	2.65	2.86	2.99	3.21	3.35	3.49	3.60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26	2.30	2.55	2.75	2.96	3.13	3.31	3.38	3.53	3.65
농민	2.06	2.50	2.55	2.82	3.00	2.71	2.67	3.75	3.67	3.67
인테리	1.41	1.66	1.83	1.96	2.05	2.23	2.65	2.69	3.31	3.19
학생	1.77	2.20	2.26	2.47	2.85	3.00	3.29	3.25	3.39	3.39
군관	2.17	2.33	2.67	2.67	2.83	2.60	2.80	2.80	3.40	3.75
하전사	2.25	2.25	2.25	2.25	2.33	2.50	2.50	2.50	2.50	2.50
대외일군	2.00	1.50	1.50	2.00	3.00	3.00	4.00	4.00	4.00	4.00
합계	2.10	2.26	2.44	2.62	2.84	2.96	3.17	3.28	3.48	3.56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63	1.91	2.19	2.38	2.61	2.67	2.80	3.07	3.40	3.67
기본군중	1.98	2.16	2.34	2.48	2.71	2.86	3.16	3.31	3.51	3.57
동요계층	2.51	2.58	2.75	2.87	3.09	3.06	3.24	3.18	3.40	3.54
적대계층	2.48	2.45	2.67	3.00	3.14	3.25	3.33	3.60	3.67	3.71
합계	2.12	2.26	2.46	2.63	2.85	2.93	3.15	3.27	3.48	3.59

‘우리식 사회주의’는 1990년대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이 1991년부터 생존전략으로 내세운 담론이다. 이것은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인 주체사회주의의 변형으로서 핵심내용은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수령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²⁴

이후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웠고, 이러한 주장은 최소한 19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난이전까지는 북한주민들에게 먹혀들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사회주의가 붕괴하여 변절한 가운데에도 북한

²⁴ 『로동신문』, 1991.5.27.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김일성 수령 및 김정일 후계자에 의해 보존된다는 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1995년 9월의 대홍수와 1996년~1997년의 냉해 등 연이은 자연재해, 이에 따른 ‘고난의 행군’과 수십만명의 아사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깨졌다. 김정일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1998년 8월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새로운 국방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북한주민들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은 더욱 약화되어 갔다.

<그림 II-6>과 <표 II-6>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주민들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은 3.60정도이다. 물론 이 질문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이 되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만 거주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생활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내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것은 현실이고, 김정일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취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는 개선·수정·보완해야 할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진전된 남북관계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더욱 많은 남한관련 소식을 접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²⁵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여자가 3.73, 남자는 3.50에서 보듯이 여자가 남한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이었다. 이는 여자가 대외관련 정보 취득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자가 좀 더 나은 세

²⁵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북한소식지』 745호, 2006. 11. 8.

상을 바라는 기대감이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을 기점으로 남한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황해도, 강원도가 4.00으로 나타났다. 황해도, 강원도는 많은 수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된다. 물론 황해도는 곡창지대여서 자력으로 갱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판단했을 지도 모르지만 황해도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으로 가장 높았고, 군관이 3.75를 나타냈다. 대외일군들은 남한소식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한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 같다. 군관출신 새터민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상징적 차원에서 볼 때 군관이 남한소식을 접했을 때 의외로 빨리 변할 수 있다는 증거도 된다. 특징적인 것은 2004년부터 남한체제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71로서 남한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이 계층은 이미 1999년부터 남한으로 크게 정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2년 7·1조치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이들이 남한을 동경하면서 체제변화를 바라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주민들 입장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생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이, 남한이

북한보다 더 좋은 체제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인식일 것이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는 것은 상식적인 인식이다. 남한과 중국이 북한보다 더 풍족하다는 것은 일반 주민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 대중도 유교적인 인식이 있어서 남한이 잘 산다고 남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웃집 아버지가 더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내 아버지를 버리고 남의 집의 양자로 갈 것인가, 이러한 인식에서 선뜻 이웃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남한이 더 잘 산다는 것을 알지만 북한 민중이 남한을 택할 것인가, 북한을 택할 것인가는 체제의 우월성과 별개의 문제이다(PSJ)”, “북한 사회는 가난해도 그저 순종만하면 마음은 편안하다(PSJ)”, “이러한 수치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북한에서 ‘자주’는 매우 긍정적 의미로 가지고 있다. 공영매체에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세뇌시킬 정도로 ‘자주’라는 용어를 반복하고 있고, 자주를 매우 긍정적 의미로 해석한다. 북한주민들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LSG)”,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살 뿐이지, 사상적 측면에서 북한 인민은 자부심은 있을 것이다(ACI)”,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를 것이다. 잘 안다면 북한의 체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005년도에 남자는 3.0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체 항목의 총점에서 각각 0.5점을 깎으면 더 현실적인 점수가 나올 것 같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후에, 또는 권력이 전복된 후, 친중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에게 하나의 자치주 형식으로 복속되

고 북한과 남한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다(KYH)”, “북한에서 통제사회, 독재사회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북한에서 남한 사회를 매우 복잡한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식 사회주의보다 더 낫다는 것에는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KDS)”, “북한사회에서 대중들은 조직생활에 대한 염증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그 체제에 태어나서 수십 년간 살아와도 집단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자유에 대해 동경하고 있다. ‘주간총화를 월간총화로 바꿔도 짊어질 것 같다’는 푸념을 할 정도다(CJS)”, “일반사람들은 4점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엘리트층에는 3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엘리트층도 남한의 민주주의보다는 스웨덴식의 유럽식 자본주의를 더 높이 평가한다. 유럽의 자본주의가 완전한 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LDH)”, “일반 사람들은 무엇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잘 모른다. 남한의 민주화 과정에서 거리에서 시위(데모)가 있었을 때,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시위가 가능한지 의아해 했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통제가 철저해서 시위를 위해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CJH)”.

(6) 소결론

설문결과 북한의 공식이념인 주체사상이 내면화되지 않고, 체제유지의 핵심 중 하나인 지도자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체제와의 비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집단주의 정신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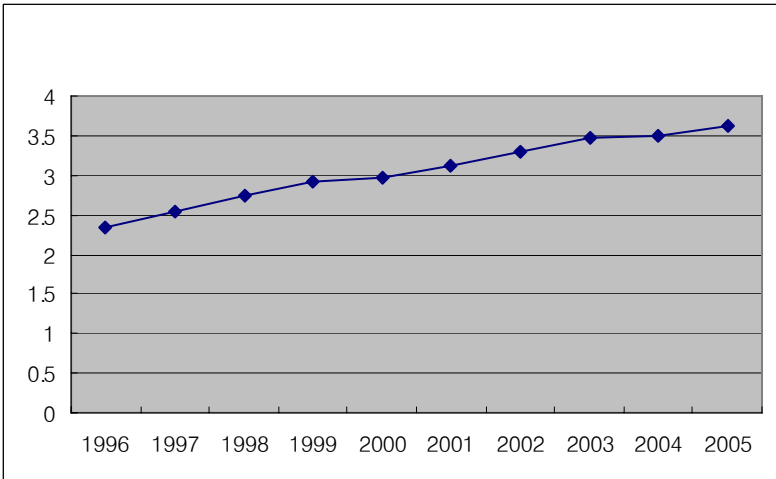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체제 유지의 중심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념적, 정치적 정통성 확립을 위해 주민교양과 강제를 혼용하여 주민을 통합하려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목표를 쉽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주체사상의 변용인 ‘붉은기 정신’, ‘선군사상’ 등을 내세워 이념적 통합을 시도하는 한편, 가장 잘 조직화되고 충성심이 강한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념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더 지탱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나. 미래에 대한 비전

(1)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림 II-7> 미래에 대한 희망 여부



<표 II-7> 미래에 대한 희망 여부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60	2.69	2.92	2.93	3.08	3.24	3.34	3.50	3.50	3.58
여자	2.27	2.50	2.70	2.90	2.92	3.06	3.28	3.44	3.50	3.66
합계	2.34	2.54	2.75	2.91	2.97	3.12	3.30	3.46	3.50	3.63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33	1.67	2.00	2.00	2.00	3.00	3.00	3.50	3.50	3.50
함경도	2.32	2.52	2.75	2.92	2.95	3.10	3.24	3.41	3.50	3.57
평안도	2.67	2.63	2.69	2.71	2.93	3.08	3.67	3.73	3.64	3.80
황해도	2.71	2.83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양자강도	2.67	2.67	2.67	2.29	2.33	2.33	2.83	3.20	3.00	3.50
강원도	1.56	2.00	2.50	2.75	3.00	3.00	2.50	2.50	2.50	4.00
합계	2.33	2.51	2.74	2.87	2.91	3.07	3.25	3.42	3.47	3.59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50	2.63	2.91	3.07	3.06	3.22	3.28	3.45	3.52	3.63
농민	2.36	2.67	2.76	3.31	3.18	3.22	3.13	3.29	3.60	3.60
인테리	1.69	1.88	2.07	1.92	1.91	2.30	2.80	2.87	3.25	3.38
학생	1.97	2.13	2.29	2.41	2.54	2.83	3.00	3.33	3.25	3.50
군관	2.33	2.50	2.50	2.67	3.17	3.20	3.40	3.40	3.40	3.80
하전사	2.75	2.75	2.75	2.75	3.00	3.00	3.50	3.50	3.50	3.50
대외일군	1.50	2.00	2.50	3.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35	2.51	2.72	2.88	2.93	3.10	3.21	3.38	3.47	3.60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85	2.09	2.38	2.57	2.67	2.88	3.13	3.43	3.57	3.80
기본군중	2.17	2.41	2.62	2.72	2.77	3.00	3.15	3.36	3.47	3.59
동요계층	2.63	2.74	2.89	2.98	2.97	3.07	3.15	3.20	3.35	3.46
적대계층	2.82	2.91	2.94	3.29	3.43	3.50	3.77	3.80	3.78	3.86
합계	2.31	2.50	2.69	2.83	2.89	3.06	3.22	3.37	3.48	3.61

북한주민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판도라의 상자’에는 ‘희망’만이 남아있다는 데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면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북한은 ‘혁명적 낙관주의’를 강조해 왔다. “가는 길 험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내일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구호가 있는 것만 보아도 북한의 현실이 암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민족통일’을 희망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통일만 되면 무엇이든 해결되고, 고생도 끝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틈만 있으면 통일을 외치고 노래한다. 북한 당국은 대내적 모순을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기 위해 미국은 통일의 방해세력이고, 주한미군은 그 첨병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²⁶

²⁶ 『평양방송』, 2006. 5. 3. 평양방송은 주한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 6.15 공동선언 채택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이념으로 하는 통일시대가 펼쳐졌고, 주한미군이 6.15 통일시대의 장애로 남아있으며, 미국의 대(對) 한반도 지배전략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6.15 공동선언 이행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경제난의 원인도 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에 대적하기 위한 군사비의 과다지출 때문이라고 북한주민들은 생각한다. 북한 지도부의 실책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난관은 통일이 되어야 해결되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들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는 ‘악마’인 것이다.

어쨌든 <그림 II-7>과 <표 II-7>에서 보듯이 조사결과는 3.61정도를 나타냈고, 이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거의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거의 모두가 체념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 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여자가 3.66으로서 남자의 3.58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들이 더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여자들이 실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여자들이 더 컸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상회담을 통해 소원인 통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여자들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강원도가 4.00을 나타냈다. 주지하듯이 강원도는 북한체제나 김정일 정권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평안도가 3.80으로서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 상대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비교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양강도·자강도 지역이 2005년들어 비관적인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매우 척박한 지역으로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희망이 더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2년 7·1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가 더 비관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어쩌면 북한 당국이 큰 정책적 실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배급제에 익숙한 주민들이 개인경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폭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7·1조치 이후 인플레이션, 물자품귀, 부익부빈익빈, 관료부패 증가 등 매우 부정적 요소들만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나타냈다.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을 대외일군들이 부정적인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군관과 노동자들이 각각 3.80, 3.63으로서 희망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7·1조치 이후 자율성 증대에 따른 불안감 증대가 컸다는 점일 것이다. 배급제가 약화됨에 따라 일반주민들은 장래가 암담하고, 심리적 아노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의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것을 볼 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는 통일이나 장래에 대한 희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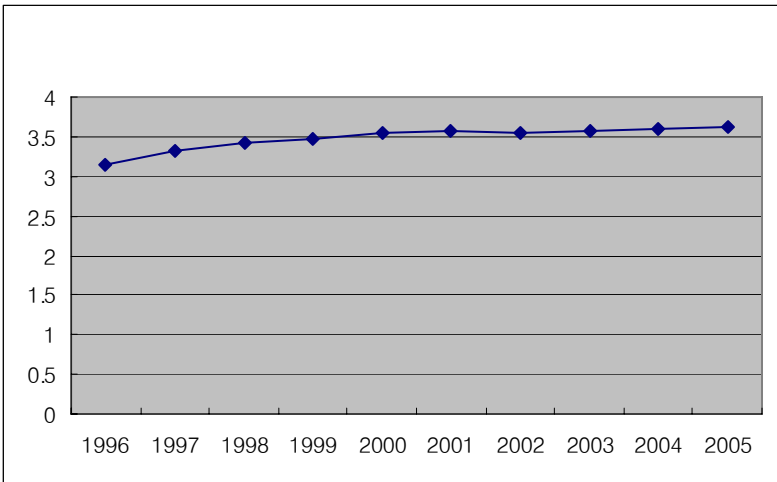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86으로서 가장 비관적이었다. 이것은 7·1조치 등 보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적대계층마저 장래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즉, 통제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이 많은 계층이 김정일 정권의 약화를 목도하면서 사회의 미래를 가장 비관적으로 본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아울러 핵심계층이 3.80을 기록함으로써 체제유지의 근간이 되는 핵심계층까지 북한사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 것은 북한 당국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능력이 탁월하면 주어진 역할을 부여하였다(JNS)”, “희망이라면 지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변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것이다.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을 볼 때, 북한 대중도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지지와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PSJ)”, “생활적 측면에서 미래에 희망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여자가 더 나쁜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 당과 정부의 지침대로는 북한에서 잘 살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노약자가 재량대로 살기 힘들니까 노약자가 일반 사람보다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LSG)”, “남한은 제2의 7·1조치를 기대하겠지만, 북한에서 7·1조치를 단행하고 겁을 먹었고 다시 그러한 조치를 내리기 힘들 것이다(ACI)”, “북한사회에서는 신분계층이 고정되어 있어서 희망이란 것이 없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국가에서 배급도 주지 않으며 고위간부도 못되기 때문에, 삶에서 희망이 없다. 그래서 국가재산을 어떻게 남용하고 텃밭을 가꾸어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고민을 한다. 집권엘리트도 지위가 고정된 건 마찬가지이다. 외무성에 1,600명 정도 있는데 200명만 해외에 나가고 나머지 1,400명은 심부름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혜 받지 못하는 1,400명은 일본과의 무역에 붙어서 외화벌이에 나서기도 하였다. 외교관들은 CNN 등 해외뉴스, 남한방송·신문을 접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희망이 더 없다. 김정일을 잘 아는 권력층이 체제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외일꾼이 3명이지만 4.0의 평가를 내린 것은 응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KDS)”, “부정적 평가가 타당할 것이다(LDH)”, “탈북자가 10년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 인민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

문이다. 그것은 북한체제에서 자신의 미래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치가 3, 4가 나오는 것에 수긍할 수 있다. 일반 인민과는 달리 간부계층들은 비교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더 가졌을 것이다(CJH)”.

(2) 실질적 대가

<그림 II-8>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유무



<표 II-8>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유무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3.24	3.33	3.39	3.36	3.41	3.46	3.45	3.49	3.47	3.47
여자	3.12	3.32	3.43	3.50	3.60	3.60	3.59	3.62	3.69	3.74
합계	3.15	3.33	3.42	3.46	3.54	3.56	3.54	3.57	3.60	3.63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33	2.33	2.00	2.00	2.00	2.00				
함경도	3.15	3.35	3.45	3.51	3.60	3.60	3.55	3.58	3.57	3.63
평안도	3.12	3.06	3.19	3.29	3.36	3.62	3.45	3.50	3.50	3.44
황해도	2.71	3.00	3.5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양자강도	2.67	2.78	2.78	2.86	2.83	2.83	3.17	3.25	3.67	3.67
강원도	3.33	3.67	3.63	3.50	3.33	3.50	4.00	4.00	4.00	
합계	3.12	3.31	3.40	3.44	3.52	3.54	3.52	3.55	3.56	3.60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3.16	3.33	3.44	3.46	3.55	3.57	3.47	3.46	3.52	3.57
농민	3.17	3.50	3.59	3.71	3.67	3.60	3.44	3.50	3.50	3.50
인테리	2.28	2.66	2.77	2.79	2.91	2.91	3.56	3.71	3.57	3.71
학생	3.16	3.29	3.32	3.44	3.61	3.71	3.82	3.78	3.88	3.88
군관	3.14	3.14	3.14	3.14	3.17	3.00	2.80	2.80	2.80	2.50
하전사	3.25	3.50	3.50	3.75	3.67	4.00	4.00	4.00	4.00	4.00
대외일군	3.33	3.50	3.50	3.50	4.00	4.00	3.00	4.00	3.00	4.00
합계	3.11	3.30	3.38	3.42	3.50	3.51	3.49	3.49	3.52	3.57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69	2.94	3.23	3.13	3.26	3.28	3.20	3.27	3.33	3.47
기본군중	3.10	3.35	3.39	3.42	3.49	3.48	3.48	3.45	3.53	3.63
동요계층	3.34	3.47	3.53	3.60	3.64	3.66	3.53	3.56	3.54	3.56
적대계층	3.34	3.40	3.35	3.50	3.58	3.70	3.78	3.71	3.83	3.75
합계	3.13	3.32	3.40	3.44	3.51	3.53	3.48	3.47	3.52	3.58

북한 주민들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민들의 사기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본래 북한 사회주의는 보상체계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일의 양에 관계없이 배급을 받는 체제였다. 따라서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1966년부터 분조관리제가 본격화되고,²⁷ 인센티브제도가 극히 일부 분야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중앙공급체계가 무너지고, 주민들이 각자 자력갱생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으면서 개인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장마당이 발달하고 암시장이 확장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일탈행위가 확대되었고, 북한당국은 2002년 7월부터 봉급현실화, 지방정부기구의 자율성 확대, 개인장사 허용 등 야심찬 7·1 조치를 취하였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에 의한 차등급여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소위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 개인별 월급이 많게는 2~3배까지 차이가 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기업소나 농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일반 기업소에서는 월급을 몇 개월만에, 그것도 몇 백원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7·1조치’를 통해 근로자 월급이 2,000원 정도로 올랐으나 공장가동이 중지되면서 월급자체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나 농민들은 개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²⁷ 분조관리제는 김일성이 1965년 5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1966년부터 북한의 각 협동농장에서 실시함.

결국 국가에 의한 보상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소의 능력에 따른 보상제의 도입은 별무성과로 끝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주민들 불만도 점증하고 있는 형국이 현재 북한의 현주소이다. <그림 II-8>과 <표 II-8>에서 보듯이 정당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3.60 정도를 나타내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보면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여부에 대해 여자가 3.74로서 남자의 3.47보다 높았다. 아직도 남존여비 관행이 살아 있는 북한에서 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자에 대한 편견이 심한 북한이 여자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3.63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인간적인 대우가 주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북한내 현실인 것 같다.

둘째, 지역적으로는 강원도가 4.00을 기록하였고, 양강도·자강도가 3.67로서 대우가 앓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고산지대로서 척박한 자연환경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난이 지속된 상황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2000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우가 더 좋아졌던 점이다. 아울러 주목할 일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는 댕가가 더욱 열악해졌다는 점이다. 7·1조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보다는 더욱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하였고, 학생은 3.88, 인테리는 3.71로 나타나 고급인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장사나 사업경험

이 없는 인테리들은 심한 좌절을 느낀 것 같고, 모두로부터 소외 당하는 신세가 된 것 같다. 특히 2002년 7·1조치는 인테리들을 더욱 외소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다.

넷째, 계층적으로는 적대계층이 3.75로서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은 것 같다. 적대계층은 신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업취득이 어려웠을 것이고, 비록 직장을 얻었을지라도 배분과정에서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7·1조치 이후 대우가 약간 호전된 점이다. 즉, 2002년 3.78에서 2003년 3.71로 대우가 좋아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대외일꾼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럽다(JNS)”, “노동에서 일한대로 대우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은 급여를 주는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터에서 받은 보상보다 오히려 일터를 벗어나 밖에서 벌어들이는 보상이 더 크다(LSG)”, “공장 가동률이 30%인 상황에서 공장에 출근한 사람보다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월급이 사실상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일한 대가가 보상받기 힘들다(ACD)”, “일한 것이 10이라면 그 중 1만 내 것이 되니까, 일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군대도 자력갱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착취를 많이 당하는데 보상이 없다. 그래서 하전사의 평가가 4.0 나오는 것이 이해될 만하다(CJS)”, “월급도 못 받을 뿐더러 일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KDS)”, “사회구조상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 국정가격과 도덕은 없어진지 오래이다. 90% 이상은 본업이 아니라 부업에 의해 살아간다(LD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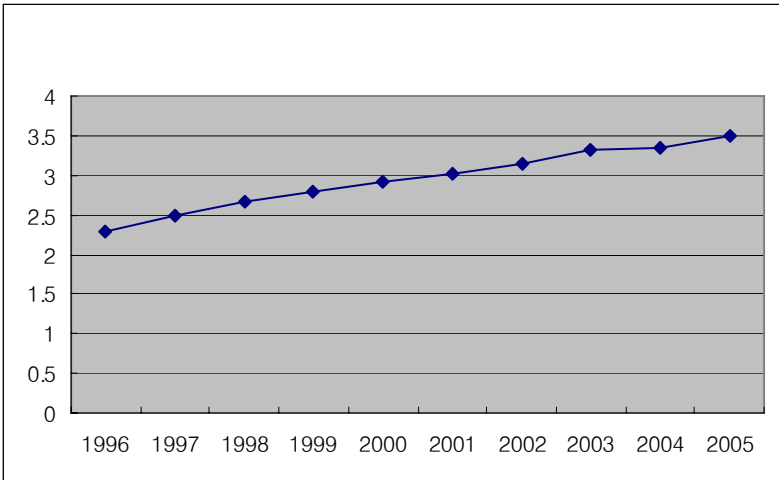
(3) 소결론

미래에 대한 비전 여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곤경이나 비참함을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체념과 자포자기가 만연하여 체제가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설문결과 당에서 주어진 원칙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가난과 절망만 남을 뿐 아무 희망도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인해 일터에서 제 때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한층 제고된 상태이다.

다.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1)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그림 II-9> 자주성 원칙에 대한 긍지감 유무



<표 II-9> 자주성 원칙에 대한 긍지감 유무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55	2.61	2.76	2.81	2.98	3.05	3.05	3.29	3.30	3.41
여자	2.23	2.44	2.64	2.78	2.90	3.01	3.19	3.32	3.38	3.56
합계	2.30	2.48	2.67	2.79	2.93	3.02	3.14	3.31	3.35	3.50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33	1.67	2.00	2.00	2.50	3.00	3.50	4.00	4.00	4.00
함경도	2.28	2.47	2.64	2.77	2.89	3.01	3.10	3.23	3.28	3.44
평안도	2.42	2.44	2.63	2.71	2.86	3.00	3.33	3.55	3.55	3.60
황해도	2.86	3.00	3.75	3.75	3.50	3.50	3.50	3.50	3.50	3.50
양자강도	2.22	2.22	2.56	2.43	2.50	2.50	2.67	3.25	3.00	3.00
강원도	2.13	2.38	2.86	2.75	2.75	2.67	2.50	2.50	2.50	4.00
합계	2.28	2.46	2.65	2.76	2.87	2.98	3.11	3.27	3.31	3.47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24	2.39	2.60	2.70	2.78	2.88	2.97	3.09	3.15	3.34
농민	2.48	2.89	2.85	3.08	3.09	3.33	3.38	3.71	3.71	3.83
인테리	1.94	2.19	2.27	2.25	2.27	2.55	2.80	3.38	3.38	3.50
학생	2.19	2.29	2.64	2.84	3.33	3.43	3.38	3.55	3.60	3.60
군관	2.71	2.86	3.00	3.00	3.29	3.17	3.33	3.33	3.33	3.60
하전사	3.00	3.00	3.00	3.00	3.33	3.00	3.50	3.50	3.50	3.50
대외일군	2.00	2.00	2.00	2.50	3.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26	2.44	2.62	2.74	2.87	2.97	3.07	3.24	3.29	3.45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층	1.94	2.38	2.63	2.61	2.75	2.75	3.12	3.29	3.35	3.56
기본군층	2.17	2.33	2.44	2.53	2.63	2.85	2.85	3.07	3.21	3.41
동요계층	2.54	2.64	2.81	2.88	3.11	3.14	3.21	3.46	3.48	3.60
적대계층	2.57	2.62	2.76	3.07	3.14	3.17	3.42	3.60	3.56	3.43
합계	2.27	2.44	2.60	2.70	2.84	2.95	3.06	3.28	3.35	3.50

북한은 그 어느 국가보다 더 ‘자존심’을 중시한다. 식량난 때문에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으면서도 인도요원이 기분이 나쁠 정도로 도도한 것은 그 하나의 증거이다. 물론 최근에는 그 정도가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는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6자회담 복귀문제와 관련하여 “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나갈 수 없다.”²⁸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를 보면 북한이 자존심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알 수 있다.

북한은 ‘자주의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자주라는 용어를 국가적 지표로 삼아왔다. 특히 1955년 12월 ‘주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자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지켜야 할 준범이 되었다. 당시 소련에서 발생한 스탈린 비판이 북한까지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김일성은 방어적 차원에서 자주를 주장했다. 소련파들이 배타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김일성을 소련에서의 반독재 분위기를 이용하여 축출하려했기 때문에 김

²⁸ 2006. 8. 26.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19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계획 포기를, 미국은 평화공존을 공약했다.”며 “우리는 평등한 원칙에서 합의를 이행하자는 입장이고 이 합의가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으므로 6자회담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6자회담 미복귀 이유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들면서 “우리는 제재 모자를 쓰고는 절대로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함.

일성은 ‘외세’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자주를 주장했다.

이후 196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소이념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은 자주를 더욱 강조하였고, 이것은 결국 ‘폐쇄적 민족주의’로 전변되었다. 이후 자주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전부문에 걸쳐 정책적 가이드 라인이 되었고, 북한의 고립은 비례하여 심화되었다. 설문결과 <그림 II-9>와 <표 II-9>에서 보듯이 긍지감 여부는 3.47정도를 기록하여 자주성에 대한 긍지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 이유는 식량난으로 인해 외국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긍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에 대한 긍지가 덜 하였다. 여자는 3.56, 남자는 3.41로서 상대적으로 경제난을 더 심각하게 경험한 여자들이 자주에 대한 긍지를 덜 느꼈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둘째, 지역별로는 평안도가 3.60으로서 자주에 대한 긍지가 낮았다. 그 이유는 평안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재해가 심했고, 그로 인한 자괴감도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특징 중의 하나는 양강도·자강도 및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자주에 대한 긍지가 높은 것이다. 아마 강원도는 남한과 대치하는 전연지대로서의 특성때문인 것 같고, 양·자강도는 상대적으로 혁명사적지가 많으면서 지리적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존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하였고, 농민이 3.83으로서 자주에 대한 긍지가 낮았다. 대외일군들은 해외 여행 경험이 많아 체제에 대한 긍지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농촌에서

의 경제난 심화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주체농법에 의해 수 십년간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로서는 식량난 때문에 인간이 죽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만큼 자주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 태도도 높았을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군관 및 하전사들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7·1조치 이후 자주에 대한 긍지감이 강했다는 점이다. 아마 이것은 군부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광폭정치의 승리’라고 교육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²⁹

넷째, 계층별로는 동요계층이 3.60으로서 가장 높았다. 동요계층은 자주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난을 맞이함으로써 자주에 대한 회의가 그만큼 컸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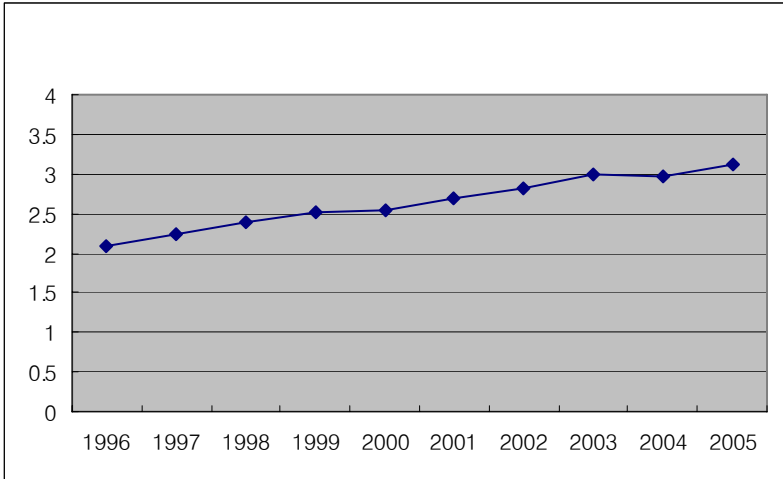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현 물질생활이 갱신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PSJ)”, “나쁜 평가를 내린 것도 경제적인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양에서 평가가 나빴다. 사실 북한에서 평양이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과거에는 혜택이 많았는데, 과거와 달리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 타 지역 사람들이야 원래 혜택이 별로 없었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도 그 이전과 차이가 작았다고 볼 수 있다. 평양지역은 오히려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LSG)”, “평양에는 정보유입이 많기 때문에 평양사람들은 비교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ACI)”, “경제적 요인에 따라 ‘궁지’를 가질 것이다. 북한이라는 빈곤한 사회에서 궁지를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

²⁹ 『평양방송』, 2001. 6. 18.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를 ‘특기할 민족사적 인류사적 사변’으로 치켜세우면서 이를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광폭정치’의 결실이라고 주장했음.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며칠밖에 못 간다. 예를 들어 북한 대중들이 김정일 앞에서 눈물 흘리더라도 감동받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북한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가난한 국가가 그들의 거주지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줄 수 없다. 그들은 대중동원에 참가하기 위해 걸어서 왔고, 선전대회가 끝나면 걸어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라지고 동원이 해체되면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이 멀어 배고프고 다리 아프다는 생각만 할 것이다. 그때에는 언제 내가 김정일 앞에 눈물을 흘렸냐는 듯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이럴 때 빵이나 하나 더 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핵실험 등을 통한 국가위상 향상효과도 이와 같다(KYH), “평양사람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북한의 생활과 사회에 대해 망신을 많이 당하는 것을 겪는다. 그래서 평양사람들이 외부를 더 많이 접하고 외부정보를 더 많이 아니까 그들의 공지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이해된다(CJS)”, “정치는 실제 생활과 거리가 멀고, 경제가 가장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LDH)”.

(2)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그림 II-10> 자주성 원칙의 기여도



<표 II-10> 자주성원칙의 기여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23	2.27	2.41	2.39	2.40	2.55	2.63	2.74	2.82	2.91
여자	2.04	2.22	2.38	2.57	2.62	2.78	2.96	3.15	3.09	3.25
합계	2.08	2.23	2.39	2.52	2.55	2.70	2.83	2.99	2.98	3.11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1.67	2.00	2.50	2.50	3.50	3.50	4.00	4.00	4.00
함경도	2.08	2.24	2.41	2.53	2.54	2.69	2.83	2.98	2.95	3.04
평안도	2.21	2.20	2.20	2.62	2.77	2.83	3.00	3.20	3.10	3.22
황해도	2.43	2.33	3.25	3.33	3.50	3.50	3.50	3.50	3.50	4.00
양자강도	2.11	2.11	2.11	1.86	2.00	2.00	2.17	2.20	2.25	3.00
강원도	1.63	2.00	2.29	2.25	2.25	2.33	2.00	2.00	2.00	2.00
합계	2.08	2.22	2.39	2.51	2.55	2.69	2.82	2.97	2.95	3.08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02	2.14	2.35	2.45	2.52	2.58	2.76	2.81	2.79	2.89
농민	2.36	2.52	2.60	2.92	2.82	2.89	2.88	3.43	3.33	3.33
인테리	1.94	2.06	2.38	2.15	2.25	2.45	2.60	3.00	3.00	3.00
학생	1.82	2.07	2.19	2.44	2.64	2.92	2.92	3.10	3.22	3.22
군관	2.57	2.57	2.71	3.00	3.00	3.17	3.17	3.17	3.17	3.40
하전사	2.00	2.00	2.00	2.00	2.00	2.00	2.50	2.50	2.50	2.50
대외일군	2.00	2.50	2.50	3.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05	2.18	2.36	2.49	2.56	2.67	2.80	2.93	2.92	3.01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97	2.14	2.47	2.55	2.58	2.68	2.81	3.06	3.12	3.27
기본군중	2.03	2.17	2.31	2.44	2.50	2.69	2.83	3.00	2.97	3.13
동요계층	2.38	2.46	2.57	2.67	2.67	2.80	2.85	2.89	2.93	3.04
적대계층	1.82	1.95	2.06	2.15	2.31	2.36	2.55	2.80	2.75	2.50
합계	2.09	2.22	2.38	2.50	2.54	2.69	2.80	2.96	2.97	3.08

북한에서의 자주는 아마도 대외 행동지침이 아닐까 생각된다. 자신들의 독특한 체제인 주체사회주의를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일종의 사상적 보호막인 것이다. 주체사상의 기본적 사유체계를 ‘자주’로 설정하고 누구나 자주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이지만 일단 그것이 정치화되면 수령이나 국가의 자주성으로 전변되고, 인민들은 ‘비자주적’으로 전략한다. 누구나 수령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수령의 지침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한 ‘수령절대주의’가 자리를 잡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수령의존주의’가 팽배하여, 주민들이나 관료들이 모두 수동적인 인간으로 변모한다. 열심히 일하는 대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난이 심화되었고, 정부 당국은 모든 주민들에게 배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배고픈 주민들은 김정일과 정부를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자주성’ 원칙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나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은 매우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범으로서 남한, 중국 등의 조언을 듣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에서 보듯이 ‘자주성’이 ‘고립성’으로 변했다.

주민차원에서는 ‘자주’가 경제난을 일으킨 주범이 되고 있다. 지나친 ‘자주’는 대외관계를 죄악시키고 선진화된 우수 과학기술 도입을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자주’는 폐쇄적 저항민족주의를 생산해 냈고, 미국은 물론 거의 모든 외국을 적대시하도록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주’란 용어를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자위감을 줄 지 몰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립으로 인한 기아와 고통만 가져다 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설문결과 <그림 II-10>과 <표 II-10>에서 보듯이 자주성의 기여도가 약 3.07로 나타나 북한주민들이 자주성이 체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체제유지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결과를 사

회경제적 배경변수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여자는 3.25, 남자는 2.91로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자주’에서 오는 부작용을 더 고통스럽게 느낀 것 같다. 실제로 장마당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거의 다 중국제품이기 때문에 ‘자주’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자들이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과 황해도가 4.00을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국문물을 많이 접하는 지역이 자주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물론 경제분야에서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경제난 이후 ‘자주’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7·1조치 이후 더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 가장 높았다. 대외일군들은 외국과의 거래과정에서 ‘자주’의 허구성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군관이 3.40으로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민이 3.33을 기록하였다. 군관이나 농민들은 ‘주체’나 ‘자주’를 준수한 결과가 더 나쁘게 나타난 것을 일선에서 목도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2000년 정상회담시기에는 ‘자주’에 대한 평가가 잠시 좋아졌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평가가 나빠졌다.

넷째, 계층별로는 핵심군중이 3.27로서 오히려 더 나쁜 평가를 내렸다. 핵심군중이 이러한 평가를 내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그 동안 혜택을 많이 받아 온 상태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축소되자 불만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그 증거는 2002년 7·1조치 이후 평가가 더 나빠진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적대계층이 2.50으로서 2002

년 이후 자주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진 점이다. 이는 그 동안 적대계층에 대한 억압이 7·1조치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집권층에서는 사상, 국방 등에서 체제유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PSJ)”, “북한군도 자급자족하는 실정에 있다. 군관이 사병보다는 사명감이 더 클 것이다. 북한의 장년층이나 젊은 계층이나 자주성은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다. 북한 생활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 인민은 자주성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LSG)”,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과 소련과 등거리외교를 하면서 자주성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수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성의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지 자존심만 내세우면 고립만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KDS)”, “평양에서 최근에 평가가 나빠졌다. 평양은 과거 못 살 때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고, 최근에 이르러 평양의 삶이 나빠졌다. 그리고 평양은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KKJ)”.

(3) 소결론

북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를 주장하고 주민들도 이를 생활 지표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는 김일성·김정일 체제 유지의 통치담론으로만 활용되었을 뿐 주민들의 실제생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주’에 대한 긍지도 갖지 못하고 있고, ‘자주’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자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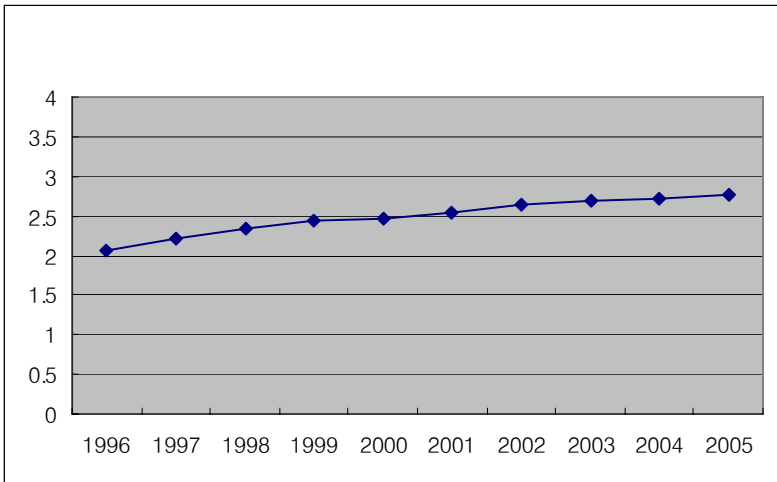
이 체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파기되어야 할 원칙으로 주민들은 간주하고 있다.

2. 엘리트분야 평가

가. 엘리트의 사기

(1)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

<그림 II-11> 간부의 지위에 대한 긍지감



<표 II-11> 간부의 지위에 대한 긍지감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25	2.35	2.42	2.57	2.66	2.75	2.80	2.85	2.79	2.84
여자	2.01	2.18	2.30	2.37	2.36	2.41	2.52	2.55	2.66	2.71
합계	2.07	2.22	2.33	2.43	2.46	2.53	2.63	2.68	2.72	2.77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00	2.33	1.50	1.50	1.50	1.00	1.00	1.00	1.00	1.00
함경도	2.02	2.17	2.30	2.38	2.43	2.49	2.61	2.67	2.68	2.75
평안도	2.12	2.13	2.20	2.46	2.62	2.83	2.90	2.89	3.00	2.88
황해도	2.14	2.17	2.25	2.25	2.50	2.50	2.50	2.50	2.50	2.00
양자강도	2.78	2.78	2.78	2.57	2.50	2.50	2.67	3.25	3.33	3.33
강원도	1.39	1.78	2.00	2.25	2.25	2.67	2.50	2.50	2.50	4.00
합계	2.03	2.18	2.29	2.38	2.43	2.50	2.61	2.67	2.69	2.74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04	2.20	2.34	2.42	2.46	2.54	2.59	2.54	2.59	2.67
농민	2.11	2.41	2.30	2.62	2.91	2.75	2.71	3.00	3.00	3.00
인테리	1.97	2.09	2.23	2.00	2.27	2.36	2.60	2.62	2.75	2.75
학생	1.75	1.83	2.05	2.20	2.00	2.40	2.60	3.13	3.00	3.00
군관	2.86	2.86	2.86	2.86	2.86	2.67	2.67	2.67	2.67	2.80
하전사	2.25	2.25	2.25	2.25	2.33	2.50	2.50	3.00	3.00	3.00
대외일군	3.00	3.00	3.00	3.00	4.00	4.00	3.00	3.00	2.00	2.00
합계	2.05	2.20	2.32	2.40	2.48	2.54	2.61	2.66	2.67	2.74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71	1.77	2.00	2.10	2.18	2.29	2.50	2.57	2.64	2.79
기본군중	1.83	2.03	2.14	2.20	2.31	2.46	2.51	2.56	2.63	2.66
동요계층	2.36	2.44	2.57	2.57	2.53	2.49	2.59	2.64	2.67	2.80
적대계층	2.00	2.19	2.18	2.64	2.79	2.91	3.10	3.22	3.14	2.80
합계	1.97	2.12	2.24	2.35	2.41	2.49	2.59	2.66	2.69	2.74

북한 체제유지의 근간 중 하나는 상층 권력엘리트들의 충성심과 능력이다. 상층 권력엘리트들은 어떤 이유에서이든 체제 및 김정일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 정권 몰락 시 동시에 자신들도 몰락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³⁰

김일성은 생존 시 체제유지에 필요한 권력엘리트 선발을 위해 당성 즉, 충성심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았다. 전문성도 겸비할 것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수 많은 정적들의 도전을 받은 김일성이 사전에 정치적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관료 임명시 충성심을 제1의 자격기준으로 삼은 것이다.³¹

엘리트들의 긍지감은 상층엘리트와 하위엘리트 간에 괴리가 있다. 상층엘리트들은 김정일 정권 하에 그런대로 배급이 지속되고, 일정한 영향력이나 권한도 있기 때문에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긍지도 있지만 하위엘리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긍지감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³⁰ 북한 간부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6) 참조.

³¹ 자세한 내용은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특히 경제난으로 인해 하위엘리트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와 비례하여 주민들의 존경심도 쇠퇴해가기 때문에 하위엘리트들의 체제유지 자신감이나 자신의 지위에 대한 자긍심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하위관료들은 성실히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고 이것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그림 II-11>과 <표 II-11>에서 보듯이 관료들의 긍지감이 2.75정도를 기록하여 긍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2.5를 넘어섰기 때문에 관료들의 긍지감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 중의 하나가 관료들의 충성심과 긍지감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듯하다. 북한 간부들의 긍지감에 대한 조사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84, 여자는 2.71로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관료들의 긍지감이 낮다고 평가했다. 아마 그 이유는 남자들이 직장에서 관료들의 태도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료들이 부패는 했지만 그것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묵묵히 충실히 일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은 자신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여자들도 2000년에는 간부들의 긍지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둘째, 지역적으로 강원도 4.00, 양강도와 자강도가 3.33을 나타냈다. 강원도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지역 간부들이 지역 특성상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평양출신들은 1.00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다. 물론 평양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료들의 사기가 높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반면 양강도와 자강도는 척박한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효과도 반영된 것 같다.

셋째, 직업별로는 농민, 학생, 하전사 등이 3.00을 기록, 가장 높았다. 이들 직업군들이 접한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자질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외일군들은 2.00으로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다. 대외일군들은 직접 외화벌이를 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이 있었던 같다.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대외일군들의 역할이 더욱 커짐으로써 그 만큼 소명의식이 높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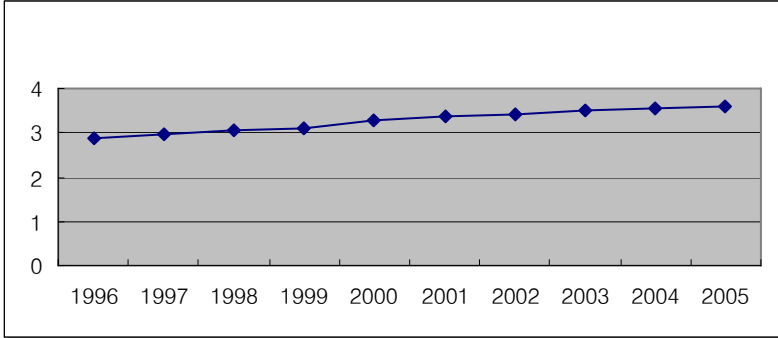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기본군중이 2.66으로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다. 이는 기본군중들이 북한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계층에 관계없이 3.0미만으로서 간부들의 자긍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적대계층은 3.75를 기록,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사회적 차별대우가 이처럼 간부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한의 대통령, 북한의 군과 남한의 군을 비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비교가 안된다. 경찰 및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는 가진 자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보다 자부심과 긍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PSJ)”, “북한에서 간부는 남들보다 잘 산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 평양이 1.0으로 나왔다. 그것은 평양 사람들이 그만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LSG)”, “북한에는 신분이 없을 것 같지만 북한에서 신분 간 차별은 매우 크다. 즉 ‘완장문화’가 있어서 하나의 자리를 꺾치면 그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다(ACI)”, “북한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간부의 긍지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낮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 북한에서 최근에 이룰수록 간부가 살기 좋아졌다. 그래서 간부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CJS)”, “당당한 긍지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긍지, 비법적 긍지라고 볼 수 있다(KDS)”, “자기 자리 하나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긍지를 그다지 못가질 것이다.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되려면 ‘보신주의’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 불만을 무마해야 하고 위에는 아부를 해야 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상위층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김정일 곁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 경쟁이 치열하며,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애쓰다(LDH)”, “일반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간부들에 대해 동경심이 있다. 그러한 동경심으로 인해 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을 수도 있다(KKJ)”.

(2) 사회주의원칙에의 충실성

<그림 II-12> 간부의 부정·부패 정도



<표 II-12> 간부의 부정·부패 정도

문11)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92	2.97	3.13	3.26	3.39	3.53	3.54	3.54	3.59	3.64
여자	2.86	2.99	3.05	3.02	3.22	3.28	3.34	3.48	3.52	3.60
합계	2.87	2.98	3.07	3.09	3.28	3.36	3.42	3.51	3.55	3.61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00	2.00	2.0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함경도	2.81	2.93	3.01	3.00	3.23	3.34	3.40	3.49	3.56	3.63
평안도	3.40	3.36	3.36	3.25	3.42	3.36	3.33	3.38	3.38	3.29
황해도	2.57	2.83	3.25	3.25	3.50	3.50	3.50	3.50	3.50	4.00
양자강도	2.67	2.67	2.89	3.00	2.83	3.00	3.17	3.50	3.33	3.33
강원도	2.89	3.00	3.38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83	2.94	3.04	3.06	3.25	3.34	3.40	3.49	3.55	3.61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91	3.03	3.15	3.16	3.24	3.41	3.42	3.47	3.50	3.52
농민	3.02	3.17	3.30	3.46	3.45	3.44	3.50	3.71	3.83	3.83
인테리	2.33	2.47	2.64	2.45	3.30	3.30	3.67	3.57	3.71	3.71
학생	2.38	2.46	2.52	2.56	3.00	3.09	3.09	3.67	3.63	3.75
군관	3.17	3.17	3.17	3.60	3.60	3.50	3.50	3.50	3.50	3.50
하전사	3.25	3.25	3.25	3.50	3.67	4.00	4.00	4.00	4.00	4.00
대외일군	2.00	2.00	2.50	3.00	4.00	4.00	4.00	3.00	4.00	4.00
합계	2.83	2.94	3.05	3.08	3.28	3.39	3.43	3.52	3.57	3.61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88	2.97	3.11	3.05	3.25	3.25	3.31	3.58	3.75	3.69
기본군중	2.72	2.86	2.99	3.00	3.17	3.29	3.40	3.49	3.51	3.59
동요계층	2.90	2.95	3.01	3.11	3.30	3.49	3.48	3.59	3.65	3.70
적대계층	3.17	3.23	3.29	3.38	3.62	3.60	3.67	3.50	3.67	3.75
합계	2.84	2.93	3.04	3.08	3.27	3.37	3.44	3.53	3.61	3.66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사회주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가는 북한사회주의체제 존속기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만일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수도자적’ 자세로 이를 참고 인내하며 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인민들도 이를 귀감으로 삼고 체제유지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면중복배식’으로 걸으려는 체제에 충성하는 듯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반체제적 행동을 보일 것이다.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부패정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 첫째, 중앙당의 일부 핵심간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간부들이 부패해 있다는 주장이고 둘째, 비록 일부 간부가 부패해 있지만 대부분의 간부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체제유지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거의 모든 간부들이 부패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뇌물만 있으면 사형수도 풀려나올 정도이고, 탈북자가 중국내에서 체포되어도 뇌물만 ‘고이면’ 재탈북이 가능하며, 북한내 거의 모든 비밀자료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들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뇌물만 바치면 안되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통행증 발급, 직장이동, 사면, 식량확보 등 그 동안 체제유지 때문에 거의 금기시되어 왔던 사안들이 돈이나 물건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특히 ‘선군정치’를 통해 군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체제유지의 최선봉장인 군부까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반면 간부들의 부패는 일부 민원부서나 국경지방 등 특수한 직책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부패의 정도도 그 규모가 미미하고, 설사 부패가 있다하더라도 김정일이 정규적인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각종 생활총화, 특별 압행점검, 사형 등 가혹한 처벌 등을 통해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북한인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체제붕괴 및 집단적 반체제운동과의 관계는 그것이 착취냐 단순한 부정부패 즉, 상호이익수수관계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단순한 이익수수관계라면 여타의 부패국가에서처럼 반체제로까지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인민에 대한 착취라면 그것이 누적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이다. 설문결과는 <그림 II-12>와 <표 II-12>에서 보듯이 3.62 정도를 기록하여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이유는 역시 경제난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하위관료들까지 배급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문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3.64로서 여자의 3.60보다 높았다. 부정부패에 대한 경험은 직장에 나가는 남자가 더 심하게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징적인 것은 2002년부터 부패에 대한 심각성이 줄어든 점이다. 아마 그 이유는 중앙 정부차원의 집중단속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지역적으로는 평안도가 3.29로서 가장 낮았고, 평양, 황해도, 강원도 등지는 4.00으로서 매우 높았다. 그 이유는 평양에서는 대도시 특유의 자유주의에 의해, 황해도·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직업별로는 하전사나 대외일군이 4.00으로서 가장 높았다. 대외일군은 직접 외화벌이를 하기 때문에 공금횡령 등의 부패가 심한 것 같고, 하전사들 입장에서는 군관들의 횡포나 부정부패가 더욱 부각되어 보였을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평가가 2000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점이다. 그 이유는 역시 경제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규율이나 정신무장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75로서 가장 높았다. 적대계층 입장에서는 간부들로부터의 요구수준이 더 높았을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뇌물액수나 횡수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

대계층이 느끼는 간부들의 부패정도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일반주민들에 비해 간부들이 부정·부패에 더 몰들어 있다. 일반주민들은 부정·부패할 것도 없다. 간부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래로부터 뇌물이 들어온다. 가령 상류층에서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만 달러 정도 건네준다. 혹은 5천 달러, 3천 달러 정도도 있다(JNS)”, “거의 많은 간부들이 부정부패에 몰들어 있었다. 그래서 부정부패에 관여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지위를 유지하기 힘든 처지에 있다(ACI)”, “과거에는 부정부패가 필요 없었다. 과거에는 대우가 좋았으나, 현재는 사회경제가 엉망이 되었다. 북한 사회가 더욱 빈곤해지면, 부정부패가 지속될 것이다. 평양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평양에는 간부가 많다. 그 지위를 유지하고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상부에 뇌물을 상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양에서 부정부패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LSG)”, “북한의 관료사회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가 높고, 평양이 수치가 높게(4.0) 나온다(KYH)”, “주요기관에 먼지를 털면 먼지가 안 나오는 데가 없다. 그리고 간부들 사이에서 아랫간부가 위 간부에게 주고 그 간부는 그 위의 간부에게 주는 식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뇌물은 만연되어 있어서 북한은 뇌물사회라 할 수 있다(KDS)”, “간부들이 3점 얼마 정도가 아니라 4라 할 수 있다. 저는 해외 나가 있으니까 뇌물을 주는 쪽이었다. 보안부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뇌물을 많이 받는다. 권력이 클수록 뇌물의 규모가 더 많은 편이다(CJS)”, “북한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

를 못 지킨다. 김정일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다고 간주한다. 김영남, 조명록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고 김정일은 그러한 사람들을 신뢰한다. 아무리 미워도 돈을 건네면 그 사람이 싫어하겠느냐, 이렇게 충고할 정도이다. 또한 부정부패를 안하면 워트 간부들이 너의 능력은 그것밖에 안되냐고 편잔을 준다. 뇌물은 성의의 표시라고 간주한다. 이제 뇌물은 착취이다. 더 나아가 강탈로 나아간다. 이제 뇌물은 시장화가 되어서 각각 뇌물 가격이 정해져 있다. 해외유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LD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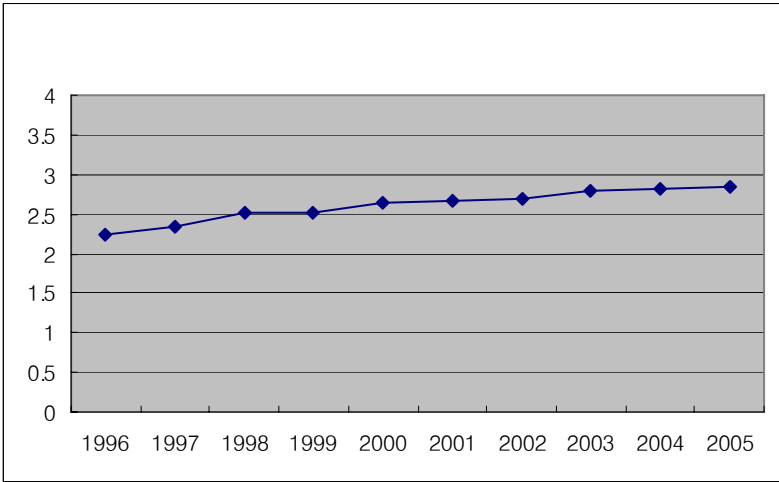
(3) 소결론

간부는 국가의 간성으로서 체제유지의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북한간부들은 충원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하기 때문에 자질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하위관료들이 경제난 때문에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관료들이 자긍심은 있지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철직당하고,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견고성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나. 엘리트 갈등

(1) 집단적 갈등 유무

<그림 II-13> 간부간 집단갈등 유무



<표 II-13> 간부간 집단갈등 유무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55	2.60	2.79	2.80	2.88	2.88	2.88	2.85	2.94	2.93
여자	2.16	2.27	2.42	2.40	2.56	2.57	2.60	2.77	2.74	2.78
합계	2.24	2.34	2.51	2.51	2.65	2.67	2.70	2.80	2.83	2.84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00	1.00	2.00							
함경도	2.25	2.34	2.52	2.51	2.62	2.62	2.66	2.73	2.74	2.78
평안도	2.36	2.50	2.67	2.64	2.91	3.00	3.00	3.25	3.25	3.14
황해도	2.33	2.00	1.67	1.50	1.50	1.50	1.50	1.50	1.50	1.00
양자강도	1.86	1.86	2.29	2.00	2.50	2.25	2.50	2.50	2.67	2.67
강원도	2.44	2.72	3.00	3.25	3.25	3.67	4.00	4.00	4.00	4.00
합계	2.25	2.34	2.52	2.51	2.64	2.65	2.69	2.77	2.79	2.81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28	2.35	2.56	2.51	2.62	2.68	2.71	2.76	2.76	2.71
농민	2.52	2.67	2.76	3.15	3.27	3.33	3.25	3.33	3.33	3.33
인테리	2.00	2.17	2.23	2.09	2.30	2.30	2.30	2.43	2.43	2.43
학생	1.95	2.00	2.06	2.18	2.50	2.50	2.43	2.50	2.60	2.60
군관	2.20	2.20	2.40	2.50	2.50	2.33	2.33	2.33	2.33	2.67
하전사	2.33	2.33	2.33	2.33	2.67	3.00	3.00	3.00	3.00	3.00
대외일군	1.00	1.00	1.50	3.00	3.00	3.00	3.00	3.00	4.00	3.00
합계	2.24	2.33	2.49	2.51	2.65	2.69	2.69	2.75	2.77	2.74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14	2.28	2.64	2.25	2.36	2.43	2.64	2.80	2.80	2.82
기본군중	2.10	2.19	2.32	2.40	2.54	2.67	2.66	2.72	2.72	2.67
동요계층	2.50	2.54	2.69	2.57	2.77	2.72	2.79	2.86	2.90	3.00
적대계층	2.45	2.61	2.63	2.83	3.00	3.00	3.00	3.14	3.33	3.25
합계	2.24	2.33	2.50	2.47	2.63	2.68	2.73	2.81	2.84	2.83

엘리트간 갈등은 일반적인 권력이론상으로는 필연적인 것이다. 권력은 끊임없이 개인간, 집단간 갈등을 수반하고, 권력이동이 발생한다. 전근대 국가나 사회에서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권력 엘리트간 갈등은 쿠데타나 궁정혁명, 민중혁명을 야기하였다. 물론 근대국가로 오면서 합법적인 정권교체가 제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관행은 소멸되었지만 권력엘리트간 갈등은 여전히 권력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시기별 형태는 달랐지만 권력엘리트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고 지위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간 갈등은 1956년 ‘8월종파사건’을 통해 거의 소멸되었고, 최고 권력자를 향한 보다 보다 높은 지위 점유를 위한 권력 엘리트간 갈등은 1960년대를 끝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위한 권력 엘리트간 갈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파벌을 형성하여 보다 높은 지위를 점유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군부내에서의 정치장교와 일반장교간 갈등, 당중앙위에서의 부처간 갈등, 공장내 당비서와 지배인간 갈등, ‘기관본위주의’에 의한 내각과 당간 갈등, 개인간 충성심 경쟁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이것이 최고권력 자체를 변경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각종 감시장치를 통해 분쇄되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설문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문항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그림 II-13>과 <표 II-13>

에서 보듯이 2.80정도로써 상대적으로 엘리트간 갈등이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정치사가 보여준 현실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 북한내 간부간 집단갈등의 존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93, 여자는 2.78로서 남자들이 간부들간 갈등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2000년 이전보다 그 이후에 간부들간 갈등 증가율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록 엘리트간 갈등은 존재하지만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매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해도는 1.00에 불과했지만 강원도는 4.00이었다. 이것은 간부간 갈등이 북한내 전체에, 그리고 모든 직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지역에서, 그리고 특수한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 이후 간부간 갈등의 증가폭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간부들도 안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 농민이 3.33으로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아마 농장에서 지배인과 초급비서간 갈등이 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체적으로는 1998년 이후 갈등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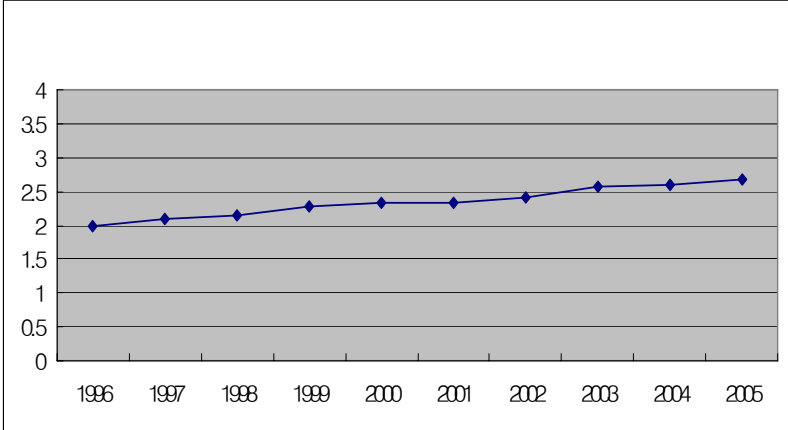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25로서 가장 높았다. 아무래도 적대계층은 간부들간 불화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간부들의 정상적인 경쟁까지도 자리다툼을 위한 갈등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대계층도 간부들의 갈

등에 대한 평가의 폭을 크게 두지는 않았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권력구도 자체를 간접적인 경쟁체제로 만들었다. 만약에 부진한 내용이 있으면 왜 못했냐고 추궁이 들어온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김정일을 통한 간접적인 경쟁체제를 만들었다. 이것은 충성 경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권력투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PSJ)”, “이러한 경쟁체제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JNS)”, “당 내에서 파벌싸움은 없었다. 당과 공장 및 일터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생산과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일부 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당이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LSG)”, “보위부와 안전부와의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부적인 알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KYH)”, “권력투쟁이라기 보다는 밥그릇싸움이다. 파벌 속에 온건, 강경파라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통전부,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원자력 공업위원회, 외무성이 그룹화되어 있다. 큰물은 외무성이다(KDS)”, “조직비서와 당비서 사이 갈등이 있고, 보위부와 안전부 사이의 갈등이 있다. 행정부처 사이의 의견갈등도 약간 있다(LDH)”, “간부들 사이에도 끼리끼리가 많다(KKJ)”.

(2) 제도간 이해 갈등 유무

<그림 II-14> 일반기관과 권력기관과의 갈등 유무



<표 II-14> 일반기관과 권력기관과의 갈등 유무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31	2.38	2.48	2.47	2.54	2.56	2.65	2.71	2.77	2.72
여자	1.91	2.01	2.05	2.22	2.21	2.21	2.25	2.48	2.42	2.63
합계	2.00	2.08	2.15	2.29	2.32	2.32	2.40	2.58	2.59	2.67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00	1.00	1.00	1.00						
함경도	2.00	2.08	2.17	2.30	2.31	2.32	2.39	2.54	2.55	2.66
평안도	2.00	2.07	2.07	2.25	2.33	2.36	2.44	2.87	2.75	2.71
황해도	2.00	2.20	2.00	2.00	1.50	1.50	1.50	1.50	1.50	1.00
양자강도	2.67	2.67	2.67	2.25	2.33	2.33	2.33	2.00	2.00	2.00
강원도	1.63	1.88	2.00	2.50	2.50	2.33	3.00	3.00	3.00	4.00
합계	2.00	2.09	2.17	2.29	2.31	2.31	2.39	2.54	2.54	2.64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02	2.07	2.16	2.27	2.30	2.34	2.40	2.50	2.47	2.55
농민	2.22	2.35	2.40	2.67	2.50	2.75	2.71	3.25	3.25	3.25
인테리	1.75	1.94	2.13	2.08	2.18	2.18	2.30	2.29	2.29	2.29
학생	1.68	1.79	1.89	1.82	1.75	1.75	2.14	2.50	2.60	2.60
군관	2.20	2.20	2.20	2.40	2.75	2.33	2.33	2.33	2.33	2.67
하전사	2.50	2.50	2.50	2.50	2.50	2.00	2.00	2.00	2.00	2.00
대외일군	1.00	1.50	1.5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합계	2.00	2.07	2.15	2.27	2.29	2.31	2.40	2.53	2.54	2.59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79	1.86	1.96	2.00	2.07	2.07	2.36	2.64	2.64	2.91
기본군중	1.90	1.97	2.02	2.21	2.25	2.34	2.32	2.45	2.43	2.48
동요계층	2.22	2.28	2.33	2.25	2.16	2.25	2.41	2.67	2.71	2.81
적대계층	2.06	2.24	2.31	2.50	2.58	2.22	2.50	2.29	2.57	1.75
합계	1.98	2.05	2.12	2.22	2.24	2.27	2.36	2.51	2.54	2.60

현재 북한에서는 체제 자체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경제난 이후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는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새터민들의 증언에서 보았듯이 제도자체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강력한 통제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북한에서는 ‘선군정치’가 본격화되었는 바, 이후부터 당조직과 군부와의 갈등이 서서히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으로는 당규약으로 조선노동당의 권한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 붕괴 및 경제난 이후부터 노동당의 권위가 실추되고, 특히 핵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군부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됨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방식도 군부위주로 전변되면서 군부의 위상이 노동당을 능가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 북한체제의 성격을 ‘전시공산주의체제’나 ‘군사독재체제’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군부의 힘이 막강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로 인해 노동당과 군부 간에 일정정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조선노동당의 대표적 실세인 장성택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철직’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군부의 대표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으로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강하고 노동당원이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즉, 북한군부도 조선노동당의 노선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북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중 하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부)간 갈등이다. 이들은 모두 권

력유지의 첩병이지만 보위부는 보다 강경한 반면, 인민보안성은 덜 강경하다는 점에서 권한행사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한다. 범법자에 대해 보위부는 강경한 처벌을 하는 반면,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보안성은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양 기관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소나 협동농장내에서는 당비서와 지배인간 갈등,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간 갈등, 군부내 총정치국과 총참모부간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처간 갈등은 경제난 이후 식량이나 자원배분을 중심으로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설문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문 역시 <그림 II-14>와 <표 II-14>에서 보듯이 평균 2.60으로서 심각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72, 여자는 2.63으로서 남자가 부처간 갈등을 약간 더 심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남자들은 일터에서 부처간 갈등 현장을 보다 많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남자는 갈등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강원도가 4.00, 황해도는 1.00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갈등의 빈도가 지역간, 직장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증거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전지역에서 부처간 갈등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이 특징이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은 4.00, 하전사는 2.00으로 나타나 직업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평균으로는 2.59를 나타내서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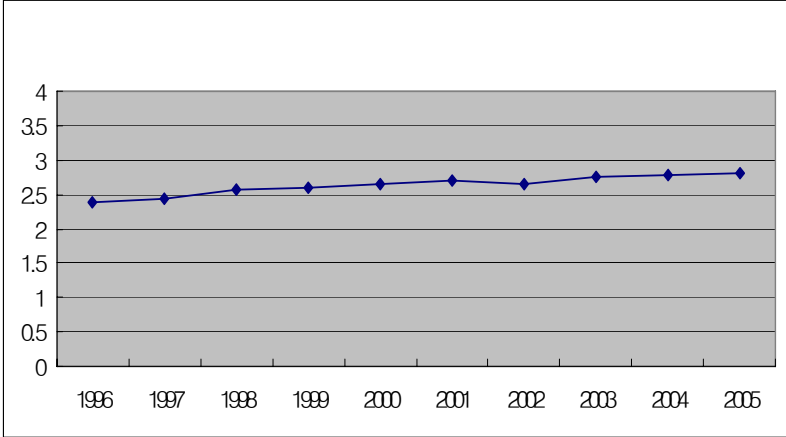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외일군들은 외화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권력기관의 압력이 컸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가 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간 알력이 극명하게 나타났을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핵심군중이 2.9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핵심군중은 보위부 및 안전성과의 대면기회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치부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핵심 계층은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본축적의 기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내사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권력 기관간 알력 또한 보다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기관 간에 세력균형이 유지되었다가 깨졌다가를 반복한다(ACI)”, “평가가 2.6 정도로 높게 나온다는 것은 해석에서 무리가 있다. 의견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집단 간 다툼이 있으면 피해보는 집단이 있고, 자기의 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LSG)”, “안전부와 보위부와 갈등이 심하다. 대우가 달라서 보위부가 권력이 더 세고 보수도 더 커서 안전부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CJS)”, “선군정치 하면서 선당인가, 선군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군과 당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군은 당의 지도를 받는 군이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당과 군의 알력관계가 지하로 숨어들었다. 중앙당검열이 있으면 당이 저승사자일 정도이다. 확실한 이유는 군에 대한 인사권을 당이 가지고 있다(LDH)”, “당의 군에 대한 영도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당에 의한 군통제도 확실하다(KKJ)”.

(3)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그림 II-15> 연고주의 존재유무



<표 II-15> 연고주의 존재 유무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56	2.57	2.69	2.63	2.68	2.76	2.82	2.81	2.83	2.87
여자	2.32	2.40	2.54	2.58	2.65	2.65	2.56	2.71	2.74	2.78
합계	2.38	2.44	2.58	2.60	2.66	2.69	2.66	2.76	2.78	2.82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67	2.33	2.00	2.00	3.00	3.00	3.00	4.00	4.00	4.00
함경도	2.34	2.43	2.55	2.54	2.59	2.62	2.58	2.65	2.69	2.75
평안도	2.50	2.56	2.69	2.86	2.86	2.85	2.82	3.00	3.00	3.00
황해도	2.67	2.40	1.50	2.00	2.00	2.00	2.00	2.00	2.00	1.00
양자강도	2.22	2.22	2.56	2.57	2.67	2.67	3.00	3.00	2.75	2.67
강원도	2.44	2.44	2.88	3.50	3.50	3.67	3.50	3.50	3.50	4.00
합계	2.36	2.43	2.56	2.58	2.64	2.67	2.64	2.73	2.74	2.79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39	2.43	2.64	2.60	2.66	2.65	2.62	2.72	2.75	2.80
농민	2.52	2.65	2.65	2.75	2.70	2.88	2.71	2.67	2.60	2.60
인테리	2.25	2.25	2.27	2.33	2.73	2.73	2.90	3.00	3.13	3.13
학생	2.26	2.30	2.42	2.50	2.62	2.91	2.80	3.13	3.00	3.00
군관	2.67	2.50	2.50	2.80	2.80	2.50	2.75	2.75	2.75	2.75
하전사	2.00	2.00	2.00	2.00	2.33	2.00	2.00	2.00	2.00	2.00
대외일군	3.00	3.50	3.50	4.00	3.00	3.00	4.00	3.00	4.00	4.00
합계	2.38	2.43	2.57	2.57	2.66	2.69	2.68	2.77	2.80	2.83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22	2.25	2.48	2.33	2.67	2.64	2.27	2.45	2.55	2.73
기본군중	2.34	2.40	2.52	2.69	2.71	2.69	2.69	2.76	2.76	2.77
동요계층	2.39	2.42	2.59	2.40	2.48	2.66	2.71	2.92	3.00	3.04
적대계층	2.74	2.83	2.78	2.92	3.08	3.00	3.00	2.86	2.67	2.60
합계	2.37	2.42	2.56	2.58	2.68	2.70	2.68	2.78	2.80	2.84

연고주의는 어느 체제나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인간현상이다. 특히 정치권력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정치적 신념이 맞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이다. 자유주의국가에서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마피아’, ‘○○사단’, ‘○○파’가 주요 부서를 장악했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파벌주의는 권력독식 가능성과 최고지위에 대한 도전 가능성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고, 만일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탄압이 수반된다. 따라서 현재 북한 내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의 파벌이나 파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파벌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함경도 지역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등용되었으나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김일성이 이의 규제를 지시하였고, 이후부터 함경도 출신과 평안도 출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³²

다만, 북한내에도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이 과다 대표되거나, 군부출신들이 노동당이나 외무성, 지역자치단체장 등에 임용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기업소나 공장, 협동농장 등에서 지연이나 혈연에 의해 승진이 유리하게 되거나 책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림 II-15>와 <표 II-15>에서 보듯이 2.81정도로서 현재 북한내에는 파벌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³² 자세한 내용은 전현준,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87, 여자는 2.78로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남자들은 직장생활 중에 연고주의를 더 강하게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에서는 일류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남자들은 승진이나 전보 시 대학의 연줄을 많이 따지는 것 같다. 물론 이로 인해 비대학출신자들의 불만은 점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강원도, 평양 등이 4.00, 황해도가 1.00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2.79정도가 나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으로서 제일 높았고, 인테리는 3.13이었다. 대체로 상류층일수록 연고주의를 강하게 느낀 것 같다. 특징적인 것은 노동자나 농민들은 연고주의를 점점 덜 느낀다는 점이다. 특히 농민들은 2001년을 기점으로 연고주의가 약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동요계층이 3.04로서 제일 높았다. 그 이유는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고없이 신분상승이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적대계층은 연고주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적대계층에 대한 포용을 지시한 김정일의 ‘은덕정치’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동창회, 향우회, 반상회 등 공식적인 모임은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지금도 외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금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명절에 친인척, 친구, 동창 등을 만나는 것은 개인의 친분 여하에 따라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모임은 없다(PSJ)”, “북한에서

도 학연·지연을 따진다. 과거 빨치산 출신이 장악했을 때는 함경도 출신이 많은 자리를 장악하였다. 당과 군에서 출신 학교에 대한 차별이 있다. 김정일이 이에 대해 통제를 하겠지만, 존재하고 있다(ACI)”,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혈연, 지연, 학연 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 현상이 심해지면, 반체제 집단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있을 것이다(LSG)”, “해외의 외교부서에도 그 중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뭉친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공동의 운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뭉치면 매우 응집력 강하게 뭉친다.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KDS)”, “오히려 학교 선후배, 지역은 생각 밖이다. 직접 만나고 인간적으로 통하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끼리끼리 뭉치는 것이다(CJS)”, “동의한다. 2.8 그 만하면 적합한 평가일 것이다(KKJ)”, “10대원칙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공식적으로 통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고가 북한에서도 중요하다(CJH)”.

(4)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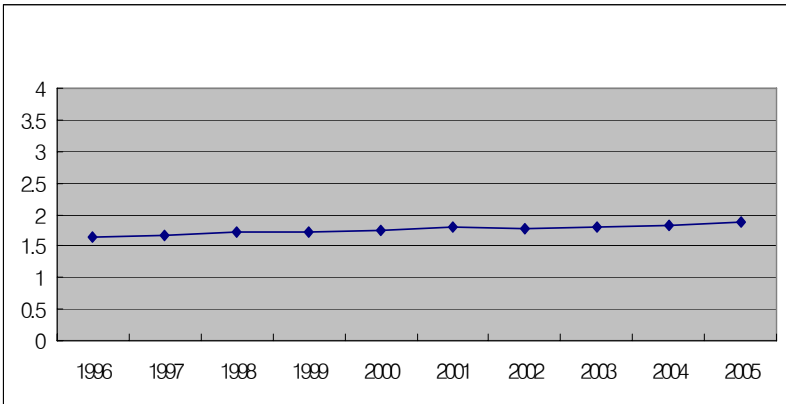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중폭동과 그에 동조하는 권력엘리트의 존재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권력엘리트의 분열이 발생해야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경제난과 이로 인한 수십만명의 아사자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뚜렷한 권력엘리트 간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일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미하지만 부처간 마찰이나 범법자 처벌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원(안전원)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권력교체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연고주의 또한 승진이나 직장마련 정도에만 통하는 상황이지 파벌화된 것 같지는 않다.

다. 관료기구의 기능

(1) 상부지침의 침투력

<그림 II-16> 상부지시의 말단조직으로의 전달 정도



<표 II-16> 상부지시의 말단조직으로의 전달 정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1.75	1.72	1.73	1.72	1.72	1.75	1.78	1.80	1.84	1.84
여자	1.60	1.67	1.72	1.72	1.78	1.82	1.78	1.81	1.83	1.88
합계	1.63	1.68	1.72	1.72	1.76	1.80	1.78	1.80	1.83	1.87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1.67	1.5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함경도	1.61	1.67	1.71	1.70	1.71	1.75	1.74	1.77	1.80	1.81
평안도	1.42	1.38	1.38	1.43	1.57	1.69	1.55	1.50	1.50	1.67
황해도	2.00	1.6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양자강도	1.67	1.78	1.89	1.71	2.00	2.00	1.83	2.00	1.67	1.67
강원도	1.44	1.56	1.63	2.00	2.00	1.50	1.00	1.00	1.00	
합계	1.60	1.65	1.69	1.70	1.73	1.76	1.75	1.77	1.78	1.82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1.59	1.65	1.67	1.67	1.64	1.71	1.69	1.71	1.73	1.79
농민	1.61	1.63	1.70	1.62	1.64	1.78	1.88	2.00	1.83	1.83
인테리	1.31	1.38	1.53	1.42	1.45	1.64	1.80	1.88	1.88	1.88
학생	1.68	1.68	1.83	1.81	2.08	2.00	2.00	1.88	1.79	1.79
군관	2.00	2.00	1.67	2.00	2.00	1.75	1.75	1.75	1.75	1.75
하전사	2.25	2.25	2.25	2.50	2.67	2.50	2.00	2.00	2.00	2.00
대외일군	1.67	1.50	1.50	2.00	1.50	2.00	2.00	3.00	4.00	3.00
합계	1.61	1.65	1.69	1.70	1.71	1.75	1.76	1.78	1.79	1.82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29	1.42	1.56	1.56	1.53	1.53	1.50	1.55	1.55	1.73
기본군중	1.54	1.61	1.63	1.54	1.60	1.67	1.62	1.71	1.68	1.58
동요계층	1.70	1.71	1.77	1.83	1.89	1.91	1.88	1.89	1.94	1.98
적대계층	1.95	1.89	1.88	1.92	1.86	1.80	1.89	1.86	1.67	1.75
합계	1.59	1.64	1.68	1.67	1.70	1.74	1.71	1.76	1.74	1.75

정부정책의 침투력(penetration)은 권력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부부서의 침투력이 약하다는 것은 부서의 권위가 심대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투력이 약하게 되면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지역간, 부서간 이해도의 차이로 인해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특히 유사시 상부지시가 제대로 침투되지 못할 경우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시전달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우선 각종 언론매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각종 총화, 강연회, ‘제3방송’이 발달되어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1970년대부터 ‘교시’ 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모든 사안이 자신을 통해 전달되도록 제도화하였다.

새터민들도 당이나 정부의 지시가 잘 전달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만일 전달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간부는 엄중한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전달에 소홀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지시는 거의 100% 잘 전달된다.

다만 문제는 이의 집행이다. “전달은 잘 되지만 집행은 안된다”라는 증언처럼 경제난 이후 북한인민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형식주의가 만연하여 실제 잘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자원과 원자재난으로 인해 목표달성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허위보고가 증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아 총화도 형식화되고, 형식주의로 인해 주민들도 지시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

하여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그림 II-16>과 <표 II-16>에서 보듯이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통틀어 2.00 이하를 기록, 북한내에서 명령침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여자가 1.88, 남자가 1.84로서 여자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들이 명령침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인민반 사정에 더 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직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전달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다만 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는 점에서 남녀차이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유의할 점은 약간씩이나마 명령침투가 안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이 4.00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타 지역에서는 2.00미만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북한 전 지역에서 지시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3.00을 기록,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마 대외일군들은 ‘총화’할 시간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실제로 대외일군들은 자유분방한 사고와 행동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당국의 통제도 강화되는 형국이다. 이에 비해 군관이나 하전사들은 2000년 이후부터 지시나 명령 전달이 갈수록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군부대에서는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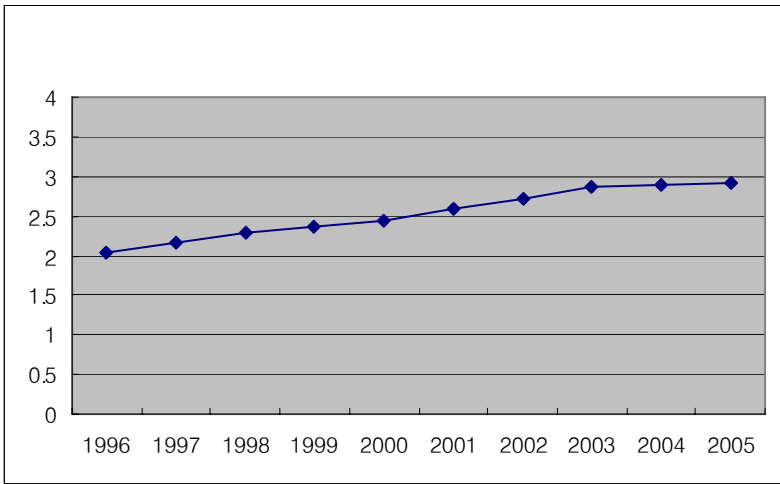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동요계층이 1.98로서 지시전달이 가장 잘 안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동요계층은 경제난 때문에 상대적으

로 이동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고위 탈북자들이 예외없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였다.

(2) 하부조직의 자의성

<그림 II-17> 하부조직에서의 규칙 변용 실태



<표 II-17> 하부조직에서의 규칙 변용 실태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53	2.52	2.59	2.66	2.74	2.82	2.97	3.03	3.06	3.06
여자	1.90	2.06	2.18	2.26	2.31	2.47	2.55	2.72	2.74	2.82
합계	2.03	2.16	2.28	2.37	2.45	2.59	2.71	2.86	2.89	2.93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00	1.00	1.5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함경도	2.02	2.16	2.29	2.40	2.49	2.60	2.68	2.83	2.86	2.93
평안도	2.17	2.19	2.25	2.29	2.36	2.62	3.00	3.00	3.00	2.89
황해도	2.33	2.00	2.33	2.50	2.00	2.00	2.00	2.00	2.00	2.00
양자강도	2.33	2.44	2.44	2.14	2.00	2.00	2.20	2.75	2.67	2.67
강원도	1.78	2.00	2.00	2.25	2.25	2.33	2.50	2.50	2.50	3.00
합계	2.03	2.15	2.28	2.37	2.44	2.56	2.68	2.82	2.85	2.91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10	2.24	2.42	2.49	2.47	2.61	2.64	2.70	2.73	2.80
농민	1.73	1.80	1.95	2.10	2.00	2.33	2.60	3.00	3.00	3.00
인테리	1.53	1.82	2.00	1.92	2.17	2.17	2.64	2.63	2.75	2.75
학생	2.09	2.18	2.20	2.38	2.64	2.90	3.11	3.43	3.50	3.50
군관	2.83	2.83	2.67	3.00	3.20	3.00	3.25	3.25	3.25	3.50
하전사	2.00	2.00	1.75	1.75	2.00	2.00	2.00	2.50	2.50	2.50
대외일군	3.00	2.50	2.50	3.00	3.00	3.00	4.00	4.00	4.00	3.00
합계	2.04	2.17	2.30	2.39	2.45	2.58	2.71	2.81	2.84	2.90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74	1.84	2.15	2.21	2.31	2.44	2.69	2.77	2.67	2.75
기본군중	1.89	2.06	2.23	2.37	2.39	2.55	2.61	2.68	2.76	2.74
동요계층	2.27	2.34	2.41	2.45	2.50	2.61	2.62	3.04	3.14	3.25
적대계층	2.32	2.36	2.31	2.50	2.75	2.70	3.33	3.29	3.33	3.20
합계	2.01	2.13	2.27	2.38	2.45	2.56	2.69	2.84	2.90	2.93

당 및 행정조직상 가장 말단조직들이 상부지시를 잘 따르느냐 아니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용하는가 하는 것은 체제 응집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내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총화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지시는 잘 전달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말단행정조직들이 국가나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변칙적으로 규정이나 지시를 이행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증대될 것이고, 심지어는 폭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난 심화이후, 북한내에는 많은 불법적인 행동이 등장하고 있다. 직장출근 대신 장사하기, 과도한 사적 외화보유, 불법적인 텃밭개간, 불법통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비사회주의구루뻘’을 만드는 한편, 형법개정을 통해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등 비법적이고 변칙적인 사례근절을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변칙운용이 국민포용과 김정일 정권퇴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I-17>과 <표 II-17>에서 보듯이 변칙운용은 2.92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변칙운용은 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3.06, 여자가 2.82로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직장내에서의 변칙운용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경제난 이후 공장이나 직장출근 대신 장사에 나서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을 직장에 바침으로써 ‘면죄부’를 받게 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과 강원도가 3.00으로서 제일 높았다. 평양은 외국문물이 비교적 빨리 도입되는 곳으로서 비사회주의적 행동도 그 만큼 많은 지역이다. 중국이나 남한의 문물이 비교적 쉽게 침투하고, 자본이 많아짐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불법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이에 따른 규정의 변칙운용도 증가하게 된다. 강원도의 경우는 그 반대로 몰자부족이 불법적인 활동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 학생과 군관이 각각 3.50, 3.50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이유는 학생은 자신이 불법적인 활동을 목도한 경우일 것이고, 군관은 본인이 직접 변칙적인 행동을 한 경우 일 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동요계층이 3.2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계층은 신분상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기 때문에 변칙운용에 대한 체험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배치나 임금지급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사시 가장 먼저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기도 하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고위 탈북자들이 하나같이 동의하였고 “김정일도 형식주의, 요령을 피우는 것, 변칙 운용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KYH)”고 증언하였다.

(3)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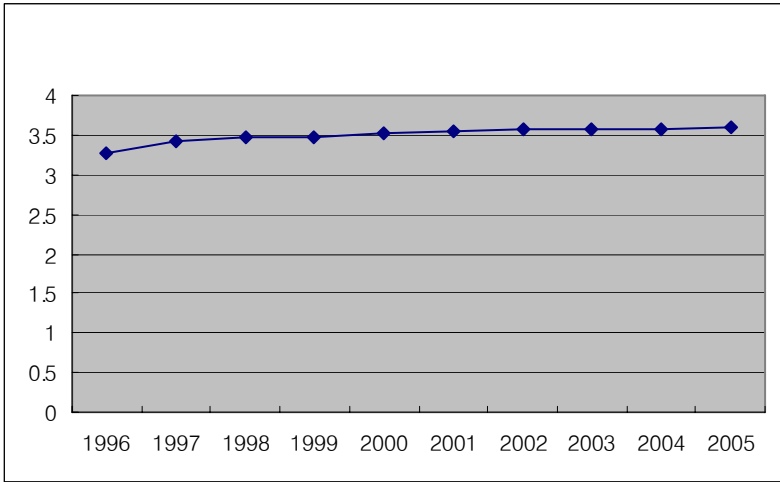
상부지시가 최일선 단위까지 잘 침투되느냐의 여부는 권력장악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김정일의 ‘말씀’이나 당, 내각 등의 지시는 잘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전달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지시가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는 것은 별개인 것 같다. 경제난으로 인해 각종 지시가 지시로만 끝나고 이행은 형식적이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내에 형식주의가 증대되고 있고, 허위보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것은 김정일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국가문제가 허위정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북한은 종종 핵문제나 북미관계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상황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경제문제를 비롯한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오판들이 형식적인 지시와 감독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보고나 과장·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3. 경제분야 평가

가. 사적 경제영역

<그림 II-18> 비공식 부문의 점유 정도



<표 II-18> 비공식 부문의 점유 정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3.44	3.43	3.53	3.49	3.58	3.61	3.63	3.62	3.60	3.61
여자	3.23	3.43	3.47	3.46	3.50	3.53	3.54	3.51	3.55	3.57
합계	3.28	3.43	3.48	3.46	3.52	3.55	3.57	3.56	3.57	3.59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3.00	3.00	2.5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함경도	3.26	3.43	3.51	3.53	3.62	3.64	3.65	3.64	3.66	3.70
평안도	3.00	3.13	3.27	3.21	3.29	3.31	3.36	3.50	3.50	3.44
황해도	3.50	3.40	3.00	2.50	2.50	2.50	2.50	2.50	2.50	1.00
양자강도	3.33	3.33	3.44	3.29	3.17	3.17	3.50	3.25	3.33	3.33
강원도	3.67	3.67	3.63	3.75	3.75	4.00	4.00	4.00	4.00	4.00
합계	3.27	3.41	3.48	3.47	3.53	3.56	3.58	3.57	3.59	3.60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3.29	3.46	3.55	3.49	3.54	3.58	3.57	3.61	3.60	3.62
농민	3.39	3.56	3.67	3.77	3.73	3.67	3.75	3.83	3.83	3.83
인테리	2.88	2.94	2.94	2.85	3.17	3.25	3.36	3.13	3.25	3.25
학생	3.17	3.35	3.50	3.67	3.83	3.91	3.90	4.00	4.00	4.00
군관	3.33	3.33	3.33	3.60	3.60	3.50	3.50	3.50	3.50	3.50
하전사	3.25	3.25	3.25	3.25	3.33	3.50	4.00	4.00	4.00	4.00
대외일군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3.27	3.42	3.50	3.48	3.55	3.58	3.61	3.63	3.63	3.64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81	3.00	3.07	2.89	2.93	3.00	3.00	3.08	3.08	3.25
기본군중	3.23	3.39	3.49	3.56	3.60	3.67	3.67	3.67	3.70	3.71
동요계층	3.48	3.61	3.65	3.60	3.66	3.65	3.69	3.69	3.71	3.74
적대계층	3.50	3.67	3.63	3.67	3.92	4.00	4.00	4.00	4.00	4.00
합계	3.26	3.41	3.49	3.49	3.56	3.60	3.63	3.62	3.63	3.66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중앙 계획에 의해 생산과 분배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또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 경제난은 중앙계획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해 해외자본 도입이 절실했다. 북한은 해외자본 도입을 위해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은 유럽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차관경제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북한경제는 완만한 추락추세를 보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1980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유치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노력 또한 조총련을 제외한 해외기업들의 외면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북한은 소비품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공여지책으로 1984년부터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을 벌였고, 농민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80년대부터 배태되기 시작한 사경제는 1990년대초, 사회주의 권 붕괴 및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 심화로 인해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특히 식량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은 개인장사를 시작하였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매매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경리의 사유화를 인정하였고, 2002년 7월에는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임금현실화, 기업의 자율성 강화, 배급제 축소 등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이미 북한에도 사경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생활자체가 곤란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북한 사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암시장이 매우 발달해 있고, 거기에서는 모든 물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북중 국경무역을 통해 행해지는 불법적인 거래는 무너지가는 북한 경제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사경제 영역의 확대는 정치적으로 정부 당국의 명령침투가 약화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이의 확산을 우려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일탈 경제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경제가 정치적 행위로까지 전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림 II-18>과 <표 II-18>에서 보듯이 북한경제의 비공식 부문은 3.62정도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식부문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3.61, 여자는 3.57로서 남자가 오히려 비공식부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항목에서 특이한 것은 사경제를 양성화한 2002년 7·1조치 이후에 오히려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남한과 중국의 대북 지원이 증가됨과 함께하면서 주민들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강원도와 함경도가 각각 4.00과 3.70을 차지함으로써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대표적인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비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이한 점은 황해도, 평양, 양강

도, 자강도 등에서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2000년 이후,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으로 인해 식량사정이 약간씩 나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직업별로는 학생, 하전사, 대외일군들이 모두 4.00을 기록하여 이들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2년 ‘7.1조치’ 이후 비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들 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대외일군들이 일찍부터 비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은 거의 정부가 아닌 개인차원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이 오히려 주변 간부들에게 비공식적 경제 지원을 담당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4.00을 기록하여 이 계층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층은 자연스럽게 비공식부문에 대한 접근을 통한 민생고 해결에 나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요계층이 3.74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부문에 대해 고위 탈북자들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나. 생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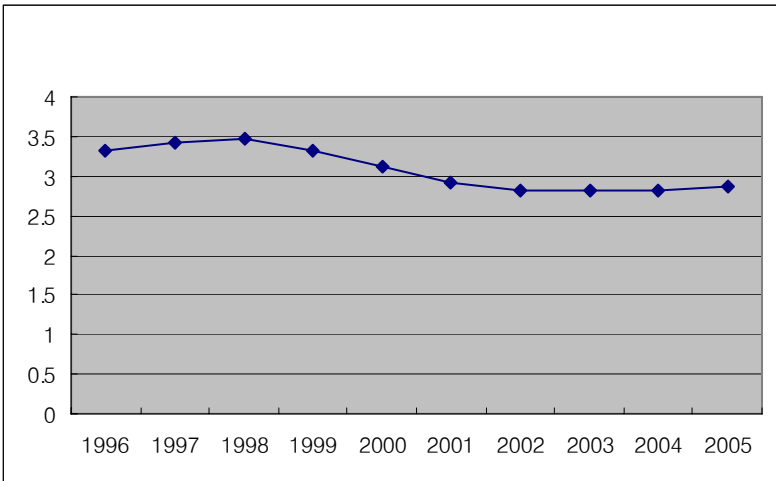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1인당 GNP는 폐쇄경제 체제, 국제적 경제봉쇄, 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500달러에 불과하고, 식량 부족량은 매년 100만톤을 상회하며, 생필품은 거의 90%가 중국산이다. 에너지난으로 인해 가구 및 공

장용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한다. 대홍수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지역도 각종 전자재가 부족하여 복구가 않된 상태이고, 간식은 거의 하지 못할 정도이다.

2002년 ‘7·1조치’ 이후 근로자 임금이 2,000원 정도로 현실화되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치는 거의 없고, 공장 가동율이 20%미만으로 떨어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와 농민들은 비공식적인 소득을 통해 생계유지비를 벌고 있다. 그 방법은 대개 개인 장사이고, 놀랍게도 월소득은 공식월급의 2-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식생활

<그림 II-19> 식생활 정도



<표 II-19> 식생활 정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3.40	3.39	3.43	3.25	3.08	2.95	2.81	2.78	2.76	2.78
여자	3.28	3.44	3.48	3.34	3.15	2.90	2.84	2.85	2.86	2.93
합계	3.31	3.43	3.47	3.32	3.13	2.92	2.83	2.82	2.82	2.87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33	2.67	3.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함경도	3.32	3.46	3.49	3.36	3.16	2.96	2.83	2.81	2.81	2.87
평안도	3.59	3.47	3.40	3.15	3.00	2.75	3.00	3.11	3.11	3.00
황해도	3.00	3.00	3.25	3.25	2.00	2.00	2.00	2.00	2.00	2.00
양자강도	2.80	3.00	3.22	2.86	2.83	2.83	2.83	2.75	2.67	2.67
강원도	3.61	3.72	3.81	3.75	3.75	3.67	4.00	4.00	4.00	4.00
합계	3.31	3.44	3.48	3.33	3.12	2.93	2.84	2.83	2.83	2.87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3.36	3.48	3.56	3.40	3.19	3.01	2.94	2.92	2.91	2.89
농민	3.48	3.63	3.71	3.69	3.55	3.22	3.25	3.17	3.20	3.40
인테리	2.76	2.88	2.88	2.77	2.75	2.67	2.73	2.63	2.75	2.75
학생	3.13	3.35	3.39	3.26	3.13	2.85	2.75	3.00	3.00	2.83
군관	3.50	3.67	3.67	3.50	3.20	2.75	2.50	2.50	2.50	2.75
하전사	3.50	3.50	3.50	3.25	3.00	2.50	2.50	2.50	2.50	2.50
대외일군	3.50	3.50	4.00	3.50	2.50	3.00	3.00	2.00	2.00	2.00
합계	3.31	3.44	3.51	3.35	3.16	2.96	2.89	2.88	2.88	2.87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3.03	3.22	3.30	3.14	2.89	2.78	2.67	2.71	2.71	2.67
기본군중	3.36	3.48	3.53	3.33	3.09	2.86	2.82	2.74	2.74	2.83
동요계층	3.43	3.51	3.53	3.36	3.27	3.00	2.85	2.93	2.96	2.94
적대계층	3.50	3.57	3.50	3.46	3.43	3.30	3.33	3.14	3.17	3.00
합계	3.34	3.45	3.49	3.32	3.15	2.93	2.85	2.83	2.84	2.84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은 이미 1950년대부터 “쌀은 사회주의이다”라는 구호하에 식량증산에 힘썼고, 획기적인 식량증산 방법으로 밀식재배를 선택하였으며, 당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 청산리 농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사정은 갈수록 나빠졌고, 1950년대부터 시작된 배급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들어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생산량이 급속히 줄면서 사실상 배급제가 붕괴된 것이 사실이지만 상층 관료들에 대한 배급제는 여전히 유효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식량문제는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만톤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고, 중국으로부터 암암리에 도입된 암시장 식량이 없다면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변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림 II-19>와 <표 II-19>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2.87정도를 나타내 3.00을 넘지 않아 식량사정에 대한 새터민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특히 대체로 2002년부터는 식량사정이 호전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외부의 지원과 장마당에서의 식량구입 기회 증대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여자가 2.93, 남자가 2.78로서 여자가 약간 높아서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식량난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실제로 가내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여자기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 모두 1996년에 비해서는 식량사정이 현저하게 좋아진 것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주목되는 것은 1998년을 정점으로 식량사정이 계속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것은 1998년 김정일 정권이 공식출범하면서 먹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강원도가 4.00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평안도 역시 3.00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식량난이 존재하는 가운데에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정도는 된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식량문제로 인한 주민폭동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9 핵실험이후 시작된 대북경제체제가 남한·중국을 포함한 전면적인 상태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 농민이 3.40으로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이 오히려 더 식량사정의 열악성을 느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지만 당국이 농민들보다는 노동자나 군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농민들은 최소한의 식량은 확보한 것으로 상정하고 정책을 폈을 수도 있다. 모든 직업군에서 1999년부터는 식량사정이 좋아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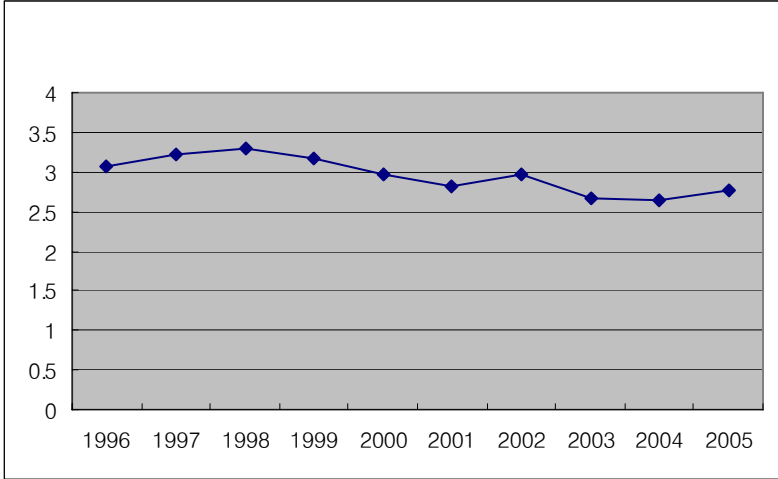
으로 답한 것이 특징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00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불만족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998년부터 식량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적대계층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식량사정에 대한 불만이 높을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들조차도 점차 식량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답했다는 것은 북한사회가 전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식량난이 심각한 시기를 벗어난 후에는 생활수준이 점차적으로 나아졌다. 그래서 평가가 생각보다는 달리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 이유는 현재가 풍족하지 않더라도 식량난 시기와 비교하면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외원조가 식량난 이후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LSG)”, “농민들이 나쁜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로 평가가 점차 좋아지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KYH)”, “이것은 상대적인 기준이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나아졌다하더라도 남한의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것이다. 2002년 7.1조치 이후로 개인장사가 허용되고 일부 시장개혁이 있고 나서 식량난이 나아졌다(CJS)”, “최근에는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직장 외에도 부업을 하니까 생활이 나아진 것이다(KKJ)”, “물론 고난의 행군 때는 나빴다. 그 시기와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인정한다(LDH)”.

(2) 생필품 및 주거지

<그림 II-20> 주거 및 생필품 여건



<표 II-20> 주거 및 생필품 여건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3.04	3.08	3.10	2.95	2.83	2.78	3.43	2.61	2.59	2.72
여자	3.09	3.27	3.34	3.25	3.04	2.83	2.71	2.68	2.69	2.80
합계	3.08	3.23	3.29	3.17	2.98	2.82	2.96	2.66	2.65	2.77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33	2.67	3.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함경도	3.10	3.24	3.31	3.20	3.00	2.86	3.02	2.68	2.67	2.78
평안도	3.29	3.40	3.13	3.08	3.15	2.92	2.89	3.00	2.89	2.87
황해도	3.00	3.17	3.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양자강도	2.80	3.00	3.11	2.86	2.67	2.67	2.67	2.50	2.33	2.33
강원도	3.22	3.33	3.63	3.25	3.25	3.00	3.00	3.00	4.00	4.00
합계	3.10	3.24	3.29	3.17	2.99	2.84	2.96	2.69	2.67	2.77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3.12	3.26	3.34	3.21	3.01	2.86	3.20	2.70	2.73	2.76
농민	3.21	3.39	3.45	3.50	3.42	3.30	3.11	3.38	3.17	3.17
인테리	2.53	2.71	2.88	2.85	2.75	2.75	2.73	2.63	2.63	2.75
학생	3.02	3.24	3.30	3.11	3.00	2.83	2.82	2.89	3.00	3.00
군관	3.33	3.50	3.17	3.17	2.80	2.25	2.25	2.25	2.25	2.75
하전사	3.25	3.25	3.25	3.25	3.00	2.50	2.50	2.00	2.00	2.00
대외일군	3.00	2.50	3.00	3.00	2.00	2.00	2.00	2.00	1.00	1.00
합계	3.09	3.23	3.30	3.19	3.00	2.85	3.04	2.73	2.71	2.77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75	2.97	3.17	3.10	2.88	2.63	2.36	2.38	2.58	2.75
기본군중	3.20	3.35	3.38	3.21	2.98	2.86	2.70	2.75	2.67	2.73
동요계층	3.15	3.23	3.26	3.18	3.00	2.83	3.50	2.57	2.52	2.63
적대계층	3.32	3.43	3.39	3.31	3.29	3.30	3.22	3.00	3.20	2.75
합계	3.13	3.26	3.31	3.19	3.01	2.86	2.97	2.66	2.64	2.70

북한에서 통용되는 거의 모든 생필품은 중국산일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다. 공장가동율이 20%이내로 저하된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경제난이 심한 상태에서는 주거생활도 매우 열악했을 것이고, 살림집을 마련하는 데 10여년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그림 II-20>과 <표 II-20>에서 보듯이 설문결과는 주거문제나 생필품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체로 2.77정도로서 이념이나 정치문제에 대한 불만보다는 낮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향후 북한체제 변화는 경제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 본다.

첫째, 성별로는 여자가 2.80으로서 남자의 2.72보다는 높았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여자들이 더 심각하게 생필품 문제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들이 집안 문제를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1999년부터는 생필품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2005년부터는 다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것이 어떤 추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역시 강원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을 보인 이유는 강원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도는 2004년부터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전 지역적으로 생필품 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적으로는 농민이 3.17로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문제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생필품 공급으로부터 소

외된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수송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도 2000년부터는 생필품 사정이 점차 좋아진 것으로 답했다.

넷째, 계층별로는 핵심계층과 적대계층 공히 2.75를 기록하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핵심계층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적대계층은 ‘절대적’ 박탈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핵심계층은 자신들의 지위에 비해 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 같고, 적대계층은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고의적으로 박대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 어쨌든 이들 모두 1999년부터는 생필품이나 주택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응답했다. 다만 핵심계층은 2005년부터 사정이 안좋아진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다른 계층에 비해 개인장사를 잘 하지 못하여 부수입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에서는 주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좋은 평가가 나왔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JNS)”, “의복은 삶의 기본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입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CJS)”, “국내에서 공장가동율이 20% 정도밖에 안되는데, 모두 다 입고 다닌다. 중국에 여행을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든가,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 친척을 챙긴다든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못살고 공장이 안돌아가도 다 웃은 입고 다니는 것 같다. 가령 20-30대 여성은 몸 파는데 5달러를 받는다. 북한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즉 체면을 중시한다(KDS)”, “북한 인민의 삶의 기준은 먹는 것보다 입는 것 우선이다(CJS)”.

(3) GNI 증감추이

북한경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였으며, 1980년대에는 2%~4%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결함이 누적된 결과이며, 북한은 생필품, 에너지, 공업원자재, 투자자원, 기술 및 기술인력의 광범위한 부족현상을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누적된 체제결함에 더해 구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 대변혁으로 인해 이들로부터의 지원성 수출(공업원자재 및 기계설비)이 감소하고, 북한의 수출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1990년 이후 북한경제는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1991년 이후 구소련이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경화결제를 요구했으며, 1992년 이후 중국 역시 지원성 교역을 축소하고 경화결제에 의한 교역을 요구함에 따라 원유 및 코크스탄과 곡물 등 북한경제의 생존에 필수적인 상품수입이 급감하였으며, 북한의 GNI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대외경제환경의 악화와 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이 상승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북한주민의 근로의욕 역시 감퇴했으며, 특히 냉해 및 수해, 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따라 곡물생산이 급감하게 되자 1993년부터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북한에는 1995년~1997년까지 3년간 연속 자연재해가 들어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제상황이 도래하였고, 북한 당국은 이의 해결을 위해 ‘고난의 행군’ 및 ‘사회주의 강행군’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대북 경제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다. 비록 1998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대국가전략으로 포장은 하였

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문제 해결에 있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경제 회복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남한의 대북 경제 지원이 지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비록 경제난 해결을 위한 공여지책이기는 하였지만 개인장사가 일부 허용되면서 북한주민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7·1조치는 이미 주민들사이에 퍼져있던 개인장사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그 자체를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처지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여 경제상황을 호전시켰다. 이유야 어떻든 <표 II-21>에서 보듯이 북한경제는 1999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명목상 GNI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21> 북한의 경제 지표

	단위	'96	'97	'98	'99	'00	'01	'02	'03	'04
1. 명목GNI	억달러	214	177	126	158	168	157	170	184	208
2. 경제성장률	%	-3.6	-6.3	-1.1	6.2	1.3	3.7	1.2	1.8	2.2
3. 대외경제 무역총액	억달러	19.8	21.8	14.4	14.8	19.7	22.7	22.6	23.9	28.6
4. 예산규모	억달러	N.A	91	91	92	96	98	N.A	N.A	25.1

자료: 한국은행 통계

향후의 문제는 UN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남한·중국 등의 대북 지원 및 협력이 축소될 경우 북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경제 침체는 당연할 것이고, 일단 침체된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 소결론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즉 탈북자, 인권, 핵 등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제난 때문에 사회와 가정이 파괴되고,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경제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가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심성이 파괴되고, 전투적으로 변했다. 심지어 유전자 변형까지 이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중반기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은 폭발직전까지 갔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활성화하고, 개인장사를 묵인 내지는 합법화하였다.

김정일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2000년에는 남한과의 정상회담까지 개최하였고, 중국과의 불법적인 거래도 묵인하고, 식량구입 목적이라면 불법적인 이동이나 국경무역까지 허락하였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는 상황에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경제난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을 거부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UN안보리 제재로 인해 향후 북한 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 북한주민들이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통해 극복해 낼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 정권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 대외경제 관계

1990년대 초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문제는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북한경제의 추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북한은 1991년 UN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시도하였으나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거의 수포로 돌아갔다. 1991년에 시작한 나진선봉경제특구도 활성화되지 못했고, 1992년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남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중지되고 말았다.

비록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가 채택되었지만 북미관계 개선은 순조롭지 못했고, 1995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아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정일은 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적인 지원외에 본격적인 경제지원은 받지 못했다. 북한경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고, 주민들은 모두가 나서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정일과 중앙정부의 권위는 실추되어 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정일은 1998년 야심찬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내세우고 EU를 필두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 나섰다. 유럽연합과의 관계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2000년에는 미국과의 국교수립 일보직전까지 가는 외교적 쾌거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김정일 정권 붕괴전략을 구사하였다. 2002년 10월부터는 농축우라늄(HEU) 폭탄개발 문제로 또 다시 북미 간에는 최악의 관계가

도래하였다.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 개최되었고, 2005년 9월에는 역사적인 9·19공동성명까지 채택되었으나 북한 위폐문제가 불거지면서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2005년 9월 15일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함과 함께 세계의 거의 모든 은행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북한은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였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UN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결의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고 10월 15일 UN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 경제제재를 결의했으며, 남한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이 대북 경제제재에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밀봉(seal)’을 통해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김정일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테러국가, 테러지원국가, 인권최빈국, 채무불이행국 등 제반 악명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제재, 미국의 EAR에 의한 제재 등 다양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전략물자의 북한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UN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밀봉’이 실현되었을 때 북한이 1년이상 지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연간 50만톤에 가까운 원유를 비롯해 식량과 각종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22>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2000년 20.4%에서 2004년 39.0%까지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22> 북한의 대남·대중·대일 의존도 추이

(단위 : 억 달러)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총 무역액	41.7	20.5	19.7	22.6	23.9	28.6
북중간 (의존도)	4.82 (11.5%)	5.50 (23.5%)	4.88 (20.4%)	7.38 (25.4%)	10.23 (32.8%)	13.85 (39.0%)
북일간 (의존도)	4.76 11.4%	5.95 (25.4%)	4.64 (19.4%)	3.68 (12.7%)	2.65 (8.5%)	2.52 (7.1%)
남북간 (의존도)	0.13 (0.3%)	2.87 (2.2%)	4.25 (17.8%)	6.42 (22.1%)	7.24 (23.1%)	6.97 (19.6%)

북한의 대남 의존도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다. 남한은 200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확대에 따른 관련 교역의 증가로 이 분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표 II-23>에서 보듯이 경제 협력 사업 중 상업적 거래에 대한 비중이 2002년 6.8% → 2005년 39.1% → 2006년 1~8월 41.4%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23> 거래 유형별 남북 경협 추이

(단위 : 100만 달러)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계
	일반교역	위탁교역	경제협력	소계 (비중)		
1995	230.4	45.9	0.0	276.3 (96.2%)	11.0	287.3
2000	110.5	129.2	33.6	273.3 (64.3%)	151.8	425.1
2002	171.8	171.2	25.0	367.9 (57.3%)	273.8	641.7
2004	171.8	176.0	89.2	436.5 (62.6%)	260.5	697.0
2005	209.8	209.7	270.0	689.5 (65.3%)	366.2	1,055.8
'06.1~8	189.4	156.5	244.7	590.7 (76.2%)	184.9	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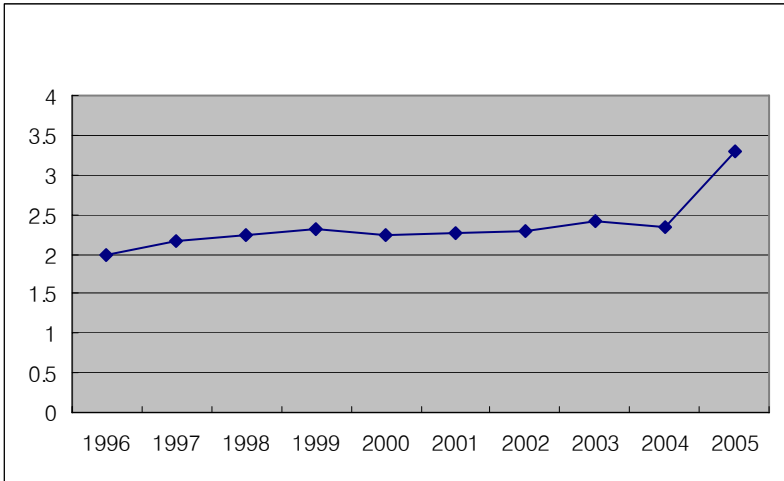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남북 교역 통계』

4. 통제분야 평가

가. 사회통제

(1)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그림 II-21> 강제기구의 주민통제 정도



<표 II-24> 강제기구의 주민통제 정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21	2.25	2.29	2.34	2.21	2.28	2.35	2.44	2.42	2.31
여자	1.94	2.14	2.23	2.30	2.25	2.26	2.28	2.39	2.25	2.28
합계	2.00	2.16	2.25	2.31	2.23	2.26	2.30	2.41	2.33	2.29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1.67	2.00	3.00	3.00	4.00	3.00	2.00	1.00	1.00
함경도	2.00	2.17	2.28	2.34	2.27	2.30	2.31	2.43	2.38	2.34
평안도	1.83	1.75	1.75	1.93	1.86	1.85	2.09	2.30	2.20	2.00
황해도	2.67	2.83	3.25	3.25	2.00	2.00	2.00	2.00	2.00	2.00
양자강도	1.70	2.10	2.00	1.86	2.17	2.17	2.33	2.67	2.33	2.33
강원도	2.33	2.56	2.75	3.00	3.25	3.67	3.50	3.50	4.00	4.00
합계	2.00	2.16	2.26	2.33	2.25	2.28	2.31	2.43	2.35	2.30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00	2.18	2.29	2.38	2.24	2.29	2.33	2.48	2.42	2.34
농민	2.15	2.38	2.45	2.73	2.60	2.71	2.86	3.00	2.80	2.80
인테리	1.87	2.00	2.20	2.08	2.09	2.30	2.20	2.13	2.00	2.00
학생	1.96	2.11	2.24	2.29	2.54	2.64	2.60	2.67	2.71	2.71
군관	2.14	2.14	2.29	3.00	2.67	2.40	2.20	2.20	2.20	2.25
하전사	1.50	1.50	1.50	1.50	1.67	1.50	2.00	2.00	2.00	2.00
대외일군	2.33	2.33	2.67	2.67	2.00	3.00	3.00	4.00	4.00	3.00
합계	2.00	2.17	2.28	2.38	2.29	2.35	2.38	2.49	2.42	2.36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91	2.17	2.21	2.10	1.88	1.88	1.77	1.77	1.77	1.77
기본군중	1.97	2.12	2.24	2.28	2.25	2.36	2.33	2.45	2.43	2.52
동요계층	2.07	2.12	2.20	2.37	2.28	2.29	2.18	2.30	2.20	2.13
적대계층	1.90	2.05	2.06	2.07	2.14	2.10	2.67	3.00	3.00	2.50
합계	1.98	2.12	2.21	2.26	2.19	2.24	2.24	2.34	2.30	2.25

오늘날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효율적인 주민통제이다. 통제장치로는 당조직,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인민반제도 등이 있다.

당조직 중 최말단은 당세포이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방침이 잘 준수되도록 당원을 독려하고, 일반주민들을 지도해 나간다. 물론 경제난으로 인해 조선노동당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중심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되어 있다. 1945년 11월에 설립된 이 기구는 반체제인사들을 색출하고, 대남 및 대외 정보 수집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기구는 종파분자 색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단 보위부에 끌려가면 정치적 처벌을 면키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위부원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이전에는 사회안전부였다. 보안성은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보다 큰 목적은 김정일 정권을 결사옹위하는 데 있다. 최말단 조직은 분주소로서 3-5명의 보안원이 있다. 보안성은 군대조직처럼 계급이 주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과 직접대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보위부원보다는 인민편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다.

다음으로 주민통제의 최일선 조직은 인민반이다. 인민반은 보통 20~3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장과 선동원(인민반 당분조장 겸임) 등이 주민 감시와 통제를 맡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당세포, 인민반장, 담당 보안원, 담당 보위부원 등에 의해 3중으로 감시받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밀착 감시하는 것은 인민반장이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원들의 행

동을 감시·조사하여 문제발생시 즉시 보안원(안전원)에게 보고,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우리는 흔히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그 답은 거미줄처럼 조직된 통제망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각종 통제조직의 효율적인 작동 때문이다. 금번 설문에서도 <그림 II-21>과 <표 II-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회통제 정도가 2.30을 기록, 여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사회통제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통제기구가 얼마나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 2.31, 여자 2.28로서 남자가 약간 더 높았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는 사회통제가 느슨한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직장에 나가는 남자들이 사회이완 현상을 더 많이 목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징적인 것은 2000년 이후에 사회통제가 더 잘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강원도의 4.00를 제외하고는 함경도가 2.34를 기록하여 비교적 통제가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북자 중 함경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함경도 지역의 통제가 느슨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특징적인 것은 지역적 편차는 있지만 2003년~2004년을 기점으로 사회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탈북자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직업적으로는 대외일군이 3.00을 기록, 통제가 느슨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인테리와 하전사가 각각 2.00을 기록, 통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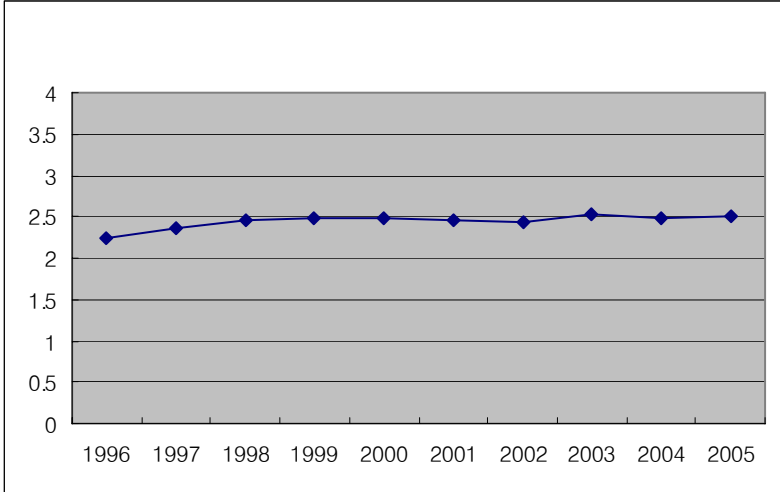
잘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대외일군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군부나 인테리에 대한 통제는 강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학생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부터 대체로 전 계층에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다.

넷째, 계층별로는 기본군중이 2.52로서 통제가 가장 잘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군중에 대해서는 신분상 통제기구가 특별히 많은 감시·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핵심군중들이 사회통제가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1.77)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 핵심군중들 만큼은 체제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통제가 잘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인민은 인민반장과 잘 협조해야 생활이 잘 되기 때문이다(PSJ)”, “아사자 많을 때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부와 보위부가 어디든지 보내주었다. 중국도 보내주었고, 오히려 그들이 일부러 보내기도 하였다. 식량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다시 그들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LSG)”, “인민반이 보위부 등 여러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5호 감시제는 없어진 지 오래이며, 그 역할을 인민반장 제도가 대신하고 있다. 인민반장은 주민에 대해 훤히 꿰고 있다. 이웃 집에 몰래 비디오를 보고 있는가, 청소를 잘 하는가 등을 다 알고 있다. 보위부 안전부 등은 며칠 마다 한 번씩 보지만, 인민반장은 매일 본다. 인민반장은 모두 당원이며, 활동력이고 명철한 사람으로, 거의 여자이다. 인민반장이 여자라도 뒤에 보위부 안전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시자이면서 국가권력의 대표자이다.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KYH)”.

(3) 공안기구의 범법행위통제

<그림 II-22> 강제기구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정도



<표 II-25> 강제기구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정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50	2.54	2.69	2.58	2.50	2.49	2.49	2.57	2.49	2.48
여자	2.16	2.32	2.38	2.45	2.46	2.44	2.41	2.52	2.46	2.51
합계	2.23	2.37	2.45	2.48	2.47	2.45	2.44	2.54	2.47	2.50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50	1.50	2.00							
함경도	2.23	2.35	2.45	2.53	2.53	2.52	2.48	2.55	2.49	2.54
평안도	2.11	2.13	2.13	2.07	2.07	2.08	2.27	2.40	2.30	2.11
황해도	2.33	2.50	2.60	2.75	2.50	2.50	2.50	2.50	2.50	3.00
양자강도	2.00	2.20	2.33	2.00	2.17	2.33	2.33	2.75	2.67	2.67
강원도	3.00	3.25	3.29	3.00	3.33	3.50	3.00	3.00		
합계	2.23	2.36	2.45	2.48	2.49	2.48	2.46	2.54	2.48	2.50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23	2.36	2.42	2.49	2.40	2.41	2.46	2.57	2.48	2.50
농민	2.27	2.38	2.45	2.82	2.80	3.00	2.86	2.80	2.80	2.80
인테리	1.93	2.07	2.07	1.82	2.00	2.00	1.89	1.86	1.71	1.71
학생	2.32	2.56	2.71	2.76	3.08	3.09	3.00	3.25	3.43	3.43
군관	2.43	2.43	2.71	2.83	2.83	2.80	2.80	2.80	2.80	2.75
하전사	1.50	1.50	1.50	1.50	2.00	1.50	1.50	2.00	2.00	2.00
대외일군	3.50	3.50	3.5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합계	2.23	2.36	2.44	2.50	2.50	2.49	2.49	2.59	2.53	2.54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00	2.21	2.34	2.35	2.35	2.41	2.29	2.29	2.29	2.36
기본군중	2.24	2.40	2.49	2.53	2.54	2.50	2.48	2.51	2.47	2.50
동요계층	2.30	2.35	2.47	2.47	2.45	2.43	2.32	2.52	2.50	2.45
적대계층	2.26	2.39	2.31	2.46	2.43	2.40	2.56	2.86	2.67	2.40
합계	2.22	2.36	2.45	2.48	2.48	2.46	2.41	2.51	2.46	2.45

북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체제나 정권 비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저항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철저한 감시·통제 결과로 북한에는 20여만명에 이르는 정치범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헌법과 형법에는 각종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진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공안기구의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량난은 주민이동을 확대시켰고, 비법적인 방법을 통한 식량 및 생필품 획득을 증대시켰다. 물론 이러한 비법적인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도 거세다. 당국은 ‘비사회주의구루뻘’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경제사범까지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감할 정도로 강도 높은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비법적인 활동이 더욱 증가하는 형국이다. 돈만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하급관료들의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정부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인민들은 물론 공안기구 요원들까지 부정부패에 매몰되고 있다. “돈만 있으면 사형수도 면죄가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태이다.

물론 부패 자체가 곧 정치적 행위로 전이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주민들은 부패관료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공론화하는 상태는 아니다. 다만 유사시 이러한 불만들은 사전에 치유되지 않을 경우 반정부 내지는 반체제 형태로 전변될 가능성이 높다. 통제정도는 <그림 II-22>와 <표 II-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0정도를 기록하여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이 판단하는 범법행위통제 실태

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48, 여자가 2.51을 기록, 남자가 더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20번> 질문인 통제기구의 주민통제 유지 정도에 대한 응답과는 약간 반대되는 결과로서 남자들은 직장에서의 범법행위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남자들은 2004년 이후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황해도가 3.00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범법행위 통제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황해도는 농촌지역으로서 식량밀거래가 많은 반면 통제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전국적으로 일사분란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통제가 심해지는 곳도 있고, 오히려 느슨해지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직업별로는 학생 3.43, 대외일군 3.00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이들의 직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상대적 자율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대외일군은 외화를 다루는 직업으로서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단속을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2000년을 지나면서 통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장사를 합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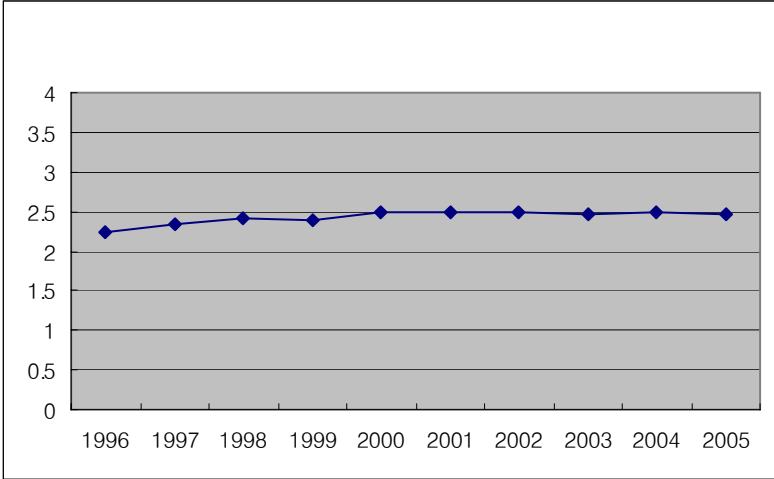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기본군중이 2.50을 기록하여 범법통제가 가장 잘 안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본군중은 사실상 충성을 다하면서도 이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통제기관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장 충실히 법을 지키는 계층으로서 불법·탈법 행위를 통해 타 계층이 잘살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 지도부가 이 계층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 큰 변혁을 겪을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의 범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부패 및 범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인다. 간부에 대한 부정부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부정부패는 엄격하다고 해석된다. 고위층과 일반 하층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다른 잣대로 평가받는다(PSJ)”, “보고가 들어가면 북한 지도부의 처벌은 엄격한데, 보고만 안 들어가면 무사하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칼을 들이대서 사회를 쳐내고 부정부패를 잡아낸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사건화’라고 하는데 사건화가 되지 않으면 비리가 있어도 무사하다(CJS)”, “부정·부패가 있어서 연루되는데, 뇌물을 일부분 받아먹기 때문에 그것이 감춰지는 것이다(KDS)”, “통제도 잘되고 있으며, 하층들에 대한 통제가 있다. 그런데 간부급에서는 비리에 대해 뇌물이 오가는 등 간부급에 대한 처벌은 이완된 편이다(CJH)”.

(3) 이동

<그림 II-23> 여행 빈도



<표 II-26> 여행 빈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40	2.31	2.39	2.37	2.46	2.50	2.50	2.51	2.51	2.53
여자	2.18	2.36	2.44	2.41	2.51	2.49	2.50	2.44	2.44	2.43
합계	2.23	2.35	2.42	2.40	2.49	2.50	2.50	2.47	2.48	2.47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33	1.33	2.00	2.50	2.50	3.00	4.00	4.00	4.00	4.00
함경도	2.19	2.33	2.41	2.35	2.46	2.47	2.48	2.47	2.44	2.45
평안도	2.29	2.40	2.33	2.46	2.46	2.58	2.60	2.56	2.67	2.67
황해도	2.57	2.33	3.00	2.75	1.50	1.50	1.50	1.50	1.50	1.00
양자강도	2.00	2.20	2.11	2.14	2.00	2.00	2.00	2.00	2.33	2.33
강원도	2.78	2.78	2.87	3.25	3.25	3.33	3.00	3.00	4.00	4.00
합계	2.21	2.34	2.41	2.39	2.45	2.47	2.47	2.47	2.48	2.49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23	2.36	2.40	2.36	2.43	2.49	2.49	2.46	2.46	2.45
농민	2.11	2.27	2.40	2.42	2.40	2.43	2.83	3.20	3.20	3.20
인테리	1.75	1.88	1.93	2.08	2.09	2.27	2.70	2.88	2.88	2.88
학생	2.31	2.38	2.58	2.59	2.85	2.73	2.40	2.50	2.71	2.71
군관	2.14	2.14	2.29	2.71	2.71	2.60	2.80	2.80	2.60	2.60
하전사	2.75	2.75	2.75	2.75	2.00	1.00	1.00	1.50	1.50	1.50
대외일군	3.00	2.50	2.50	2.50	4.00	4.00	4.00	3.00	3.00	3.00
합계	2.21	2.32	2.39	2.40	2.46	2.48	2.53	2.55	2.56	2.56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94	2.21	2.52	2.26	2.29	2.33	2.57	2.42	2.50	2.54
기본군중	2.23	2.36	2.37	2.21	2.28	2.29	2.28	2.28	2.22	2.10
동요계층	2.25	2.30	2.31	2.60	2.72	2.74	2.72	2.81	2.87	2.95
적대계층	2.58	2.65	2.60	2.45	2.55	2.44	2.38	2.50	2.80	2.80
합계	2.22	2.34	2.40	2.36	2.44	2.45	2.47	2.48	2.50	2.49

북한은 철저한 통제사회이다. 거주이전이나 이동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통행증이 없이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고 종종 간첩으로 몰리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이유없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는 지역간 이동수단이 철도로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는 특별한 공무수행에만 사용된다. 방북시 북한도로에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도 특별히 이동을 빈번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부터 합법·비법적인 이동의 빈도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공장내에 일감이 없고, 식량난은 가중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휴가를 내어 돈벌이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장사를 통한 수입 중 일정액을 공장에 납부하는 것으로 노동을 대신한다. 비법적으로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농촌이나 중국으로의 이동이 잦아지고 있다. 이동의 목적은 거의 다 장사를 위해서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정보유통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외부정보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특히 국경지방에서의 자유통행은 중국이나 남한의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북한내에서 남한의 드라마 테이프나 CD까지 유통되고 있고, 남한가요는 매우 인기가 높은 상태이다. 북한 당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북중국경 및 개성·금강산에서의 단속을 강화하지만 이미 단속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향후 북한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즉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재미나 호기심으로 남한 문화를 즐기지만, 부지불식간에 남한을 동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한 것도 대북포용정책에 따른 북한사회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동문제와 관련하여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I-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0을 기록하여 아직도 이동제한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 2.53, 여자 2.43으로서 남자가 약간 더 빈번하게 여행하였다. 아마 이것은 남자들이 주로 직장생활을 하고, 식량해결을 위한 여행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남자들은 여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들은 점점 더 제한이 많은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남자들이 어떤 목적에서건 이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터민들은 식량구입이나 장사목적의 여행증가를 이구동성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는 남자들도 여자 못지 않게 장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과 강원도가 4.00으로서 비교적 높았다. 이들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웠던 것 같다. 특징적인 것은 양강도·자강도는 여행이 점점 증가한 반면, 함경도나 황해도는 여행이 점점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여행통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신축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셋째, 직업별로는 농민이 3.20으로서 비교적 여행자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군인들은 여행자유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농민들이 여행을 자주한다고 대답한 것은 노동자 못지않게 살기가 편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여행의 목적이 장사나 식량구입에 있다고 한다면 농민들의 여행목적도

장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동요계층이 2.95로서 여행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요계층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혜택을 적게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장사를 위한 여행이 많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탈가능성이 높은 동요계층의 여행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이완이 확대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이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퍼져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달리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 사람은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가, 그들은 강원도에서 국경까지 끝에서 끝으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했다고 대답했을 것이다(LSG)”, “평양 사람이 지방에 가기는 쉬워도 지방 사람이 평양에 가기는 어렵다. 평양사람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황해도는 1, 강원도는 4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KYH)”, “황해도는 남쪽 국경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심해서 여행을 잘 못한다. 평양사람이 지방으로 나가는 쉽다. 그런데 평양 사람도 황해도와 개성을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황해도 지역이 평가가 1.0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CJS)”, “특히 개성으로 갈려면 통행증 두 개가 있어야 하며, 특수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KDS)”, “보위부, 안전부 등도 사회를 통제하지만 그들도 부정부패를 한다(KKJ)”, “주민감시는 잘 되고 있다. 김정일이 경제범에 대해서는 석방을 많이 시켰다. 혁명의 원수를 많이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LDH)”.

(4) 탈북자 증감 추이

현재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탈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탈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20여만 정도가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지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탈북자 방지를 위해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효율적인 감시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의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이다.³³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경우도 있지만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표 II-27>에서 보듯이 탈북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탈북자 증가는 북한체제 안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난 심화, 탈북통제 미비 때문이고, 이것은 북한내 민심을 동요시키고 북한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박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탈북자 숫자의 증감 추이는 북한체제 유지 가능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국내에 유입된 숫자는 정부의 수용시설 역량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탈북자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³³ 탈북자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5) 참조.

<표 II-27> 새터민 입국 현황('06년 5월 현재)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5	합계	사망· 이민 등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16	8,403	239	8,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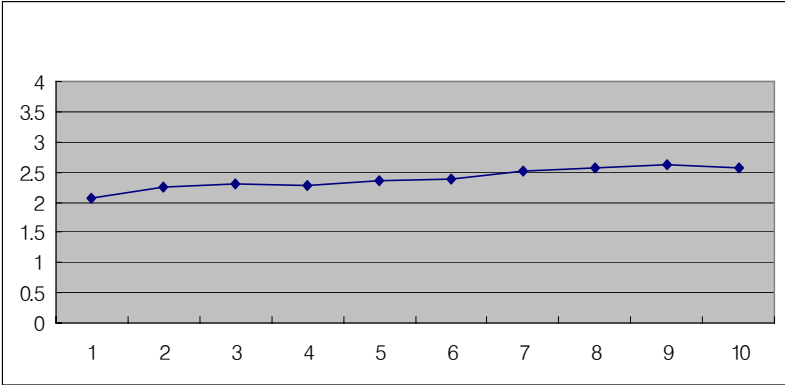
(5) 소결론

북한의 사회통제는 각종 공안기구, 인민반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있어서 탈북자수도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체제유지를 위협할 정도의 사회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새터민들도 북한체제 유지 이유를 사회통제라고 할 정도로 정치·경제·사회적 통제 장치는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하위관료들이 자신의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 부패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뼈라나 낙서외에는 정치적 집회나 폭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회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끊임없이 유입되는 외부정보로 인해 주민들이 언제까지 통제에 순응할 지는 미지수이다.

나. 정치적 반대

(1) 불만표출

<그림 II-24> 일상생활에서의 불만표출 정도



<표 II-28> 일상생활에서의 불만표출 정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49	2.45	2.53	2.50	2.62	2.63	2.71	2.72	2.74	2.74
여자	1.95	2.18	2.24	2.21	2.25	2.27	2.39	2.46	2.51	2.44
합계	2.07	2.24	2.31	2.29	2.36	2.39	2.51	2.57	2.61	2.56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00	2.00	1.50	1.50	2.00	2.00	3.00	3.00	4.00	4.00
함경도	2.05	2.23	2.31	2.33	2.40	2.45	2.57	2.57	2.62	2.57
평안도	2.28	2.38	2.56	2.43	2.43	2.54	2.73	2.80	2.70	2.67
황해도	2.86	3.17	3.25	3.00	2.00	2.00	2.00	2.00	2.00	2.00
양자강도	2.11	2.33	2.33	2.14	2.33	2.33	2.50	2.75	3.33	3.33
강원도	1.78	1.89	2.00	1.50	1.75	1.67	1.00	2.50	2.50	2.50
합계	2.08	2.25	2.33	2.31	2.37	2.42	2.55	2.59	2.65	2.62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17	2.33	2.40	2.43	2.41	2.51	2.69	2.73	2.78	2.70
농민	2.37	2.58	2.50	2.67	2.90	2.88	2.83	2.60	2.60	2.60
인테리	1.81	1.94	2.13	2.25	2.36	2.36	2.70	2.50	2.88	2.88
학생	1.68	1.86	2.08	1.73	1.92	2.00	1.90	1.81	2.07	2.07
군관	2.00	2.00	2.17	2.17	2.40	2.25	2.00	2.00	2.00	2.00
하전사	1.50	1.75	1.75	1.75	2.33	2.50	2.50	2.50	2.50	2.50
대외일군	3.00	2.50	3.00	3.00	4.00	4.00	4.00	4.00	3.00	4.00
합계	2.10	2.25	2.34	2.34	2.41	2.48	2.60	2.59	2.68	2.63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82	2.06	2.29	2.20	2.25	2.27	2.38	2.46	2.54	2.42
기본군중	2.05	2.25	2.24	2.25	2.41	2.54	2.70	2.62	2.65	2.65
동요계층	2.19	2.32	2.32	2.27	2.29	2.27	2.29	2.56	2.74	2.72
적대계층	2.43	2.37	2.63	3.00	2.92	3.00	3.33	3.14	3.50	3.50
합계	2.09	2.25	2.30	2.32	2.41	2.46	2.59	2.62	2.72	2.68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반대가 합법화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서로 다른 정책 및 대중정당이 설립되도록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경쟁자들이 정권을 두고 합법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로 인해 다수당이 인정되고, 이념정당까지 허용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브레진스키(Zbigniew Brezezinski)가 분석한 것처럼 단일정당만이 허용되고, 정치적 반대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은 국가나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헌신·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반대가 용인된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전체주의체제가 아니다.

북한은 수령유일지배체제이다. 수령은 절대자이고, 신적인 존재이다. 어느 누구도 수령의 합법성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할 경우에는 생명보존 자체가 어렵게 된다. 반대정당은 커녕 개별적인 반대입장도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의 이념, 하나의 정당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곳이 북한이다.

이러한 북한에서 정치적 반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만큼 북한이 이완되었거나 민주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에는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김일성·김정일을 비난하는 빼라나 낙서가 등장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내에 민주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김정일에 대한 비난 빼라나 낙서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불만내용은 대체로 관료부패, 배급중지, 월급미지급 등이다. 특히 식량배급 중지가 무엇보다 큰 불만인 것 같다. 이러한 불만은 간헐적으로 빼라나 낙서로 나타나고, 대표적인 불만표시 방법은 북한을 버리고 탈북하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불만을 체계적으로 표출할 통로나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신소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유명무실하고 그것도 생활 속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들일 뿐 노동당이나 김정일에 대한 불만은 표시할 수가 없다. 새터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그림 II-24>와 <표 II-28>에서 나타난 것처럼 2.62정도로서 주민들이 약간의 불만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다. 이 경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적 특성상 자본주의 체제보다 스트레스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위에서 지시한대로 이행하는 흥내만 내면 신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 2.74, 여자 2.44로 나타나 남자가 불만표시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남성중심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아직도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서 여자보다는 남자의 지위가 훨씬 높다. 따라서 불만이 있더라도 여자는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높은 것과는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불만표출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과 양강도·자강도가 4.00과 3.33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평양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답게 상대적으로 불만표출 기회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비교적 식량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불만의 내용이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으로서 월등히 높았다. 이는 대외일군들의 직업특성상 정치문제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개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직군에 있어서는 쉽게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민직군에 있어서는 2002년 이후부터 의견표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2002년 이후부터 남한의 비료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식량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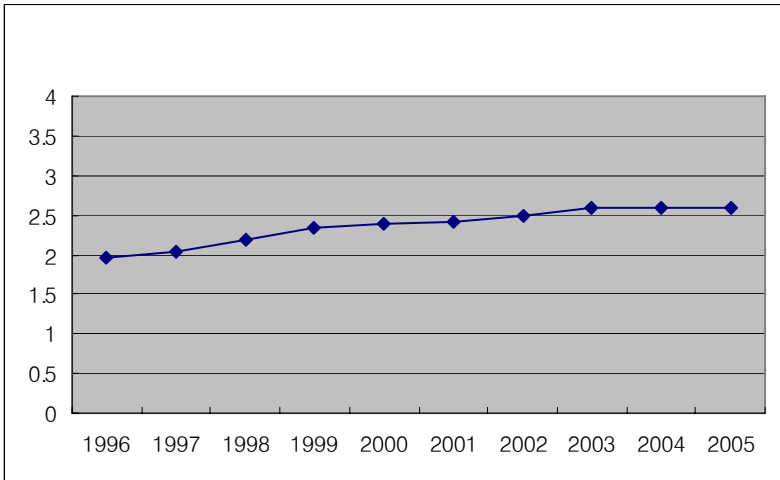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50으로서 타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적대계층의 불만표출이 좀 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 식량난이 심했을 때 적대계층의 희생이 컸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식량배급제에 대한 적극적인 불만표시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사회는 스트레스가 없다. 북한사회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지시를 내리면 ‘나는 이것은 못한다’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노동조건 자체가 스트레스가 없다. 남한사회는 경쟁이 심하고 삶이 복잡하다(LSG)”, “북한에는 대머리도 별로 없다. 북한은 경쟁이 없다. 잘살다가 못살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못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데 스트레스가 없다(ACI)”, “고의적인 제도비방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완전히 충분히 불만을 표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불만은 표현할 수 있다. 의견접수를 하면 누가 제기했는지는 꼭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입된다. 그것이 완전한 자유라고 보기도 힘들다. 신소한 사람들도 주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다. 그 사람들도 따로 관리를 한다. 신소한 사람들이 세력이 확대되어 반체제집단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다(LDH)”, “억울함을 설명하고, 신소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등의

견접수 및 수렴하는 시스템은 매우 잘 되어있다. 이를 잘 못 받아들이면 간부들이 잘릴 수도 있다. 의견접수는 잘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 처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KKJ)”, “부하가 간부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다. 총화에서는 대중이 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북한체제의 유지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당회의(총화)는 실제로 형식적이다. 북한 인민들은 구성원이 자기 직장 동료들인데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고자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60년대만 해도 세포비서를 인민이 자유롭게 뽑고 그들 간의 경쟁이 있어서 북한의 선거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처럼 민주적인 장치가 되었다. 하지만 점차 선거가 형식적으로 바뀌었다(CJH)”.

(2) 비판세력 존재가능성

<그림 II-25> 체제비판 세력 존재 여부



<표 II-29> 체제비판 세력 존재 여부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27	2.28	2.33	2.42	2.51	2.57	2.64	2.62	2.59	2.68
여자	1.85	1.99	2.12	2.30	2.35	2.35	2.39	2.59	2.57	2.52
합계	1.95	2.05	2.18	2.34	2.40	2.42	2.48	2.60	2.58	2.59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2.00	2.50	3.00	4.00	4.00	4.00	4.00	4.00	4.00
함경도	1.89	2.00	2.16	2.31	2.37	2.34	2.44	2.54	2.52	2.50
평안도	2.13	2.07	2.00	2.25	2.33	2.55	2.50	2.44	2.44	2.50
황해도	2.43	2.80	3.00	3.00	2.50	2.50	2.50	2.50	2.50	4.00
양자강도	2.44	2.56	2.67	2.57	2.50	2.80	2.80	2.75	3.00	3.00
강원도	2.33	2.33	2.25	2.75	2.75	2.67	2.50	4.00	4.00	4.00
합계	1.95	2.06	2.19	2.35	2.40	2.41	2.48	2.59	2.58	2.60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1.94	2.07	2.26	2.38	2.42	2.43	2.52	2.62	2.59	2.62
농민	2.00	2.09	1.94	2.27	2.44	2.57	2.50	2.40	2.60	2.60
인테리	1.75	1.81	1.87	1.83	2.00	2.18	2.20	2.38	2.50	2.50
학생	1.74	1.81	1.92	2.07	2.17	2.00	2.00	2.00	2.00	2.00
군관	2.67	2.83	2.83	3.00	3.00	2.75	3.00	2.75	2.75	2.67
하전사	2.25	2.50	2.50	2.50	2.67	2.50	2.50	2.50	2.50	2.50
대외일군	2.67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합계	1.94	2.05	2.18	2.31	2.39	2.39	2.46	2.54	2.55	2.56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계층	1.67	1.77	2.04	2.00	2.20	2.40	2.42	2.91	2.91	3.00
기본계층	1.95	2.08	2.17	2.37	2.47	2.51	2.58	2.58	2.63	2.53
동요계층	1.90	2.02	2.17	2.32	2.26	2.34	2.45	2.56	2.43	2.45
적대계층	2.41	2.45	2.50	2.85	2.85	2.70	2.78	2.86	3.00	3.50
합계	1.95	2.05	2.18	2.35	2.42	2.46	2.54	2.64	2.64	2.65

북한에서는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 정권교체를 겨냥한 파벌은 소멸하였다.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파벌은 철저히 봉쇄당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북한내에는 대안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지하교회나 소수중심의 반체제세력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의 구체적 실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개인이 아닌 ‘비판세력’이 존재한다면 북한체제 변화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1995년 6군단 사건처럼 쿠데타기도설이 있으나 그것은 6군단 부정부패 사건이었고, 2004년 용천역폭파사건도 명확히 김정일을 겨냥한 사건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제난 심화이후, 북한내에도 불만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감시와 통제로 인해 집단화가 불가능할 뿐이지 불만에 대한 묵시적 동의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새터민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설문결과로는 <그림 II-25>와 <표 II-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0정도로 나타나 비판세력의 존재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에 의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68, 여자가 2.52로서 남자가 약간 더

높게 나왔다. 남자들이 체제비판세력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것은 남자가 직장을 통해 들은 소문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별로는 평양, 황해도, 강원도 등이 4.00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뼈라를 직접 목격한 경우이거나 6군단사건을 전해들은 것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적인 것은 평안도, 양강도, 자강도 등 일부지역에서만 2002년 이후, 일시적으로 체제비판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가장 높은 3.00을 기록하였다. 이 직업군은 해외정보를 직접 접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고위 탈북자 중에는 외교관이나 해외유학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2002년 7·1조치 직후인 2003년에는 농민과 하전사 직군에서 체제비판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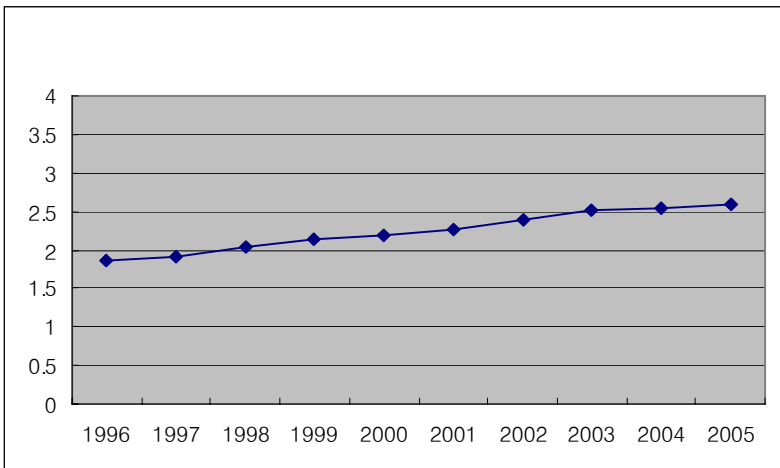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50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새터민들이 체제비판세력이 있다면 적대계층이나 불만세력 중에 있을 것으로 예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계층은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보다 분명히 비판세력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세력이라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PSJ, JNS)”,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세력화 할 수 없다(LSG)”, “세력화하려면 통신의 자유가 있어야할 텐데 북한은 통신의 자유가 없다(ACI)”, “외교부에도 김정일 반대 전단지 2번이나 돌았다. 평양에서 김정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치가

높게(4.0)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있다(KYH)”, “항시적으로 조금씩은 계속 있었다. 평성이과대학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반체제운동이 있었고 강령처럼 명문화하고 있었기도 했다. 이런 것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있었다. 그런데 그 집단들은 그들끼리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금방 적발되었다. 대학생 내에서도 보위부 소속이 점조직처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은 절대 소문이 나지 않는다(CJS)”, “일부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뿐이지 조직화된 세력이 있지는 않다. 북한에서는 반체제집단의 기준으로 조직명단이 있는가, 조직 강령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LDH)”, “6군단 사건도 개별적인 사람들의 처벌이지 조직화된 반체제운동은 아니었다. 그것도 부정부패 사건이었지 반체제집단의 폭동은 아니었다(KKJ)”.

(3) 체제비판 행위

<그림 II-26> 최고위층 비판 행위 존재 여부



<표 II-30> 최고위층 비판 행위 존재 여부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34	2.28	2.39	2.35	2.42	2.44	2.53	2.58	2.63	2.65
여자	1.73	1.81	1.95	2.06	2.08	2.19	2.32	2.48	2.49	2.55
합계	1.85	1.90	2.05	2.13	2.18	2.26	2.39	2.52	2.55	2.59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00	1.00	1.5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함경도	1.85	1.90	2.06	2.17	2.19	2.27	2.41	2.49	2.49	2.57
평안도	1.88	2.00	2.00	2.00	2.00	2.00	2.20	2.44	2.67	2.50
황해도	2.29	2.33	2.50	2.25	2.00	2.00	2.00	2.00	2.00	
양자강도	1.78	1.78	1.89	2.00	2.17	2.17	2.17	2.25	2.00	2.00
강원도	1.87	2.00	1.71	1.33	1.67	1.50	1.00	4.00	4.00	4.00
합계	1.85	1.90	2.04	2.13	2.15	2.23	2.36	2.48	2.51	2.57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1.86	1.90	2.12	2.25	2.19	2.34	2.43	2.57	2.52	2.68
농민	1.77	1.84	1.89	2.18	2.22	2.29	2.33	2.50	2.50	2.50
인테리	1.75	1.88	1.93	1.75	2.00	2.09	2.30	2.62	2.75	2.75
학생	1.66	1.66	1.73	1.75	2.00	2.00	2.00	1.83	1.60	1.60
군관	2.33	2.33	2.50	2.60	2.60	2.00	2.00	2.00	2.50	2.00
하전사	1.50	1.50	1.50	1.50	1.67	1.50	1.50	1.50	1.50	1.50
대외일군	2.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합계	1.82	1.87	2.03	2.12	2.16	2.25	2.34	2.47	2.46	2.52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계층	1.43	1.52	1.73	1.29	1.43	1.43	1.64	1.70	2.00	2.10
기본계층	1.89	1.95	2.13	2.24	2.33	2.45	2.50	2.68	2.71	2.72
동요계층	1.91	1.98	2.10	2.31	2.28	2.39	2.41	2.57	2.50	2.55
적대계층	2.20	2.17	2.06	2.33	2.25	2.10	2.44	2.71	2.67	2.75
합계	1.86	1.91	2.06	2.14	2.19	2.26	2.37	2.53	2.54	2.57

어느 국가에서나 체제비판 행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성향이 상이하고, 완벽한 체제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통제가 완벽하고,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저급할지라도 욕을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불만표출 정도는 존재한다.

새터민들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불만표출 방법이 빠라와 낙서이고, 다음으로 상징물의 훼손이다. 주 내용은 ‘김정일 타도’라는 문구이고, 김정일은 ‘도적놈’이라는 문구도 있다. 그리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말씀판’을 긁거나 진흙칠을 하고, 초상화에 낙서하는 것 등이다. 중요한 것은 식량난 이후 이러한 비판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주민들사이에는 “말반동은 반동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많아 예전처럼 비판언사 자체가 금기시되었던과는 달리 아주 친한사이에는 ‘말반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림 II-26>과 <표 II-30>에서 보듯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에 의해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65, 여자가 2.55로 나타나 남자가 더

뼈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직장이나 아니면 타 지역 여행시에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는 경우가 여자보다 많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강원도가 4.00으로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뼈라를 직접 목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서 남한으로부터의 선전물이 많이 뿌려지고 있고, 이의 영향으로 ‘반김정일 뼈라’도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업적으로는 대외일군이 3.00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외일군들은 직접 목격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급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노동자가 2.68로서 노동자들이 공장이나 직장에서 뼈라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상태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2.75로서 가장 높았다. 적대계층은 직접 목격한 경우와 소문을 청취한 경우가 혼재된 것 같다. 적대계층이 거주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판행위가 많았을 것이고, 그 만큼 소문도 많았을 것이다. 많은 새터민들이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개별적인 행위로 비판의 뼈라와 낙서를 드물게 있을 수 있다. 뼈라 내용은 뼈라 보고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도 절대 취급 못하도록 되어 있다(PSJ)”, “있기야 하지만 빈번하지 않다(LSG)”, “외교부 안에도 전단지, 뼈라가 돌았으니깐,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내가 본 전단지는 ‘김정일의 문화예술정책을 비판함’이라는 주제였다. 고

영희와 김정일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KYH)”, “상당히 많이 있다. 높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 신빙성 있다(CJ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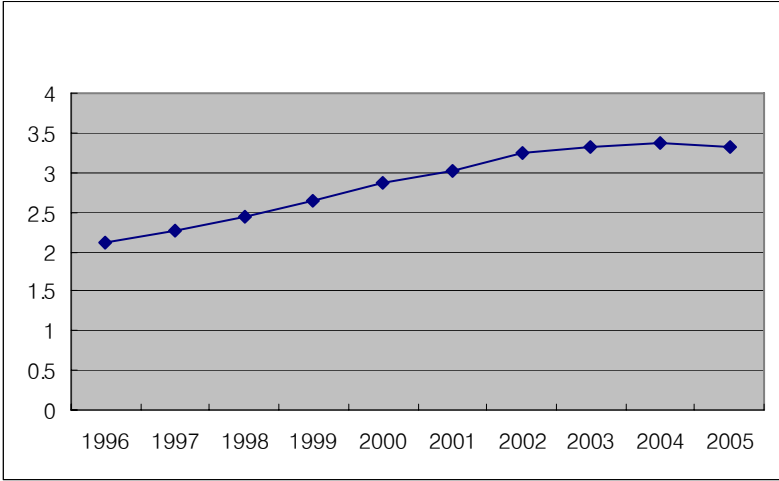
(4) 소결론

정치적 정당성 보다는 철저한 강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북한에서 반체제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록 간헐적인 체제비판 낙서나 뼈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체제 운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새터민들도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로 철저한 통제를 들고 있다. 물론 체제유지의 최첨병이라 할 수 있는 보안원이나 보위부원들이 부패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체제비판까지 용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체제붕괴 또는 김정일정권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들어 남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외부정보 유입이 확대되고, 자본주의적 문화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체제비판 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비판적인 말이나 행동이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최소한 신뢰할만한 친구나 동료간에는 보다 비판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것 같다. “말 반동은 반동이 아니다.” 향후 이러한 현상이 더 증가할 지 아니면 더 감소할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다. 반문화 형성

(1) 청소년 문화

<그림 II-27> 자본주의적 문화 존재 여부



<표 II-31> 자본주의적 문화 존재 여부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63	2.69	2.77	2.84	3.08	3.17	3.29	3.35	3.36	3.27
여자	1.98	2.16	2.32	2.58	2.76	2.97	3.23	3.29	3.39	3.37
합계	2.12	2.27	2.43	2.65	2.86	3.03	3.25	3.31	3.38	3.32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2.00	2.5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함경도	2.09	2.25	2.40	2.60	2.81	2.99	3.14	3.19	3.27	3.22
평안도	2.06	2.13	2.19	2.71	2.79	2.85	3.45	3.50	3.50	3.44
황해도	2.14	2.17	2.25	2.25	3.50	3.50	3.50	3.50	3.50	3.00
양자강도	2.89	2.89	2.89	3.14	3.33	3.50	3.67	3.80	3.75	3.75
강원도	1.43	1.71	1.83	1.50	2.00	3.00				
합계	2.09	2.24	2.39	2.62	2.83	3.02	3.22	3.27	3.34	3.28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06	2.21	2.38	2.60	2.78	2.96	3.18	3.27	3.32	3.23
농민	2.00	2.15	2.29	2.54	2.36	2.89	3.13	3.14	3.20	3.20
인테리	1.88	2.00	2.31	2.38	2.83	2.92	2.91	2.87	3.25	3.25
학생	1.97	2.13	2.19	2.44	2.92	3.10	3.11	3.14	3.00	3.00
군관	2.67	2.83	3.00	3.20	3.40	3.25	3.50	3.50	3.50	3.50
하전사	1.75	1.75	1.75	2.00	2.67	3.50	3.50	3.50	3.50	3.50
대외일군	3.00	3.00	3.50	3.5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05	2.19	2.35	2.57	2.81	2.99	3.16	3.24	3.30	3.25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56	1.82	2.07	2.42	2.63	3.00	3.08	3.33	3.58	3.58
기본군중	2.08	2.25	2.41	2.59	2.82	2.98	3.18	3.23	3.34	3.34
동요계층	2.41	2.53	2.68	2.80	3.09	3.22	3.47	3.48	3.48	3.33
적대계층	2.43	2.45	2.50	2.85	2.93	3.00	3.33	3.43	3.33	3.25
합계	2.12	2.28	2.44	2.65	2.88	3.05	3.27	3.34	3.42	3.38

북한은 철저히 반자본주의적 문화를 권장한다. 자유주의적이거나 선정주의적인 문화는 절대 용인되지 않고, 북한화된 전통문화나 미풍양속만 강조된다. 가요나 춤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이나 수령을 형상화하는 내용이 빠지면 않된다. 영화나 예술은 ‘종자론’에 입각하여 제작되고 공연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동량으로서 유년시절부터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체득된 집단주의 문화는 나보다는 집단이나 국가를 우선시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개방확대를 통해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남한노래나 춤(디스코)이 유행하고, 심지어 남한 드라마까지 CD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장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북한 청소년의 60%~70%가 남한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개정 헌법에는 불법 카세트나 CD를 엄히 다스린다는 조항까지 등장하였다.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할 때 남한의 CD나 카세트, 책자, 신문 등의 휴대를 철저히 금지하는 사실은 북한의 남한문화에 대한 경계심의 정도를 증명해 준다. 조사결과 <그림 II-27>과 <표 II-31>에서 나타났듯이 자본주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응답이 3.31정도를 기록, 북한내에 상당한 ‘반주체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이 조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3.27, 여자는 3.37로서 여자가 청소년들의 ‘반문화’를 보다 많이 느낀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청소년과의 대면이 더 많고, 그에 비례하여 그들에 대한 정보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징적인 것은 199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자본주의문화가 2005년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그 만큼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이 4.00으로서 단연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평양이 외국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 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접할 기회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평양의 대남일군들은 남한의 사극드라마를 거의 놓치지 않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양강도, 자강도가 3.75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중국과의 국경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어서 남한의 문화용품이 쉽게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직업상 중국여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남한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전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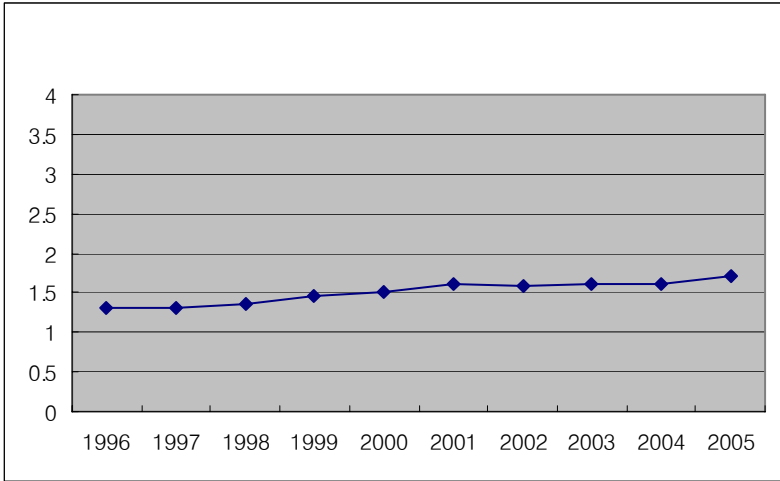
넷째, 계층별로는 핵심계층이 3.58로서 북한내 상층부가 자본주의 문화를 더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내 핵심계층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본주의 문화를 접하고 있고, 그것을 유통시키고 있다.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 자신도 남한 노래나 드라마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부터는 자본주의문화에 대한 단속이 심해서 그 정도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만연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도 자본주의적 놀이문화가 전파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현상이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남한 문화가 전파되는 현상은 김정일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이라고 이해된다(PSJ, JNS)”, “북한에서 많이 유행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LSG)”, “문화적인 동경이 있겠지만, 체제와 사회적인 동경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없다. 문화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ACD)”, “새로운 것에 대해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진다. 또한 남한 대중문화는 재미있으나, 북한의 대중문화는 재미없고 지루하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남한 대중문화의 확산을 이해할 수 있다(KYH)”, “몰래 비디오를 본다는 것을 처음에는 적발하고 처벌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본다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비디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보위부들도 그것을 회수해서 그것을 보위부원들이 몰래본다. 북한노래는 매우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나, 남한노래는 부드럽고 즐겁다. 또한 남한노래를 들으면 남한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문화확산 현상은 한반도의 장래를 고려해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민족적인 동질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CJS)”, “자본주의적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친화력이 높게 나온다(LDH)”,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침투함으로써 탈북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CJH)”.

(2) 종교활동

<그림 II-28> 종교활동 존재 유무



<표 II-32> 종교활동 존재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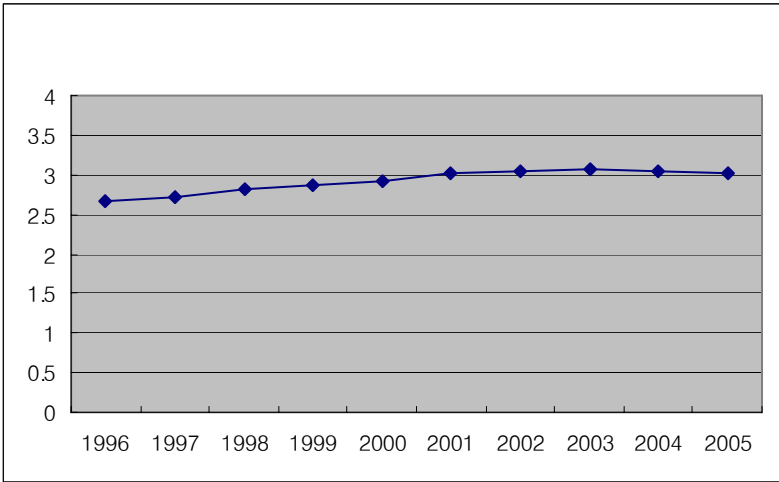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1.42	1.45	1.52	1.47	1.51	1.59	1.55	1.62	1.68	1.85
여자	1.27	1.29	1.31	1.48	1.52	1.61	1.60	1.58	1.58	1.60
합계	1.30	1.32	1.36	1.47	1.52	1.60	1.58	1.60	1.62	1.70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1.67	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함경도	1.30	1.33	1.38	1.48	1.52	1.62	1.62	1.61	1.64	1.72
평안도	1.22	1.13	1.13	1.29	1.29	1.31	1.27	1.40	1.30	1.33
황해도	1.57	1.67	1.75	1.75	1.00	1.00	1.00	1.00	1.00	1.00
양자강도	1.38	1.38	1.38	1.33	1.33	1.33	1.33	1.50	1.33	1.33
강원도	1.00	1.00	1.00	1.00	1.00	1.00				
합계	1.30	1.32	1.36	1.47	1.48	1.57	1.57	1.58	1.59	1.67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1.32	1.34	1.36	1.45	1.41	1.49	1.44	1.46	1.47	1.58
농민	1.15	1.15	1.35	1.67	1.80	2.13	2.14	2.60	2.50	2.50
인테리	1.31	1.31	1.27	1.42	1.55	1.55	1.60	1.63	1.63	1.63
학생	1.24	1.25	1.24	1.50	1.73	1.67	1.75	1.67	1.60	1.60
군관	1.83	1.83	1.83	2.00	2.00	2.00	2.00	2.00	2.00	2.25
하전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외일군	1.00	1.00	1.67	1.00	2.00	2.00	2.00	2.00	4.00	4.00
합계	1.29	1.31	1.35	1.47	1.50	1.58	1.55	1.58	1.60	1.70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18	1.22	1.33	1.50	1.53	1.53	1.50	1.50	1.50	1.75
기본군중	1.24	1.28	1.29	1.37	1.41	1.55	1.58	1.70	1.75	1.73
동요계층	1.46	1.43	1.46	1.63	1.59	1.65	1.62	1.52	1.55	1.64
적대계층	1.43	1.50	1.47	1.62	1.69	1.73	1.67	1.57	1.50	1.75
합계	1.31	1.33	1.36	1.49	1.51	1.59	1.59	1.61	1.63	1.71

<그림 II-29> 무속활동 존재 유무



<표 II-33> 무속활동 존재 유무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87	2.82	2.92	2.97	3.03	3.03	3.06	3.06	3.03	2.96
여자	2.60	2.68	2.80	2.84	2.88	3.01	3.05	3.06	3.05	3.08
합계	2.66	2.71	2.83	2.88	2.93	3.02	3.05	3.06	3.04	3.03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33	2.33	3.5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함경도	2.60	2.67	2.80	2.83	2.90	2.96	3.02	3.06	3.04	3.04
평안도	2.65	2.60	2.60	2.85	2.77	3.00	2.90	3.00	3.00	3.13
황해도	3.00	3.00	3.00	3.25	3.50	3.50	3.50	3.50	3.50	4.00
양자강도	3.22	3.22	3.22	3.14	3.17	3.33	3.33	3.00	2.67	2.67
강원도	2.14	2.43	2.33	3.00	3.50	4.00				
합계	2.62	2.68	2.80	2.87	2.92	3.01	3.05	3.07	3.05	3.06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60	2.65	2.75	2.72	2.76	2.91	2.89	2.91	2.90	2.85
농민	2.34	2.46	2.57	2.69	2.73	2.67	3.00	3.17	3.17	3.40
인테리	2.71	2.82	2.94	3.08	3.08	3.25	3.45	3.38	3.38	3.50
학생	2.60	2.63	2.82	3.25	3.58	3.60	3.56	3.71	3.67	3.67
군관	3.50	3.50	3.67	3.60	3.60	3.75	3.75	3.75	3.75	3.25
하전사	2.00	2.00	2.00	2.00	2.33	2.00	2.00	2.00	2.00	2.00
대외일군	3.67	3.50	3.50	3.5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60	2.65	2.78	2.84	2.91	3.02	3.05	3.07	3.07	3.06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58	2.70	3.00	2.95	3.06	3.06	3.23	3.50	3.50	3.45
기본군중	2.50	2.59	2.65	2.67	2.80	2.92	2.95	3.03	3.03	3.11
동요계층	2.86	2.84	2.83	2.95	2.94	3.00	3.03	2.96	2.96	2.77
적대계층	2.96	2.95	3.11	3.38	3.31	3.36	3.33	3.14	3.00	3.00
합계	2.65	2.71	2.80	2.87	2.93	3.01	3.05	3.09	3.08	3.05

북한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인민들이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종교의 교주에게 충성하거나 신에게 기복하는 것을 막기위해 종교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자유주의 세계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회 성당, 사찰을 세우고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제선전을 위한 종교의 도구화에 불과할 뿐 여전히 북한내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들은 모두 조선노동당 당원이고, 수령주의에 충실한 자들이다. 교역자들은 하나의 생활방편으로서, 아니면 노동당원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만일 지하교회를 비롯해 음성적 종교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면 수령주의체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이 될 것이다. 주체종교의 교주인 김일성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타종교의 교주를 신봉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기본이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체종교의 교리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이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공공연하지는 않지만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예배를 드리는 극소수의 기독교신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확산일로에 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북한주민들은 점이나 사주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종교와 같은 신앙이라기 보다는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같다. 사주나 관상을 보는 행위는 오히려 신분상승 기회가 있는 간부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림 II-28>와 <표 II-32>에서 종교활동 유무에 대한 응답이 1.71을 기록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내에서 종교활동이라고 할만한 행위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종교활동 존재유무와 관련한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1.85, 여자가 1.60으로서 남자가 더 종교활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가 사회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이 3.00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양에는 비록 선전용이기는 하지만 장충성당, 봉수교회, 칠골교회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으로 가장 높았다. 대외일군들은 정보취득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인정한 종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취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넷째, 계층별로는 핵심계층과 적대계층이 공히 1.75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핵심계층은 정보에 의해서, 적대계층은 소문에 의해서 종교의 존재를 인식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대계층 중에는 비밀종교활동을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속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림 II-29>와 <표 II-33>에서 3.05정도로 나타났듯이 무속활동이 상당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암울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성행하는 것 같고, 자신의 운명을 수령이나 장군이 아닌 다른 행위자에게 의존해 보겠다는 태도여서 향후 이것이 어떤 정치적 행위로 나타날 지가 주목된다. 무속활동에 대한 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96, 여자가 3.08로서 여자들이 무속의 존재를 더 많이 인정했다. 이는 여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아서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무속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2004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 황해도, 강원도 등이 4.00을 기록하여 이 지역에서 무속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에서는 1999년부터 무속활동이 급속히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양지역이 여타지역에 비해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높았기 때문이고, 이는 곧 신분상승 기회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황해도나 강원도는 반대로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미래의 도래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하였다. 대외일군들은 무속의 존재에 대한 정보 취득의 상대적 우위에 의해, 또는 자신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호기심에 의한 직접경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계층별로는 핵심계층이 3.4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시 핵심계층은 미래의 신분상승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동료들로부터 ‘용한 사주쟁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들었을 개연성도 크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북한사람은 무신론자이며, 철저히 실용주의자로 볼 수 있다(PSJ)”, “대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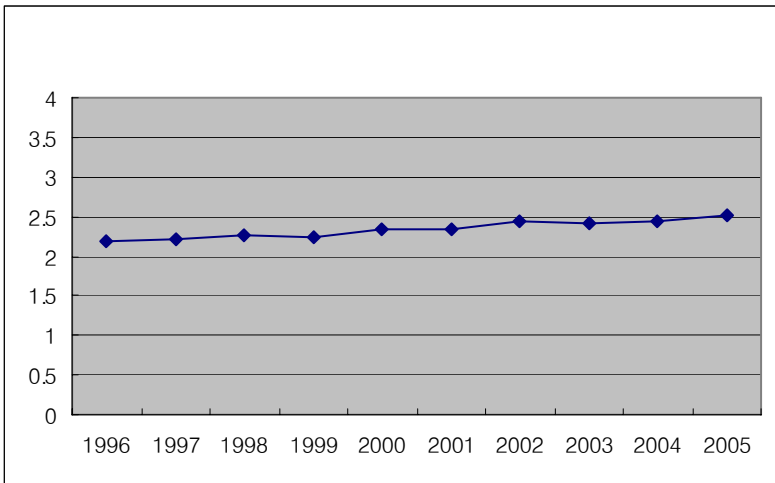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LSG)”, “남한 기독교인들이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주장하나, 혹시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으나 10명이 넘는 정도로 조직화될 수 없다(ACI)”,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종교를 가지는가 유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진다. 첫째,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하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싫증나서 남한에서도 왜 종교를 믿어야 하나 하는 식으로 남한에서 종교 믿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고 체제에 순종적이었듯이, 남한에 와서도 종교를 쉽게 믿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탈북자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CJH)”.

한편 무속과 관련해서는 고위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무속활동, 특히 점보는 것은 있다. 저희 가족과 저도 이에 약간의 관심을 가졌다(LSG)”, “여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ACI)”, “종교 활동은 적으나 무속종교 활동이 빈번했다는 것은 이해간다. 외교관도 이를 믿다가 직위해제당하고 공개비판 받고 양강도로 쫓겨난 사례가 있다. 또한 북한에는 의약품이 부족하니까 무속종교가 퍼지기도 한다. 또한 사회가 암울하고, 먹을 것 없고, 아프니까, 즉,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무속종교 활동에 대해 간부가 뒤를 봐주기도 한다. 무속종교 활동을 심심풀이로 할 수도 있다. 내가 승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사주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KYH)”, “북한사회가 어려우니까 무속종교 활동이 더 많다. 간부들이 더 많이 하는데 간부들은 차를 타고 데리고 온다. 공개적으로는 비밀인데, 암암리에, 아주 비밀로 해서 이런 무속종교 활동을 한다. 부인이 재촉해서 3번 갔다. 여러 점

과 중에 “귀인이 남쪽에 있다. 북에 가지 말고 남에 가라. 한번 남에 가면 다시 못 돌아 온다”는 점괘가 나온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나는 일에 열중할 때였고 내가 탈북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남쪽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가보다 생각하였다(KDS, CJS)“, “집사람도 가끔씩 무속종교 활동에 심취했다. 예를 들어 새 집에 이사 왔을 때 액운을 쫓는다고 바가지를 깬다. 북한에도 무속종교 활동은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CJH)”.

(3) 전통적 집단 의식

<그림 II-30>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의 존재 유무



<표 II-34>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의 존재 유무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29	2.25	2.29	2.30	2.42	2.35	2.43	2.45	2.50	2.61
여자	2.16	2.21	2.25	2.23	2.29	2.32	2.46	2.40	2.41	2.44
합계	2.19	2.22	2.26	2.25	2.33	2.33	2.45	2.42	2.45	2.51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2.00	1.67	1.50	3.00	3.00	3.00	3.00	3.00	4.00	4.00
함경도	2.20	2.25	2.29	2.25	2.35	2.33	2.44	2.44	2.45	2.51
평안도	2.06	2.00	2.07	2.17	2.25	2.27	2.44	2.38	2.50	2.57
황해도	2.17	1.80	1.67	1.67	1.00	1.00	1.00	1.00	1.00	1.00
양자강도	2.38	2.38	2.50	2.33	2.20	2.20	2.40	2.50	2.33	2.33
강원도	2.29	2.29	2.67	3.00	3.00	3.00				
합계	2.19	2.22	2.28	2.25	2.32	2.30	2.41	2.41	2.43	2.51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18	2.26	2.33	2.25	2.25	2.32	2.42	2.43	2.47	2.59
농민	1.96	1.82	1.81	1.50	1.33	1.25	1.25	1.33	1.33	1.33
인테리	1.88	1.88	1.87	2.08	2.36	2.27	2.30	2.00	2.25	2.25
학생	2.31	2.27	2.33	2.53	2.75	2.80	2.78	2.88	2.83	2.83
군관	2.50	2.33	2.17	2.60	2.60	2.25	2.25	2.25	2.25	2.25
하전사	1.50	1.50	1.50	1.50	1.67	1.00	1.50	1.50	1.50	1.50
대외일군	3.00	3.00	3.00	3.00	4.00					
합계	2.14	2.17	2.22	2.22	2.29	2.29	2.35	2.35	2.38	2.45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2.28	2.31	2.27	2.24	2.43	2.64	2.75	2.75	2.75	2.75
기본군중	2.00	2.02	2.08	2.05	2.12	2.13	2.15	2.15	2.23	2.12
동요계층	2.40	2.42	2.46	2.40	2.50	2.45	2.67	2.61	2.63	2.69
적대계층	2.20	2.32	2.29	2.69	2.86	2.64	2.89	2.86	2.83	3.25
합계	2.15	2.18	2.22	2.24	2.35	2.35	2.46	2.44	2.48	2.48

조선인의 전통은 음주가무를 즐기고, 혈연, 지연과 관련한 모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파벌이나 학파가 조성되는 가운데 유사시에는 일정한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는 일이 많았다. 북한에서도 해방이후에는 각종 파벌이 난무하였고, 김일성은 소련파나 연안파에 의해 권력을 탈취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김일성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파벌을 척결하기 위해 학연, 지연, 혈연과 관련한 모임을 적극 금지시켰다. 이후부터 관료 등용 요건은 충성심이었고, 출신성분이 중시되었다. 김일성이 체제 유지를 위해 출신성분을 중시함에 따라 소위 핵심계층의 ‘신계급’으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 졌고, 이후부터 같은 계층끼리의 승진이나 혼인 등이 성행하였다.

연고주의에 의한 정치적 파벌 조성 행위는 소멸된 반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친인척을 끌어주는 행위는 더욱 증가하였다. 연고 중시 현상은 입당 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전통적 집단 의식은 ‘종파주의적’ 행동으로서 북한내에서는 체제 도전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필요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를 기피한다. 특히,

식량난 이후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신분상승을 위해 지원, 혈연, 학연을 동원하는 예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I-30>과 <표 II-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고주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9로 나타나 북한내에도 연고주의에 의한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수준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설문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에 의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61, 여자가 2.44로서 남자들이 연고를 더 많이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은 직장획득이나 이동, 신분상승을 훨씬 중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행위시에 연고를 활용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이 4.00으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연고를 통한 사회활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은 북한의 명문대학이 모두 몰려있는 곳이고, 고위간부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고에 의한 문제해결 유희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외일군이라는 직업은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이나 상층엘리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지위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에 따라 연고주의도 성행했을 것이다. 실제로 대외일군들 중에는 고위급 자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25를 기록,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대계층은 신분상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지만 경제난

이후 뇌물을 주면 어느 정도의 사회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 경우 특히 연고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연고를 통한 사회활동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그들끼리 친소 관계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ACI)”, “북한은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KDS)”.

(4) 소결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외부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교의 대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정치적 혼란의 맹아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외부세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비록 안다할지라도 외부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지킬만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비록 경제난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 원인이 미국이나 외부의 봉쇄에 의한 것이지 김정일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내부 책임이라 할지라도 농업이나 공업담당 관료들의 잘못이라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봉쇄만 풀리면 곧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국가에서 금지하는 종교활동을 굳이 모험을 해가면서까지 선택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다만 사주나 관상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유행하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어서 간부들까지도 본인의 장래를

당장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반사회주의 문화’에 의존하는 것 같다. 연고주의 또한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 같다. 그것이 파벌로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지상정으로 학연, 지연에 따라 문제 해결 여부가 결정이 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 북한의 부모들이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을 보내려는 이유도 이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5. 대외관계 분야 평가

가. 외부정보의 유입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부정보의 차단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이완을 우려하여 한국전쟁이후 철저한 사상통제를 하였고, ‘자주’라는 이름으로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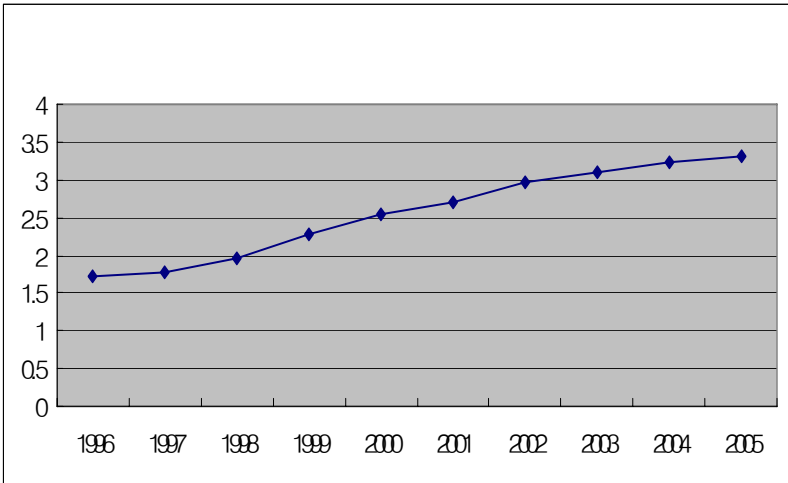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1950년대~1960년대에 머물러 있고, 비교의 기준이 없는 주민들은 북한체제가 최고이며 북한보다 더 잘사는 나라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여 마치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사고가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있다. 비록 외부세계를 안다고해도 ‘범죄소굴’, ‘거지소굴’ 등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어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나 남한을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부터는 남한을 비롯한 외부정보가 점점 증

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남한이 잘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북한주민들로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남한 변화의 인지도

<그림 II-31> 남한 사정 인지 여부



<표 II-35> 남한 사정 인지 여부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17	2.17	2.36	2.49	2.89	3.00	3.09	3.15	3.22	3.26
여자	1.61	1.69	1.84	2.19	2.40	2.58	2.89	3.06	3.26	3.33
합계	1.72	1.78	1.95	2.27	2.54	2.71	2.96	3.09	3.24	3.30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1.67	2.00	3.00	3.00	3.00	3.00	4.00	4.00	4.00
함경도	1.72	1.78	1.96	2.25	2.50	2.66	2.94	3.05	3.21	3.31
평안도	1.78	1.81	1.94	2.29	2.86	2.92	3.18	3.20	3.40	3.33
황해도	2.43	2.33	2.75	3.50	3.50	3.50	3.50	3.50	3.50	4.00
양자강도	1.63	1.63	1.88	1.67	2.00	2.17	2.50	3.25	3.00	3.00
강원도	1.75	1.75	1.71	2.00	2.33	2.50	2.00	2.00		
합계	1.74	1.79	1.96	2.26	2.53	2.68	2.94	3.09	3.24	3.32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1.66	1.71	1.87	2.18	2.40	2.58	2.83	2.95	3.10	3.18
농민	1.86	2.00	2.02	2.31	2.55	2.75	2.86	3.17	3.40	3.60
인테리	1.88	1.88	2.07	2.25	2.55	2.55	3.00	3.25	3.50	3.50
학생	1.63	1.67	1.83	2.50	2.82	3.00	3.38	3.33	3.40	3.40
군관	2.17	2.17	2.17	2.40	3.00	3.00	3.00	3.00	3.25	3.50
하전사	2.00	2.00	2.00	2.00	2.33	3.00	3.00	3.00	3.00	3.00
대외일군	2.50	2.50	2.50	2.50	3.50	4.00	4.00	4.00	4.00	4.00
합계	1.72	1.77	1.91	2.24	2.51	2.67	2.92	3.03	3.19	3.29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군중	1.56	1.66	1.93	2.39	2.80	2.93	3.42	3.58	3.67	3.73
기본군중	1.68	1.74	1.92	2.20	2.52	2.68	2.89	3.00	3.14	3.20
동요계층	1.74	1.77	1.98	2.20	2.49	2.68	2.84	2.88	3.14	3.33
적대계층	2.18	2.29	2.33	2.77	2.93	3.00	3.33	3.43	3.50	3.25
합계	1.73	1.79	1.98	2.28	2.59	2.75	2.98	3.08	3.25	3.33

남한은 북한에게 ‘준주적’에 해당한다. ‘적’은 곧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지만 남한을 미국과 동일시함으로써 북한은 아직도 보수적인 대남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적극 저지한다.

평양의 특급호텔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으로의 전화는 가능하지만 남한으로의 전화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단적인 증거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그 만큼 남한과의 직접접촉을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북자들도 중국에만 머무르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문제가 없지만 남한을 다녀왔거나 중국에서 남한인과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면 큰 처벌을 받는다.

아직까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가 전해지고, 남한에 대한 인지가 좋아진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결속력에 급격한 균열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주민들은 남한은 거지상태이고, 북한보다 훨씬 못사는 것으로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만일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전통적인 세뇌교육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전역은 아니지만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소식이 중국 조선족이나 화교를 통해 전해지고, 남한의 각종 문화상품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표식을 지닌 채, 공공연하게 퍼지고 정부 및 NGO를 통한 대북 지원이 증가하면서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남한을 동포로 인식하고, 타도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를 봉쇄하기 위해 남한의 햇별정책은 북한붕괴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경계심은 절대로 늦춰서는 않된다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금강산에서만 하도록 남한에 요구하고, 상설면회소조차도 금강산에만 건축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림 II-31>과 <표 II-35>에 의하면 남한에 대한 인지도는 3.31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전통적으로는 남한을 ‘미제괴뢰’나 “거지가 득실거리는 거리” 정도로만 인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1990년대 초 경제난 이후 남한의 대북 지원이 증가하고, 중국으로부터 남한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남한에 대한 정보 취득 문제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3.26, 여자는 3.33으로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20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여자들도 남자못지않게 외부소식을 많이 접하기 시작했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 남한의 대북 지원식량 및 비료로 인해 가사를 도맡은 여자들이 남한소식을 많이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평양과 황해도가 4.00을 기록하였다. 평양은 남한관련 문화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해도는 상대적으로 남한과 가깝고 수해가 많아 남한의 대북 지원식량이 많이 배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된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는 평양에까지 남한의 지원물자들이 배급됨으로써 남한 사정이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다.

셋째, 직업별로는 역시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함으로써 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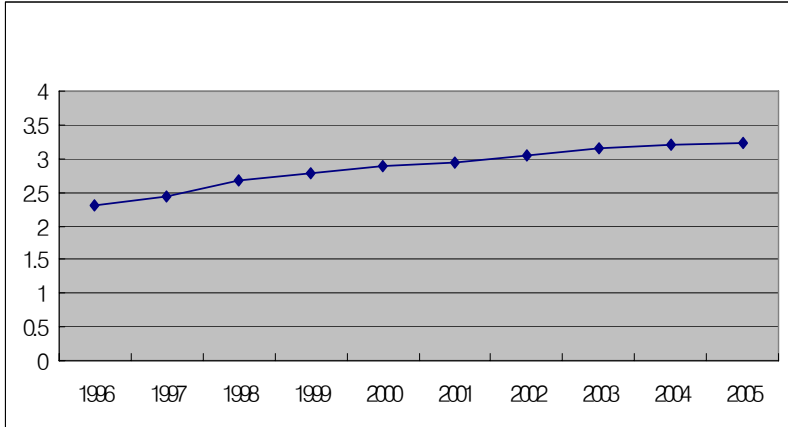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룹임이 증명되었다. 대외일군들은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거의 모두가 남한사정을 잘 아는 집단이 되었다. 특이한 점은 농민이 3.60을 기록하여 농촌에까지 남한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대북 지원 비료가 농촌에 유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계층별로는 핵심계층이 3.73을 기록하여 북한 상층부가 남한 사정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계층은 이미 남한 비디오나 CD 등을 통해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문화전파는 매우 빠르게 되어 있고, 같이 하니까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에서 경제발전은 잘 알지만 민주화 과정을 잘 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북한 대중이 4.19부터 민주화과정, 시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것 같지는 않다(LSG)”, “북한이 남한에 잘 알고 있다면(3점이 넘는다면), 매우 고무적일 것이다(KYH)”, “80년 광주민주항쟁 당시 북한은 그 사건을 TV로 보여줬는데,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될 것 같아서 북한은 다시 그 사건을 TV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1960년대 사진을 흑백으로 해서 보여준다. 노동신문보다는 TV를 통해 더 많은 해외정보를 입수한다(KDS, KKJ)”,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하지만 남한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에서 남한의 경제발전을 알고 있지 민주화 과정은 잘 모른다.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것을 과거에는 숨겼는데 이제는 찾으려고 한다. 남한에 친척이 있으면 대우를 잘 해준다(LDH)”.

(2) 중국변화의 인지도

<그림 II-32> 중국 변화실태에 대한 인지 여부



<표 II-36> 중국 변화실태에 대한 인지 여부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70	2.72	3.00	2.97	3.22	3.23	3.32	3.42	3.50	3.50
여자	2.21	2.38	2.58	2.73	2.75	2.83	2.91	2.96	3.00	3.05
합계	2.31	2.45	2.67	2.79	2.89	2.95	3.05	3.14	3.20	3.22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33	1.67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함경도	2.31	2.48	2.74	2.85	2.97	3.02	3.08	3.15	3.19	3.22
평안도	2.47	2.50	2.50	2.50	2.71	2.69	3.18	3.40	3.50	3.56
황해도	2.86	2.83	3.5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양자강도	2.44	2.38	2.38	2.33	2.33	2.67	2.67	2.75	3.00	3.00
강원도	1.88	1.88	1.86	2.67	3.00	3.00	3.00	3.00		
합계	2.31	2.46	2.68	2.80	2.91	2.97	3.06	3.15	3.21	3.24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2.34	2.45	2.71	2.80	2.85	2.93	3.06	3.15	3.21	3.18
농민	2.33	2.54	2.83	3.17	3.11	3.25	3.14	3.17	3.17	3.40
인테리	2.25	2.31	2.47	2.42	2.82	3.00	3.00	3.13	3.13	3.13
학생	1.89	2.14	2.44	2.71	3.09	3.00	3.00	3.00	3.17	3.17
군관	3.00	3.17	3.17	3.20	3.20	3.25	3.50	3.50	3.50	3.50
하전사	2.50	2.50	2.50	2.75	2.67	3.00	3.00	3.00	3.00	3.00
대외일군	3.0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2.30	2.44	2.68	2.81	2.92	2.99	3.08	3.16	3.22	3.21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계층	2.55	2.73	3.00	3.00	3.20	3.27	3.42	3.58	3.58	3.58
기본계층	2.20	2.35	2.58	2.76	2.87	2.92	3.00	3.10	3.08	3.00
동요계층	2.28	2.39	2.69	2.80	2.88	3.03	3.19	3.28	3.39	3.43
적대계층	2.73	2.76	2.78	2.85	3.00	2.91	3.11	3.29	3.50	3.75
합계	2.32	2.46	2.69	2.82	2.93	3.00	3.12	3.24	3.28	3.28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서 한국전쟁이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초지일관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은 우호가격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하였고, 북한은 중국의 대북 지원을 고려하여 각종 경제계획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 북한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부터는 대북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체제 붕괴를 막았다. 현재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10월 15일 UN안보리의 대북경제제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극적인 대북 경제봉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1978년 이후 지속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사회주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대·중 인식이 나빠졌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지만 중국은 자국이익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적 관계로 인해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는 적대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중국과는 선린우호관계를 고수하였고, 중국인의 북한방문도 심하게 단속하지 않는 등 북한의 대·중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상호교류협력은 중국의 문물과 정보가 가감없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 주민들은 ‘중국 Dream’을 안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해야 잘 산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정보나 중국제품들은 중국 상인이나 화교, 조선족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적법하게 북한에 전해지고, 북한주민들은

중국제나 조선족 노래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남한노래 조차도 '계몽가요'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북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물론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북·중간 정치외교적 관계가 나빠지고는 있지만 경제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북한에 유입될 경우 체제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열악한 경제사정 때문에 어쩔 수없이 북·중 경제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다. <그림 II-32>와 <표 II-36>에서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3.23정도로 나타났듯이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중국처럼 개혁·개방해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북한내 생필품의 90%정도는 중국산이므로 중국의 발전상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것이다. 북한주민의 중국관을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에 따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3.50, 여자가 3.05를 기록하여 남자가 중국소식을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들이 직장생활이나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보를 많이 습득한다는 증거이고, 또는 중국과의 정상적·비정상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터득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예상과 달리 평안도가 3.56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안도는 신의주를 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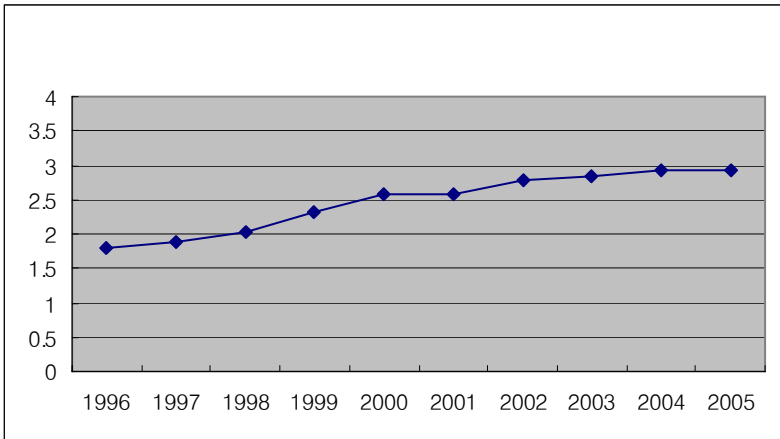
셋째, 직업별로는 역시 대외일군이 4.00으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당연하지만 중국을 통한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어떤 집단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중국을 접하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 적대계층이 3.75를 기록하였다. 이는 약간의 외의 결과로서 핵심계층보다 많은 이유는 적대계층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직접 중국과의 거래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고위 탈북자들 모두가 중국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반응이었다. “매우 잘 알 것이다(PSJ, JNS, LSG, KKJ, KDS, CJS)”, “남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공산품 80%~90% 정도가 중국산이다(KYH)”.

(3) 해외정보 인지도

<그림 II-33>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인지도



<표 II-37>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인지도

성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08	2.16	2.30	2.46	2.62	2.74	2.88	2.97	2.97	2.90
여자	1.72	1.81	1.96	2.28	2.58	2.64	2.72	2.79	2.90	2.93
합계	1.79	1.88	2.04	2.33	2.59	2.67	2.77	2.85	2.93	2.92

거주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양	1.67	1.67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함경도	1.76	1.85	2.05	2.33	2.60	2.64	2.74	2.83	2.90	2.90
평안도	1.86	1.81	1.94	2.07	2.43	2.69	3.00	2.90	2.90	2.78
황해도	2.86	3.00	3.25	3.75	3.50	3.50	3.50	3.50	3.50	4.00
양자강도	2.22	2.22	2.33	2.43	2.33	2.60	2.60	3.33	3.33	3.33
강원도	1.43	1.43	1.33	2.00	2.50	3.00		2.00		
합계	1.80	1.88	2.05	2.34	2.58	2.66	2.78	2.86	2.93	2.92

직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자	1.74	1.80	2.02	2.28	2.50	2.54	2.67	2.79	2.82	2.73
농민	1.78	1.87	2.00	2.33	2.20	2.38	2.43	2.67	2.83	3.00
인테리	1.94	2.00	2.00	2.25	2.55	2.64	2.80	2.75	3.00	3.00
학생	1.87	2.00	2.14	2.59	3.00	3.20	3.22	3.43	3.43	3.43
군관	2.50	2.50	2.50	2.40	2.40	2.75	2.75	2.75	2.75	2.75
하전사	2.50	2.50	2.50	2.75	3.00	3.50	3.50	3.50	3.50	3.50
대외일군	2.00	2.00	2.00	2.00	3.00	4.00	4.00	4.00	4.00	4.00
합계	1.81	1.89	2.06	2.34	2.55	2.64	2.75	2.86	2.92	2.89

계층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핵심계층	1.94	2.03	2.07	2.47	2.93	3.00	3.27	3.45	3.64	3.64
기본계층	1.70	1.76	1.96	2.32	2.40	2.48	2.53	2.67	2.68	2.61
동요계층	1.87	1.96	2.19	2.34	2.88	2.79	2.87	2.88	2.92	2.88
적대계층	2.07	2.10	2.22	2.38	2.57	2.80	3.25	3.17	3.17	3.00
합계	1.82	1.88	2.06	2.35	2.62	2.67	2.79	2.88	2.92	2.89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외부와의 정보차단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방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신문, 잡지, 방송에서는 서방세계에 관한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고 있고, 서방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다. 그리고 해외방문자들도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북한주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방문객들로부터 직접 서방소식을 듣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난은 해외정보 유입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중국이나 남한을 통한 해외소식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이나 남한의 가요나 드라마, 영화 등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해외정보 유입통제가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해외정보 유입이 향후 북한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구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다. <그림 II-33>과 <표 II-37>에서 2.91정도로 나타났듯이 북한주민들의 해외정보 취득 정도는 남한에 대한 것보다는 낮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알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것이 정부의 정보차단 효과이다. 해외정보 취득과 관련한 설문결과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2.90, 여자가 2.93으로서 2005년을 기점으로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통제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자도 외부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민반을 통한 사회통제가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 황해도가 4.00으로서 가장 높았고, 양강도·자강도가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내륙지방인 곳에서 외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사회 전체가 외부정보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경제난 이후,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중국이나 남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서방정보까지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이것이 김정일 정권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셋째, 직업별로는 대외일군이 4.00을 기록하여 서방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하전사가 3.50으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물론 특수한 직책을 맡는 경우이기 때문일 것이지만 이제 군대에도 해외정보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선군정치하에서 군부의 대서방태도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넷째, 계층별로는 핵심군중이 3.64를 기록하여 북한 상층부 사람들이 해외정보를 보다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부 사람들은 외화획득 기회가 많아 외화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나 구라파가 잘 산다는 것은 이미 상

식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당연히 중국 보다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안다. 일본 물품들이 많이 반입되어 있고,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도 있으며, 일본 친척이 와서 돈을 건네거나, 집을 지어준다든가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북한 인민들은 미국은 잘 몰라도 일본은 매우 잘 안다 (LSG, PSJ, JNS, KDS)”.

(4) 소결론

정보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나 남한 소식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것이 싫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외부소식들이 북한 내부 깊숙이 퍼져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남한소식이 유입되고 남한 문화까지 유행하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다.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 정부는 물론 NGO까지 받아들여야 하고, 반대로 이를 저지한다면 경제난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서방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는 않고 있고, 핵문제로 인한 미국·일본의 대북 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체제경쟁상대인 남한의 정치경제적 우월성이 지속적으로 알려진다면 북한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대북 심리전에 대해 항의하고,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사상이완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다.

나. 안보자원의 확보

한반도에는 원유나 천연가스 등 매우 중요한 기초자원이 생산되지 않는다. 특히 원유는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남북한 모두 전량 산유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인해 남한처럼 대량으로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에너지난으로 인해 전력난이 발생하고 공장, 철도 등 산업시설의 작동이 중지되며, 가정용 전기까지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안보자원의 부족은 체제유지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50만톤 정도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시 당장 석유난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가능성이 낮지만, 만일 10월 15일의 UN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된다면 북한경제는 하루아침에 마비되고 말 것이다.

아울러 식량도 매년 100만톤 이상씩 부족하여 북한주민들은 최소한의 열량만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키가 작아지고,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의 불법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체제의 견고성이 약해지고 있다.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치외교적 자주성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북한은 2001년에 등장한 미국 부시 정부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는 김정일을 ‘폭군’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주민들을 굶주려 죽이는 정권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김정일 정권 교체(regime change)’나 ‘체제변형(system transformation)’이라는 대북 전략을 낳게 했다.

북한은 이미 1987년 이후부터 ‘테러국가’, ‘테러지원국가’, ‘불량국가’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남한에 대한 테러는 북한을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바세나르 협정에 의거 서방세계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인권최빈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각종 자유가 봉쇄되고 있고, 반체제인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 비법적인 방법에 의한 처벌, 형식적 재판, 아사자속출 등은 북한내에 최소한의 인도적인 장치도 없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전국적으로 20여개에 이르는 강제수용소에 약 20만명 정도의 각종 정치사범이 열악한 처우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무재판으로 처벌되고 있다. 일반주민들도 각종 자유를 제약당하고, 1인 지배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를 피하기 위한 탈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북·중간, 남·북간 큰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³⁴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06년 UN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을 만

³⁴ 북한인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참조.

들어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도 2004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탈북자들을 직접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인권문제와 대북 경제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과 비교적 관계가 좋은 EU에 까지 번지고 있다. EU도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인권문제로 인해 세계적 차원의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인권분제는 아니지만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는 등 국제적 고립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북한 사회주의체제 내구력 평가 및 전망

1. 종합 평가

<표 III-1> 각 항목별 위기 지수

지표	항 목	점 수	평 균
이념	문 1) 일상생활에서 구속력	3.05	3.47
	문 2) 집단주의 명제	3.74	
	문 3)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3.41	
	문 3-1) 김정일 자식으로의 후계	3.56	
	문 4) 김정일 지도자 자질	3.43	
	문 5) 남북한 체제비교	3.64	
엘리트	문 6) 미래에 대한 희망	3.63	2.77
	문 7)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유무	3.63	
	문 8)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3.50	
	문 9)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3.11	
	문 10) 간부의 지위에 대한 금지감	2.77	
	문 11) 간부의 부정부패 정도	3.61	
	문 12) 간부간 집단갈등 유무	2.84	
	문 13) 기관간 갈등 유무	2.67	
	문 14) 연고주의 존재 유무	2.82	
	문 15) 상부지시의 전달 정도	1.87	
	문 16) 규칙 변동 실태	2.93	
경제	문 17) 비공식부문의 점유 정도	3.59	3.24
	문 18) 식생활 정도	2.87	
	문 19) 주거 및 생필품 여건	2.77	
	GNI증감추이	*3.50	
	대외무역	*3.50	
통제	문 20) 주민통제 정도	2.29	2.72
	문 21) 강제기구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정도	2.50	
	문 22) 여행빈도	2.47	
	문 23) 불만 표출 정도	2.56	
	문 24) 체제비판 세력 존재 여부	2.59	
	문 25) 최고위층 비판 행위 존재 여부	2.59	
	문 26) 자본주의적 문화 존재 여부	3.32	
	문 27) 종교활동 존재 유무	1.70	
	문 27-1) 무속활동 존재 유무	3.03	
	문 28)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존재 유무	2.51	
대외관계	문 29) 남한변화의 인지도	3.30	3.39
	문 30) 중국변화의 인지도	3.22	
	문 31)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인지도	2.92	
	곡물 및 원유 도입량	*3.75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	*3.80	

* 북한의 내구력 지표 중 ① GNP, ②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③ 탈북자 증감, ④ 안보자원의 확보, ⑤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등은 새터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닌 일반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내구력 점수도 필자가 임의로 부여함.

위의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위기수준은 이념 3.47, 엘리트 2.77, 경제 3.24, 통제 2.72, 대외 3.39 등으로 나타났다. 이념의 동요가 가장 심하고, 대외관계가 매우 약화된 상태이며, 경제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통제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 엘리트의 통합력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김정일 정권의 붕괴요인은 이념 약화, 경제난 지속, 대외관계 악화 등이고, 정권 유지 요인은 권력엘리트의 결집과 강제기구의 통제력이다. 이를 기초로 종합판단을 해 보았을 때 이념이 흔들리고, 해외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엘리트체계의 공고화와 사회통제가 지속되는 한 김정일 정권이 쉽게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엘리트내에 대안세력이 없다는 점이 김정일 정권 유지의 강점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공식이념인 주체사상이 내면화되지 않고, 체제유지의 핵심 중 하나인 지도자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체제와의 비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집단주의 정신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체제 유지의 중심가치 체제가 붕괴되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념적, 정치적 정통성 확립을 위해 주민교양과 강제를 혼용하여 주민을 통합하려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목표를 쉽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주체사상의 변용인 ‘붉은기 정신’, ‘선군사상’ 등을 내세워 이념적 통합을 시도하는 한편, 가장 잘 조직화되고 충성심이 강한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념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어느 정도 더 지탱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 여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곤경이나 비참함을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체념과 자포자기가 만연하여 체제가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설문결과 당에서 주어진 원칙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가난과 절망만 남을 뿐 아무 희망도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인해 일터에서 제 때에, 제 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한층 제고된 상태이다.

셋째, 공식이념인 자주에 대한 긍지도 약했다. 북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를 주장하고 주민들도 이를 생활지표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는 김일성·김정일 체제 유지의 통치담론으로만 활용되었을 뿐 주민들의 실제생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주’에 대한 긍지도 갖지 못하고 있고, ‘자주’보다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자주성’이 체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파기되어야 할 원칙으로 주민들은 간주하고 있다.

넷째, 북한 간부들은 자긍심은 있었으나 거의 부패한 상태였다. 간부는 국가의 간성으로서 체제유지의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북한간부들은 충원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하기 때문에 자질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하위관료들이 경제난 때문에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 관료들이 자공심은 있지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철직당하고,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견고성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엘리트간 정치적 갈등은 없었으나 기관간, 개인간 갈등은 상당정도였다. 일반적으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중폭동과 그에 동조하는 권력엘리트의 존재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권력엘리트의 분열이 발생해야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경제난과 이로 인한 수십만명의 아사자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뚜렷한 권력엘리트간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일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미하지만 부처간 마찰이나 범법자 처벌을 중심으로 보위부와 보안원(안전원)간 의견차이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권력교체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연고주의 또한 승진이나 직장마련 정도에만 통하는 상황이지 파벌화된 것 같지는 않다.

여섯째, 상부지시의 침투력은 높았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실천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상부지시가 최일선 단위까지 잘 침투되느냐의 여부는 권력장악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김정일의 ‘말씀’이나 당, 내각 등의 지시는 잘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전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지시가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는 것은 별개인 것 같다. 경제난으로 인해 각종 지시가 지시로만 끝나고 이행은 형식적이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내에 형식주의가 증대되고 있고, 허위보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것은 김정일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국가문제가 허위정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북한은 종종 핵문제나 북미관계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상황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경제문제를 비롯한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오판들이 형식적인 지시와 감독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보고나 과장·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곱째, 경제난이 심했으나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였다.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즉 탈북자, 인권, 핵 등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제난 때문에 사회와 가정이 파괴되고,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경제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난으로 인해 정권이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심성이 파괴되고, 전투적으로 변했다. 심지어 유전자 변형까지 이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기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은 폭발직전까지 갔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활성화하고, 개인장사를 묵인 내지는 합법화하였다. 김정일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2000년에는 남한과의 정상회담까지 개최하였고, 중국과의 불법적인 거래도 묵인하고, 식량구입 목적이라면 불법적인 이동이나 국경무역까지 허락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경제난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경제난 때문에 북한주민들

이 김정일을 거부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여덟째, 사회통제는 잘 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각종 공안기구, 인민반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있어서 탈북자수도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권유지를 위협할 정도의 사회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새터민들도 북한체제 유지 이유를 사회통제라고 할 정도로 정치·경제·사회적 통제 장치는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하위관료들이 자신의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 부패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뼈라나 낙서외에는 정치적 집회나 폭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회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끊임없이 유입되는 외부정보로 인해 주민들이 언제까지 통제에 순응할 지는 미지수이다.

아홉째, 간헐적인 정치적 반대 구호는 있었으나 그것이 집단화되지는 못하였다. 정치적 정당성 보다는 철저한 강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북한에서 반체제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록 간헐적인 김정일 비판 낙서나 뼈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체제 운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새터민들도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로 철저한 통제를 들고 있다. 물론 정권유지의 최첨병이라 할 수 있는 보안원이나 보위부원들이 부패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권비판까지 용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김정일정권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들어 남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외부정보 유입이 확대되고,

자본주의적 문화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비판 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비판적인 말이나 행동이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최소한 신뢰할만한 친구나 동료 간에는 보다 비판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것 같다. 향후 이러한 현상이 더 증가할 지 아니면 더 감소할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열째, 남한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주의 문화 유입이 컸으나 그것이 ‘반문화’ 현상까지는 성장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정권 및 체제유지를 위해 외부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교의 대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정치적 혼란의 맹아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외부세계를 정확히 알 지 못하고 있고, 비록 안다할지라도 외부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지킬만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비록 경제난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 원인이 미국이나 외부의 봉쇄에 의한 것이지 김정일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내부 책임이라 할지라도 농업이나 공업담당 관료들의 잘못이라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봉쇄만 풀리면 곧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국가에서 금지하는 종교활동을 굳이 모험을 해가면서까지 선택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다만 사주나 관상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유행하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어서 간부들까지도 본인의 장래를 당장 확

인하기 위해 이러한 ‘반사회주의 문화’에 의존하는 것 같다. 연고주의 또한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 같다. 그것이 파벌로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지상정으로 학연, 지연에 따라 문제 해결 여부가 결정이 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북한의 부모들이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을 보내려는 이유도 이러한 연유일 것이다.

열한번째, 정보통제는 잘 되고 있었으나 식량난 이후 외부 정보의 유입속도가 빨랐다. 정보통제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나 남한 소식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것이 싫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외부소식들이 북한내부 깊숙이 퍼져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남한소식이 유입되고 CD를 통해 남한 문화까지 퍼지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다.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 정부는 물론 NGO까지 받아들여야 하고, 반대로 이를 저지한다면 경제난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서방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는 않고 있고, 핵문제로 인한 미국·일본의 대북 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체제경쟁 상대인 남한의 정치경제적 우월성이 지속적으로 알려진다면 북한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대북 심리전에 대해 항의하고,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북핵실험도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으로 인한 사상이완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열두번째, 북한의 안보자원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북핵실험 이후 국제적 봉쇄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의 취약성을 그대로 들어낸 것으로서 향후 이것이 김정일 정권 유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예상한 바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북한체제는 상당기간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외정보가 계속 유입될 경우 북한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정보 및 사회통제는 개방과 함께 적절히 배합될 것이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서 김정일 정권은 주체주의의 고수냐, 국제사회로의 편입이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2. 전망

북한체제는 <표 III-2>에서 보듯이 외부정보 차단, 사상교육, 사회통제 등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만일 철저한 사상 및 물리적 통제가 소멸되면 김정일 정권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현재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인민반, 당조직, 군부의 통제 등을 통해 UN을 필두로 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밀봉(seal)’에 가까운 대북 경제제재가 없는 한 1년~2년내에 붕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이 대북 ‘밀봉’을 할 경우 북한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황을 타개하려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무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북 ‘밀봉’은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표 III-2> 김정일 정권 유지 이유

	빈도	퍼센트
사상교육 강화	120	22.4
선군정치 강화	85	15.9
당 간부의 지도력	33	6.2
사회통제 강화	139	26.0
외부정보 차단	149	27.9
기타	9	1.6
합계	535	100

* 복수응답처리

새터민들은 <표 III-3>에서 보듯이 현재대로라면 김정일 정권이 5년~10년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것은 지난 10월 15일 UN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결의에 따른 남한 및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은 더 짧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완벽한’ 대북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정일 정권은 새터민들의 예상대로 최대 10년은 버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향후 북미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극적으로 마련되어 주변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본격화된다면 더욱 장기간 존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 고위 탈북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고 북한이 10년 내외의 시점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저도 그랬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20년이 지나도 붕괴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LSG)”, “김정일은 아직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 김정일은 자기가 승계했듯이, 부자

승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부자승계를 생각했다면 벌써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마 북한체제는 5년~10년 유지될 것인데, 김정일이 죽어서 북한체제가 변할 것이다(CJS)”, “저도 5년~10년으로 예상한다(KDS)”, “김정일에 대한 물리적 제거 없이는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체제의 유지기한이 10년~15년 정도라고 본다. 또한 중국의 개입가능성에 따라 북한체제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LDH)”, “개인적으로는 10년 내지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CJH)”, “김정일 죽음과 연관해서 5년 내지 10년으로 본다(CCH, HSI)”.

<표 III-3> 김정일 정권 유지 기간

	빈도	퍼센트
5년 이하	55	22.9
5년~10년	115	47.9
10년~15년	38	15.8
15년~20년	19	7.9
20년~30년	3	1.7
30년 이상	9	3.8
합계	239	100

한편, 북한 사회주의 체제 붕괴문제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 이 기간은 새터민들이 김정일의 사망과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동일시 한데서 나온 응답이라는 점에서 만일 ‘김정일=북한체제’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김정일 사후 군부가 안정적으로 김정일 이후를 이끌어 간다면 북한 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군부 및 통제기구에 의한 사회통제가 지속된다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이후 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습관적으로 권력에 복종하는 경향성이 있고, 아직도 ‘군·사·부일체’라는 가부장제적 문화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는 경제난 이후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 문화가 유입되고 있고, 더불어 외부정보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상의식, 체제에 대한 긍지 등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더구나 하부관료들의 부패는 난로 증가하고 있고, 외부의 개방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언제까지 사회통제가 유효성을 발휘하고, 주민들이 가난을 참고 견딜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서는 김정일 정권, 북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3개범위로 나누어 그 장래를 전망해 보려 한다.

첫째, 김정일 정권의 장래이다. 우선 자연사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김정일 정권이 종료되고, 세습이나 군부 후계자에 의한 권력승계가 이루어 질 것이다. 만일 후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으로 민중혁명이나 쿠데타 또는 궁정혁명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민중혁명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중혁명을 이끌 대안적 지도자가 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어떤 지역에서 민중폭동이 발생하더라도 북한군부에 의해 강경 진압될 것이다. 다음으로 쿠데타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움직임은 거의 실시간으로 군보위사령부에 의해 김정일에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궁정혁명 가능성인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만일 대북경제 ‘밀봉’이 확립되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경우

민중 봉기가 발생할 것이고, 이의 진압을 둘러싸고 권력엘리트내에서 강·온간 대립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측근에 의한 궁정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북핵문제로 인해 북미간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남한 및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이다.

둘째, 북한 우리 식 사회주의 체제 붕괴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중국식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화하는 것이다. 외부 압박이 심할 경우, 민중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고 그 정권이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하거나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는 쿠데타세력이 이를 도입할 수도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극적 전환’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핵문제의 북미간 극적타결을 통한 ‘북한식 개혁개방’ 노선 도입이다. 즉, 민중혁명, 군부쿠데타 등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고, 김정일 스스로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하여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북미간 무력충돌로 인해 김정일 정권과 북한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친중 정권 등장과 개방적 사회주의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자체의 소멸이다. 그 유형은 ① 민중봉기에 의한 김정일 정권 붕괴와 함께 국가가 ‘즉시’ 소멸되는 경우, ② 민중봉기에 의한 김정일 정권 붕괴와 함께 국가가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경우, ③ 외부 힘에 의해 국가가 즉시 소멸되는 경우, ④ 외부 힘에 의한 점진적 국가 소멸의 경우 등이다. 현재로서는 내부 힘에 의해서건 외부 무력에 의해서건

북한국가 소멸 가능성은 낮다. 북한내에는 혁명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너무 많은 희생이 수반될 대북 무력공격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내부민주화 세력이 양성되어 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세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지도상에서 소멸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김정일 정권, 북한식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당장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변 모든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여 ‘밀봉’을 할 경우에만 북한 체제내에 변화의 맹아가 약간 싹틀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모든 국가들이 봉쇄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북한주민들은 그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 돌릴 뿐, 김정일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 많은 민간희생자만 발생할 뿐 김정일 정권·북한식 사회주의체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등을 변경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을 자본주의식으로 변화시켜 민주화의 씨앗이 배태되도록 만드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서울: 박영사, 2006.
-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전현준.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_____.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정영태. 『북한의 당·군·민관계와 체제안정성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지식공작소, 1996.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6).
- Tilly, Charles.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78.

Talcott Parsons.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논문〉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월간조선사』
(2001. 9).

Easton, David.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er Vol. 3 (1973).

Kim, Sung Chull.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sponsored by Korean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 Research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Seoul, May 17~18,
1996.

Wolf, Jr Charles · Akramov, Kamil. *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기타자료〉

『로동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중앙일보』.

『평양방송』.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Daily NK』.

새터민들의 인터뷰.

『김일성 헌법(1998년 9월 5일 개정)』 63조.

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CSIS,
August. 2002.

Intelligence Report. CIA, 21. January, 1998.

안 내 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시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원』은 2006년도 연구사업으로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선생님의 고견을 알고자 하오니 적극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체제가 평가되고, 대북 및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가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숨기지 마시고 솔직히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받느라 피곤하실 텐데도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6년 7월 일

통일연구원 허문영·전현준 드림

면접 체크리스트

1. 당신의 동료들은 일상생활에서 김일성주의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였습니까?

번호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립유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7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철저히 원리에 따라 생활함										
2) 대체로 원리에 따라 생활함										
3) 대체로 다른 생활을 함										
4) 철저히 다른 생활을 함										

1-1. 그렇지 않았다면 특히 어떤 점에서 ?

()

2. 당신의 동료들은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까?

번호	1986 (식량난 이후)	1987	1988 (국립유원장 체제 출범이후)	1989	2000 (남북정상회 담 이후)	2001	2002 (7.7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집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함										
2) 집단을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함										
3) 내또는 가족을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함										
4) 내또는 가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함										

2-1.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

4. 당신의 동료들은 김정일의 지도자 자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개 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2)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함											
3)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함											
4)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함											

5. 당신의 동료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 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북한식 사회주의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함											
2) 북한식 사회주의가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함											
3)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함											
4)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함											

5-1.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8. 당신의 동료들은 김일성주의의 자주성 원칙(정치·외교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등)에 대해 ‘공지’를 가졌습니까?

번호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의원장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공지를 가짐										
2) 대체로 공지를 가진 편임										
3) 대체로 공지를 가지지 못한 편임										
4) 전혀 공지를 가지지 못함										

9. 당신의 동료들은 김일성주의가 내세우는 자주성(사상, 경제, 국방, 정치 등)이 북한 체제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바지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번호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의원장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 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높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함										
2) 대체로 이바지했다고 생각함										
3) 대체로 이바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4) 거의 이바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9-1. 그렇지 않았다면 특히 어떤 점에서?

()

12. 당신의 일터 내 간부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의견충돌이 아닌 집단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7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거의 없었음											
2) 별로 없었음											
3) 약간 있었음											
4) 매우 심했음											

12-1. 만일 있었다면 특히 어떤 점에서?

()

13. 당신이 속해 있던 기관이 노동당, 정부기관, 군대, 안전부, 보위부 등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떤 편이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7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갈등이 거의 없었음											
2) 갈등이 별로 없었음											
3) 갈등이 약간 있었음											
4) 갈등이 매우 심했음											

13-1.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

14. 당신 일터의 간부들 사이에서 학교 선후배, 출신지역 또는 친인척 관계에 따른 끼리끼리 문침 현상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1986 (식량난 이후)	1987	1988 (국방위원장체제 출범이후)	198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4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거의 없었음										
2) 별로 없었음										
3) 약간 있었음										
4) 매우 강했음										

15. 당신 일터에서 김정일과 당의 지시나 노선이 말단 단위(협동농장, 직장, 기업소, 소대, 분대 등)까지 어느 정도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1986 (식량난 이후)	1987	1988 (국방위원장체제 출범이후)	198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4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잘 전달되었음										
2) 대체로 잘 전달되었음										
3) 대체로 전달되지 않았음										
4) 거의 전달되지 않았음										

15-1.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6. 당신의 일터에서는 말단 단위(협동농장, 직장, 기업소, 소대, 분대 등)들이 생산 또는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 (자원분배, 조직관리, 도급제, 독립채산제 등)에 있어서 규칙을 어느 정도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년도	198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거의 규칙을 잘 따랐음										
2)	대체로 규칙을 따랐음										
3)	대체로 변칙 운용을 하였음										
4)	거의 변칙 운용을 하였음										

17. 당신 동료들의 경제생활에서 공식 부문(국가에서 주는 월급 및 배급)과 비공식 부문(장사, 텃밭 소득 포함) 소득 중 어떤 부분이 더 컸습니까?

번호	년도	198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공식 부문이 훨씬 더 컸음										
2)	공식 부문이 약간 더 컸음										
3)	비공식 부문이 약간 더 컸음										
4)	비공식 부문이 훨씬 더 컸음										

17-1. 월급(생활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17-2. 비공식적인 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18. 당신 동료들의 식생활은 양과 질에서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비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좋았음											
2) 대체로 좋았음											
3) 대체로 나빴음											
4) 매우 나빴음											

19. 당신 동료들의 신발, 의복, 주거지 등 생활여건은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비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좋았음											
2) 대체로 좋았음											
3) 대체로 나빴음											
4) 매우 나빴음											

20. 당신은 인민보안성 또는 국가보위부에 의한 주민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잘 유지되었음											
2) 대체로 유지되었음											
3) 대체로 유지 안되었음											
4) 거의 유지 안되었음											

20-1. 주민통제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

21. 당신은 부정·부패 및 범법행위에 대한 인민보안성 또는 국가보위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잘 유지되었음											
2) 대체로 유지되었음											
3) 대체로 유지 안되었음											
4) 거의 유지 안되었음											

21-1. 통제가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 당신 동료들은 얼마나 자주 여행을 했습니까? (공식 통행증 소유여부에 상관없습니다.)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매우 제한됨											
2) 대체로 제한된 편											
3) 대체로 빈번한 편											
4) 매우 빈번함											

22-1. 주로 어떤 목적의 여행이었습니까?

()

23. 당신 동료들은 간부들에게 식량배급, 여행, 노동조건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을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거의 표출할 수 없었음											
2) 대체로 표출할 수 없었음											
3) 약간 표출할 수 있었음											
4)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음											

23-1. 불만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24. 당신은 북한에 체제비판 세력이 비공개적이라도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상상할 수 없었음											
2) 대체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음											
3) 대체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4) 분명히 있었음											

24-1. 비공개적인 체제비판 세력이 있다면, 어떤 사회계층 또는 직업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 당신은 구체적인 체제비판 행위, 예를 들어 김일성 및 김정일 비판의 뼈라 또는 낙서 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상상할 수 없었음											
2) 대체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음											
3) 대체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4) 분명히 있었음											

25-1. 체제비판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27-1. 당신은 북한에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무속종교 활동(검 보는 것, 시주 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6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영위장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7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거의 없었다고 생각함											
2) 대체로 없었다고 생각함											
3) 약간 있었다고 생각함											
4) 매우 많았다고 생각함											

28. 당신은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학교 선후배, 출신지역 또는 친인척 관계에 바탕한 사회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했
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6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영위장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7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 거의 불가능하였음											
2) 대체로 불가능하였음											
3) 대체로 가능하였음											
4) 충분히 가능하였음											

29. 당신의 동료들은 남한의 민주화 과정, 경제발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2003	2004	2005
	1996 (식량난 이후)										
1) 거의 모르고 있었음											
2) 잘 모르고 있었음											
3) 대체로 알고 있었음											
4) 매우 잘 알고 있었음											

29-1. 특히 어떤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

29-2.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

30. 당신의 동료들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 성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7경제관리 개선조제이후)	2003	2004	2005
1) 거의 모르고 있었음											
2) 잘 모르고 있었음											
3) 대체로 알고 있었음											
4) 매우 잘 알고 있었음											

30-1.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

31. 당신의 동료들은 미국·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식량난 이후)	1997	1998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1999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	2002 (7.7경제관리 개선조제이후)	2003	2004	2005
1) 거의 모르고 있었음											
2) 잘 모르고 있었음											
3) 대체로 알고 있었음											
4) 매우 잘 알고 있었음											

<체제붕괴 방식과 관련된 질문>

32. 당신은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우리식 사회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사상교육의 강화, 김일성주의 교양
 - 2) 선군정치 강화
 - 3) 당 간부의 지도력
 - 4) 사회통제 강화
 - 5) 외부정보 차단
 - 6) 기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33. 당신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5년 이하
 - 2) 5~10년
 - 3) 10~15년
 - 4) 15~20년
 - 5) 20~30년
 - 6) 30년 이상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34. 당신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다면 어떤 이유로 붕괴할 것으로 볼니까?
()
35. 당신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높다
 - 2) 높은 편이다
 - 3) 별로 없다
 - 4) 거의 없다

36. 당신은 현재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와 다른 형태의 체제가 들어설 뿐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는 계속 존속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남북한 통일로 이어짐

3) 기타

2) 다른 체제가 들어섬

성명:

37. 당신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38. 당신의 나이 및 생년월일은?

39. 당신은 언제 북한을 떠나셨습니까? (년 월 일)

40. 당신은 언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까? (년 월)

41. 당신이 북한을 떠난 후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북한지역에서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1)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음

2)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접할 수 있었음

3) 거의 접할 수 없었음.

42. 당신의 탈북동기는?

43. 당신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 | | |
|----------|----------|---------|
| 1) 평양 | 2) 남포 | 3) 개성 |
| 4) 평안남도 | 5) 평안북도 | 6) 함경남도 |
| 7) 함경북도 | 8) 자강도 | 9) 양강도 |
| 10) 황해남도 | 11) 황해북도 | 12) 강원도 |

44. 당신의 출생지는 어디였습니까? (도, 군)

- | | | | |
|---------|----------|----------|---------|
| 1) 평양 | 2) 남포 | 3) 개성 | 4) 평안남도 |
| 5) 평안북도 | 6) 함경남도 | 7) 함경북도 | 8) 자강도 |
| 9) 양강도 | 10) 황해남도 | 11) 황해북도 | 12) 강원도 |
| 13) 일본 | 14) 중국 | | |

45.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학교 이름 포함할 것)

- | | | | |
|--------|---------|----------|---------|
| 1) 대학교 | 2) 전문학교 | 3) 고등중학교 | 4) 인민학교 |
|--------|---------|----------|---------|

46. 당신이 북한에서 가진 주된 직업은? (간단한 약력 포함)

- | | | | |
|------------|-------------|-------------|-----------|
| 1) 노동자 | 2) 농민 | 3) 인테리 | 4) 학생(대학) |
| 5) 학생(고등중) | 6) 군인(고급군관) | 7) 군인(하급군관) | |
| 8) 군인(하전사) | 9) 외교관 | 10) 대남공작원 | |
| 11) 대외경제일군 | 12) 외화벌이일군 | | |

47. 당신은 다음 중 어떤 계층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 | | | | |
|---------|---------|---------|---------|
| 1) 핵심군중 | 2) 기본군중 | 3) 동요계층 | 4) 적대계층 |
|---------|---------|---------|---------|

48. 당신은 당원이었습니까?

- | | | |
|-------|---------|--------|
| 1) 당원 | 2) 후보당원 | 3) 비당원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흙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발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 · 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 · 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 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 정세 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 정책연구 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p>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200 년 월 일</p> <p>신청인 (인)</p>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